

2026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성과관리 시행계획, 2026.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의안·정책관리팀 (02-2110-1457)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목 차

I.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6년도 정책 추진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3
2. 2026년도 정책 추진방향	14
II.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21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반현황	23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25
III. 세부 추진계획	30
전략목표 I	32
전략목표 II	80
전략목표 III	136
전략목표 IV	162
IV. 환류 등 관련계획	199
1. 이행상황 점검계획	201
2. 평가결과 환류체계	204
【붙임】	
1-1. 성과지표 현황	208
1-2. 관리과제와 국정과제·부처업무계획 등 연계 현황	218

I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6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2. 2026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 미디어의 발전 기반 마련

- 공영방송 이사 구성 및 사장 선임절차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3법 개정* 지원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 및 독립성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 방송법 공포('25.8.26.), 방문진법·EBS법 공포('25.9.9.)

- 'EBS 중학프리미엄' 강좌*(인당 연 71만 원, 온라인 유료)를 전면 무료화('23.7월)하여 연간 4,300억 원 규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 이용자 수는 34배 증가: '22년 14,937명 → '23년 229,089명 → '24년 505,000명

※ '25년부터는 교육부가 전액 지원

□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실시

- 재허가·재승인 사전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상파 재허가 세부계획을 마련하였고, 엄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24년 종편·보도PP(3개사) 재승인을 실시하였습니다.

□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

- 전국 광역시·도별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확충('25년 기준 12개 → '28년 까지 4개 추가구축 목표)하고 미디어 나눔버스를 전국 권역별로 확대 배치·운영**하여 전 국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 부산('05년), 광주('07년), 강원·대전·인천('14년), 서울('15년), 울산('16년), 경기('19년), 충북·세종('20년), 경남·대구('23년)

** 미디어나눔버스 운영횟수('23년 483회 → '24년 850회 → '25년 972회)

권역	차량 구분			합계
	대형 (음향/영상)	소형		
		음향 스튜디오	영상 스튜디오	
수도권	경기	-	인천	2대
경상권	-	부산	울산	2대
호남권	-	-	광주	1대
중부권	대전	충북	-	2대
강원권	-	강원	-	1대

○ 유아기·청소년기·청장년기·노년기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지속 확대하여 교육 참여인원이 증가*하였으며, 수강생의 미디어 역량이 향상('25년 목표 7.0% 대비 0.47%p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 '23년 43.3만 명 → '24년 49.6만 명 → '25년 59.9만 명

○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며, 이를 악용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대상 미디어교육에 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을 운영('25년 421회*)하여 안전한 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 청소년 미디어교육에 딥페이크 범죄 예방 관련 교육 의무 편성(253개교) 및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예방 특강 신설(168회 운영) 등

○ 생성형AI 활용, 딥페이크 역기능 증가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발맞춰 온라인 통합플랫폼 '미디어플러스' 운영 및 강좌를 다양화*하고, 신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미디어교육 보편화에 기여하였습니다.

* 온라인 VOD 강좌 수: '23년 236개 → '24년 250개 → '25년 279개

□ 지역 미디어 산업 활성화

○ 지역방송 지역성·다양성 강화를 위해 ▲지역밀착형, ▲경쟁력 강화, ▲신유형 콘텐츠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19개사 36개 프로그램, 36억 원)하여 지역 콘텐츠의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 해외 콘텐츠 마켓 참가 등으로 지역 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OTT 플랫폼에 대한 지역 콘텐츠 제공을 확대하여, 시청자 점점 확대 및 재정 안정성 강화('25년 판매실적 9.5억 원)에 기여하였습니다.

□ 재난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 재난방송 의무사업자(144개사*)의 재난방송 상황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AI 기능을 활용한 재난방송 감지 시스템으로 재난방송 여부를 실시간 파악하여 재난방송 적극 실시를 지원하였습니다.

* 정부조직 개편('25.10.1.)에 따라 과기정통부의 모든 방송재난 업무가 방미통위로 이관되어 사업자 확대(50개→144개)

○ 재난방송주관방송사(KBS)가 재난정보 인프라*를 구축·활용하여 국민에게 신속하고 다양한 재난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재난포털·유튜브 채널(세이프K) 운영, 재난CCTV 구축·연계(약 18,000대), 재난안전지도(GIS) 개발·운영, 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제작·공유 등

○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 콘텐츠를 제작('25년도 TV·라디오용 각 40편)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농촌진흥청 등 32개), 지자체(광주광역시 등 8개)와 공유하여 국민 안전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KBS)는 수어 재난방송의 의무를 부과하고, 그 외 방송사는 노력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공포('26.2.19.)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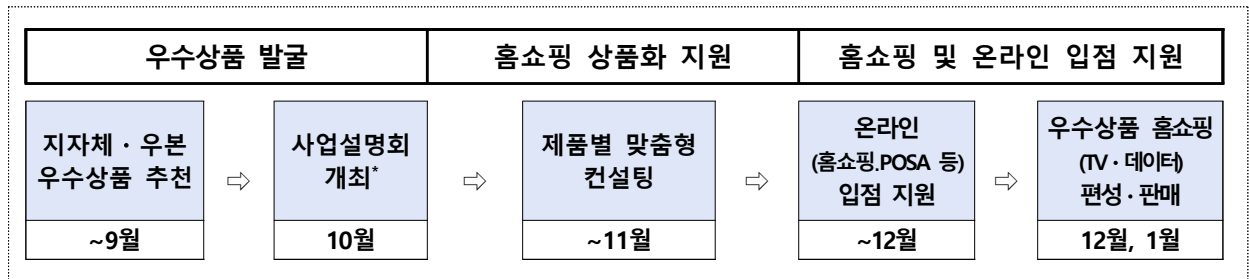
○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대비하여 전국 재난방송을 실시하기 위해 주요방송사(10개사) 외에도 지역방송사(26개사) 방송시설까지 점검대상(36개사 162개)을 확대하여 방송재난을 예방하였습니다.

○ 재난방송 수신 음영지역의 수신환경 실태조사('25년 5,647개소), 시설관리기관 대상 기술지원('25년 51개소), 라디오·DMB 중계설비 지원('25년 18대) 등을 통해 재난방송 수신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음영지역(도로·철도 터널 등) 방송수신설비의 설치 지원과 수신상태 조사 방법 등을 규정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25.4.23. 시행)하였습니다.

□ 디지털·미디어 산업 성장기반 조성

- 「유료방송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안)을 마련하여 사업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간담회를 개최('25.8.28.)하고, 유료방송(케이블TV, IPTV, 위성)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재승인제와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등 규제개선을 위한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을 발의(한민수의원, '25.9월)하였습니다.
-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역의 우수상품을 발굴(94개)하여 TV홈쇼핑사(7개사)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및 무료·할인방송 편성(21사, 21개 상품)을 지원하였습니다.



□ 유료방송 상생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이용자 권익 제고

- 유료방송 공정거래를 위한 데이터(가입자 수, 시청률 등) 검증체계 구축·입법 지원과 케이블TV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법제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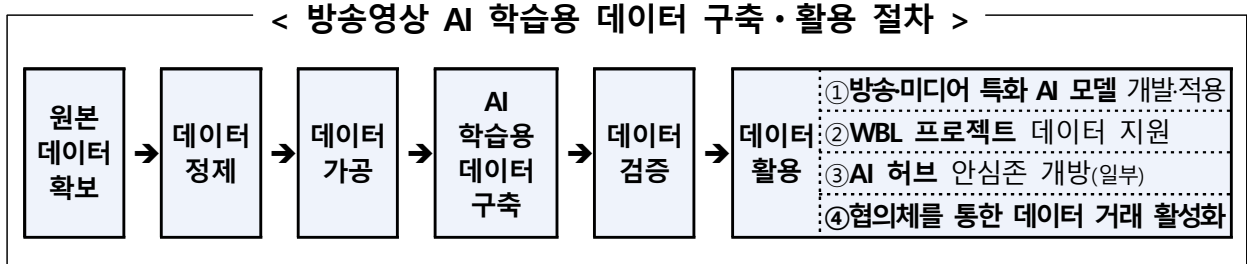
< 지역채널 커머스 관련 제도 개정 >

- **(현행)** 지역채널에서 상품소개·판매 프로그램 송출 금지(방송법)
→ 실증특례를 통해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을 한시적 허용 (13개 SO에서 운영중)
- **(개정안)** 지역채널에서 지역상품 소개·판매 방송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송법 개정안 의원발의 ('25.4월 오세희 의원, '25.6월 최형두 의원)

- 재난안전 대응을 위한 유료방송사업자 대상 안전점검(18개사)을 실시하고('25.4~6월), 특별재난지역 유료방송 요금 감면(전남 무안 등 8,801가구 대상 74.7백만 원 감면) 및 할인반환금 면제를 실시하였습니다.

□ 미디어·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AI·디지털 기반 미디어 신기술 육성

-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2만여 시간 구축('25.12월), AI 활용 콘텐츠 ('모범택시3' 등) 제작 21편(해외 진출형 10편, 공익형 11편) 지원 및 해외 투자상담 134.8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 크리에이터 권리보호를 위해 크리에이터 진흥법 관련 법안('25.3월 최형두의원, '25.6월 정동영의원) 제정을 추진하고, 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해 인재 육성(89%, 취·창업 성공), 입주지원 확대(34개 ⇨ 40개), 글로벌 진출 35개사 지원 등 추진하였습니다.

□ 건전한 통신·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

- 생성형 AI 서비스의 잠재적 위험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발자 및 서비스 제공자가 염두에 두어야 할 실천방안을 제시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25.2월)했습니다.
-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와 산업 발전 간의 균형점 모색을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운영('25.5, 12월)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대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콘퍼런스를 개최('25.11월) 하였습니다.
-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중 발견한 위험성·불편사항을 이용자가 직접 제보하고, 이를 사업자에게 전달하여 사업자의 자율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는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을 개설(10.31.) 하였습니다.

□ 방송·통신 국민 불편 해소

- 본인확인기관인 KT, SKT 및 연계정보(CI) 이용기관인 롯데카드에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본인확인기관 서비스* 안전성 및 연계정보 안전조치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 본인확인서비스 이용건수: ('20년) 20억 건 → ('25년) 30억 건

- SKT 해킹 사건, 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사건 등 주요 통신분쟁 사건을 직권조정 결정으로 조정('25.8월)하는 등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온라인피해365센터 설치·운영('22.5월) 및 AI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 개설·운영('24.12월~) 등을 통해 원스톱 피해구제를 지원하였습니다.

□ 방송·통신·미디어 사회 안전망 구축

-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기 위해 정보통신방법을 개정('26.1.6. 공포)하여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사업자의 자율정책 수립·시행의무, 반복 게재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체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마약, 도박, 불법 사금융 광고 등 불법·유해 정보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 불법유해정보 삭제차단: '22년 17.9만 건 → '23년 18.8만 건 → '24년 25.3만 건 → '25년 17.9만 건

- 신속한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차단*으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先차단 後심의, 긴급심의 대상 확대 등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24.11월)하였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차단: '23년 6.7만 건 → '24년 9.4만 건 → '25년 4.8만 건(심의중단)

-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제를 법제화('25.3월)하고, AI 기반 악성문자 필터링 서비스('25.3월)를 도입하는 등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 불법스팸 수신량 및 스팸신고 건수가 급감*하였습니다.

* 월평균 수신량: '24년 14통 → '25년 9통, 휴대전화 신고 건수: '24년 3억7천만 건 → '25년 6천만 건

-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위해 위치정보 정밀 측위 앱 보급('23.9월)으로 긴급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였습니다.

* 자급제 단말·유심이동폰 이용자(약 219만 명)의 긴급구조 사각지대 해소

□ 건전한 통신·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

- 맞춤형 디지털 윤리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디지털 역기능 예방·대응 역량 강화 및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 2025년 디지털윤리 교육 인원 >

구분	유아	청소년	성인	교원	합계
교육인원 (명)	30,135	142,663	110,934	3,241	286,973

- 디지털윤리 공모전('25.6월), 주간 캠페인('25.7월), 및 디지털윤리대전('25.12월) 등의 홍보를 통해 디지털 윤리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 이용자 피해·불편사항 적극 발굴·개선

- 정보취약계층 대상 다양한 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법 및 AI·플랫폼 등 최신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25년, 55,010명 대상)하였습니다.
- 통신시장 변화 및 서비스별 특성을 반영해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25년, 47개 서비스 대상)하였습니다.

* 입점업체·크리에이터 등 이용사업자에 대한 보호업무 평가 확대, 다크패턴 최소화 노력 평가, 감점사항에 개인정보보호법 처분내역 추가 등 개선

□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 환경 조성

- 위치정보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법」 및 위치정보 보호조치, 법 위반 사례 등을 교육('25년도 9회, 1,120여 명)하여 자율적으로 위치정보 보호환경 조성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 이통사가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전국 163개 지점)을 측정·공개('25.3월)하여 이통사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향상을 유도하였습니다.
- 위치정보사업자 등 대상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 실태점검(1,200여 개사)을 통해 위치정보 오·남용 예방 및 개인위치정보 주체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방송통신분야 공정경쟁 환경조성

- 시장조사심의관 조직 신설('23.11월)을 계기로 방송통신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조사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디지털플랫폼·통신·방송 분야별 조사·점검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통신사를 변경하는 번호 이동자에 대해 전환지원금을 도입하고,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추진(폐지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24.12.26.)하는 등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여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 시 허위·과장·기만광고로 가입을 유도하는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24.5월, 통신4사 총 과징금 14.71억 원)를 하는 등 이용자 권익을 증진하였습니다.
- 이동통신 유통점의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불편법 영업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개정 및 시행('24.7월)하여 이용자 보호 및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 디지털 플랫폼, 생성형 AI 등 신규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피해의 신속한 규제를 위해 주요 국가별 플랫폼 규제 현황과 관련 조사 사례 등 국내외 플랫폼 규제 동향을 분석하였습니다.

□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불편 해소

- 집합건물 다회선 독점계약으로 발생하는 선택권 제한,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통신 선택권을 강화하였습니다.
- PC와 모바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플로팅광고 삭제 제한 행위 모니터링, 행정지도 등을 통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방송통신서비스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요사항 미고지 등 이용자 피해와 관련하여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조사를 통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 유료방송 장비 미반납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반납 장비 및 절차에 대한 안내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시행하였습니다.

□ 건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환경 조성

- 2026 동계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방송*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중계권자(JTBC) 및 방송사업자(KBS, SBS, MBC)에 '올림픽·월드컵 TV 방송중계권 재판매 관련 협조 요청('25.10.29.)'을 하였습니다.

* '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및 '26년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JTBC 단독 확보

- 창의적이고 우수한 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선정·시상하여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

-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서비스 시청 편의 증진을 위해 폐쇄자막 조정 등의 특화 기능이 탑재된 맞춤형 TV를 전년 대비 3,000대 증가한 35,00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시각·청각장애이용 방송수신기(TV) 보급 추이>

연도	연간 보급대수	누적 보급대수	누적 보급률
2023년도	20,580대	159,928대	23.5%
2024년도	32,000대	191,928대	27.9%
2025년도	35,000대	226,928대	32.6%

※ '13년부터 보급된 시각·청각장애이용TV 일체형 수신기부터 누적 산정한 수치로, 재보급 제한 기간(7년) 이후 재신청 가능

- 57개 방송사업자*에 실시간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 제작비를 지원('25년 46억 원)하여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권을 보장하고, 비실시간 장애인방송 시청수요를 반영한 VOD 제작 및 서비스 제공을 지원(10개사, 12억 원)하였습니다.

* 장애인방송 필수지정사업자(중앙 및 지역지상파, 종편, 보도PP) 47개사, 고시의무사업자(일반PP, SO) 10개사

□ 국내 OTT·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 국내 OTT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기업들의 성공 전략을 비롯하여 플랫폼과 콘텐츠의 상생 발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인 '2025 국제 OTT 포럼'을 개최('25.11.6.)하였습니다.
- 인도, 미국, 프랑스, 튀르키예 등 해외 주요 국가의 OTT 시장과 이용행태를 조사하여 국내 OTT의 해외 진출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 2025 해외 OTT 조사 현황 >

구분	해외 OTT 시장조사	해외 OTT 이용행태조사
요약		
조사 내용	국가별 OTT 시장상황, 법적·제도적 규제 현황 - 해외사업자 규제, 해당 국가 미디어 관련 규정, 저작권, 세금, 개인정보 등	현지 이용자들의 OTT 이용행태 및 K-미디어 콘텐츠 선호도 조사 - OTT 시장규모, 유료 OTT 개수, K-콘텐츠 이용률·이용의향 등
조사 국가	인도, 미국, 프랑스, 태국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 튀르키예

○ 매체 다양화, 장르 융합 등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실효성이 떨어진 편성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

○ 혁신형 중소기업(총 58사)과 소상공인(총 193사)에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하여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기업의 자생력 확보와 동시에 지역경제와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례 >	
주식회사 뤼튼테크놀로지	주식회사 비엠코스
	
생성형 AI서비스	머드 화장품
<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 사례 >	
담미소	제주팜테이블
	
곱창김	제주툷 소시지

○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일총량제 확대·개선, 중간·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 등 방송광고 제도 개선 방송법령 개정안 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 고열량·저영양식품 등의 방송광고 제한 규제를 완화를 위해 식약처와 협의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을 개정('25.8.5. 공포)하였습니다.

※ (기존) 17~19시 모든 프로그램 → (개정) 17~19시 어린이주시청 프로그램

2. 2026년도 정책 추진방향

□ 방송분야 법·제도개선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여 방송·OTT 등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통합 법제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절차 및 방송 편성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EBS법)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하여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겠습니다.
- 공영방송의 책무, 평가, 재원 등 규율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제도 정비를 통해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 방송사의 행정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사업운영 등을 위해 (재)허가·승인 유효기간을 확대하고 부관 합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재)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에 엄격하고 투명한 재허가·재승인을 추진하여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적책임을 제고하겠습니다.
* (재허가) KBS1DTV, MBCDTV 등 24개사 160개 방송국 / (재승인) JTBC, MBN
-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제고, 콘텐츠 투자 계획 준수 등 재허가·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

- 생애주기별(유아기~노년기) 특성에 기반하여 단계별 미디어 교육 내용과 교육방식을 반영한 설계표에 맞추어, 생애주기별 미디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눈높이에 맞는 실속 있는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도서·산간 등에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운영을 지속('26년 목표 200회)하여 지역 격차 없이 전 국민이 다양한 미디어교육·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 미디어 산업 활성화

- ▲지역소멸 프로그램 제작 가점 부여, ▲지역-해외방송사 간 공동 제작 인센티브 부여, ▲지역방송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대상 확대 등으로 지역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지역방송 콘텐츠 해외 진출, OTT 플랫폼 등 콘텐츠 유통기반을 확대하여 지역방송 재정 안정성이 강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제5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 산업으로서의 기반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3년마다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제1차 '15년, 제2차 '18년, 제3차 '21년, 제4차 '24년)

□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 행정안전부 등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144*개 재난방송 의무방송사업자(지상파·중편·보도PP, SO, IPTV, 위성방송)와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정확·신속한 재난방송이 실시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 정부조직 개편('25.10.1.)에 따라 과기정통부의 모든 방송재난 업무가 방미통위로 이관되어 사업자 확대(50개→144개)
- 전국 중요방송시설 안전점검(162개 시설)을 실시하고, 주요 10개 방송사 대상으로 방송재난관리계획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하여 방송 송출 중단 상황 등의 방송재난을 예방하겠습니다.
- 재난방송의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와 방송사 지원 강화 등을 규정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 개정(의원입법) 발의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디지털·미디어 산업 성장기반 조성

- 생존위기에 직면한 K-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방송 산업의 낡은 제도를 개선하고 AI·디지털 융합을 지원하는 「가칭방송 미디어 산업 진흥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 글로벌 시장, AI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 유통·미디어 환경 변화로 위축된 홈쇼핑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방송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케이블TV 지역채널 및 홈쇼핑과 연계하여 지역 소상공인 및 전통 시장 판로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유료방송 상생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이용자 권익 제고

- 시청 데이터 기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디지털 친화적 방송광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고 상생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 유료방송의 공적책임과 이용자 권익제고를 중심으로 유효기간 도래·만료 사업자(9개)의 재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미디어·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AI·디지털 기반 미디어 신기술 육성

- 미디어분야 10대 AI·디지털 기술(AI 영상생성, 버추얼 프로덕션 등) 적용·확대로 방송 전주기(기획·제작·유통) 생산성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 크리에이티브미디어 콤플렉스의 창업·제작공간 제공 및 일자리 허브 역할 강화, 지역센터 확대(3개 → 9개)로 미디어지망 청년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 디지털 플랫폼 시대 이용자 보호 및 역량 강화

- 아동·청소년 SNS 과의존 예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디지털 유산 승계 근거 마련을 통해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 유공자를 발굴하고 포상하여 산업 전반에 이용자 중심의 문화가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및 융복합 서비스 이용자 보호

- 인공지능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잠재적 위험·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및 법령 안내서를 마련하는 등 이용자 권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AI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알고리즘으로 인한 확증편향, 필터버블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 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등 안전한 메타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이용자 보호 역량 강화

- 이용자의 본인확인 서비스 선택권 확대, 경쟁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위해 '26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불법스팸 제재 강화 및 전송자격인증제 운영 등 대응체계를 정비하여 불법스팸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딥페이크 윤리교육, 디지털윤리 인식제고 활동 등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인공지능(AI) 및 통신서비스 활용 역량 제고 및 최신 피해 유형에 대해 정보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피해예방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통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 이용자 중심의 위치정보 산업생태계 조성

- 위치정보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위치정보 산업 성장과 이용자 보호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중장기 시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긴급구조기관, 통신사와 협업 확대 및 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되는 위치정보 품질측정결과 분석·공개로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정확도를 제고하겠습니다.
-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기·수시 실태점검 및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통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민간 자율규제 및 팩트체크 활성화 등을 유도하여 온라인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 온라인상 마약, 도박, 불법 사금융 광고 등 불법·유해정보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겠습니다.
-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조치의무 대상을 기존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하고 사업자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 공조·협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인터넷상 청소년유해매체 광고 모니터링 및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 통신 이용자 권익 강화

- 통신분쟁 조정의 신속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제4기 통신분쟁조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집단분쟁조정제도 신설 및 사업자 참여 의무화, 재판상화해 효력 부여를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AI 기술 및 디지털폭력 등 온라인상 피해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전문적인 상담서비스·피해지원을 위해 ‘온라인피해365센터’ 기능을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방송통신분야 공정한 시장경쟁 촉진 및 이용자 불편 해소

- 방송통신 분야 금지행위 등 사후규제 관련 법령을 정비·보완하여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집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 단말기유통법 폐지 관련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방송시장 성장 정체로 심화된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방송분쟁조정제도 개선 및 중소 외주제작사 보호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방송분야 제도 개선

- 유료방송 미가입 가구, 고령자층의 보편적 시청권이 제약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 침체되고 있는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방송산업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광고규제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방송과 OTT 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고 방송산업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편성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피해 예방프로그램 편성 실적 등을 평가하고, 방송사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노력 평가 항목을 신설하겠습니다.

□ 국민 중심의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

-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TV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방송 품질 관리 방안 마련 및 장애인 방송접근권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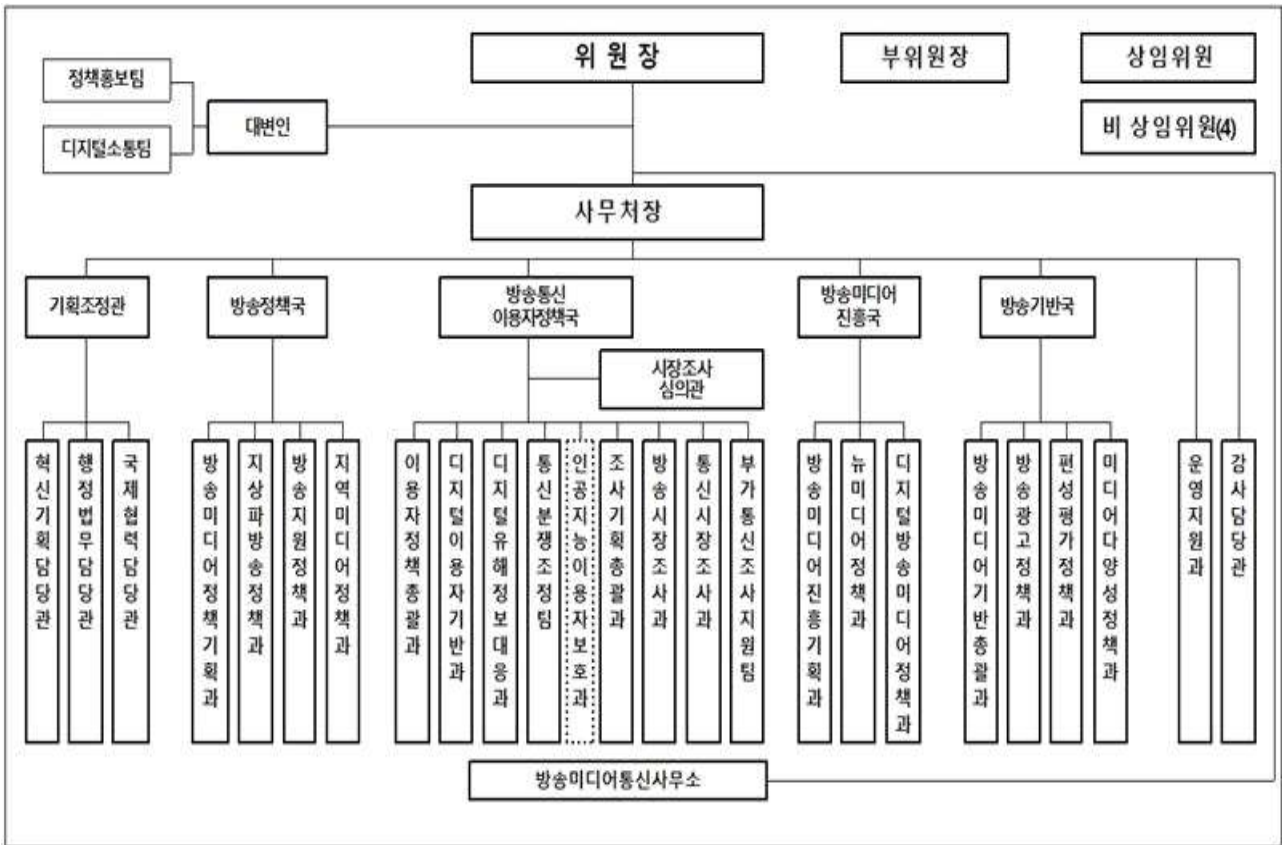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반현황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II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반현황

(1) 조직: 1처 4국 3관 22과(담당관) 4팀^{총액} / 소속기관 1개소



(2) 인원(정원): 317명(본부 273명, 소속기관 44명)

구 분	정무직	고위 공무원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계
본부	3	8	7	16	21	92	126	273
소속기관	-	-	-	1	-	5	38	44
계	3	8	7	17	21	97	164	317

(3) 재정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25	'26	'27	'28	'29
□ 재정사업 합계					
○ 총지출	2,681.6	2,630.6	5,258.5	5,073.3	5,084.2
(전년대비증가율 %)		△1.9	99.9	△3.5	0.2
○ 총계	2,681.6	2,630.6	5,258.5	5,073.3	5,084.2
(전년대비증가율 %)		△1.9	99.9	△3.5	0.2
□ 총지출 구분					
○ 인건비	259.9	290.1	310.4	332.1	355.3
(전년대비증가율 %)		11.6	7.0	7.0	7.0
○ 기본경비	33.9	40.1	53.4	55.0	56.6
(전년대비증가율 %)		18.3	33.2	3.0	2.9
○ 주요사업비	2,387.8	2,300.4	4,894.8	4,686.2	4,672.2
(전년대비증가율 %)		△3.7	112.8	△4.3	△0.3
□ 예산					
○ (총)지출	200.9	399.5	1,875.7	1,732.1	1,629.8
(전년대비증가율 %)		98.9	369.5	△7.7	△5.9
○ 총계	200.9	399.5	1,875.7	1,732.1	1,629.8
(전년대비증가율 %)		98.9	369.5	△7.7	△5.9
【 일반회계】 ¹⁾					
○ (총)지출	200.9	399.5	1,875.7	1,732.1	1,629.8
(전년대비증가율 %)		98.9	369.5	△7.7	△5.9
○ 총계	200.9	399.5	1,875.7	1,732.1	1,629.8
(전년대비증가율 %)		98.9	369.5	△7.7	△5.9
□ 기금					
○ (총)지출	2,186.9	1,900.9	3,019.1	2,954.1	3,042.4
(전년대비증가율 %)		△13.1	58.8	△2.2	3.0
○ 총계	2,186.9	1,900.9	3,019.1	2,954.1	3,042.4
(전년대비증가율 %)		△13.1	58.8	△2.2	3.0
【 방송통신발전기금】 ²⁾					
○ (총)지출	2,186.9	1,900.9	3,019.1	2,954.1	3,042.4
(전년대비증가율 %)		△13.1	58.8	△2.2	3.0
○ 총계	2,186.9	1,900.9	3,019.1	2,954.1	3,042.4
(전년대비증가율, %)		△13.1	58.8	△2.2	3.0

* '25년은 실적, '26년은 예산, '27년 이후는 기재부에 제출한 중기사업계획서상 예산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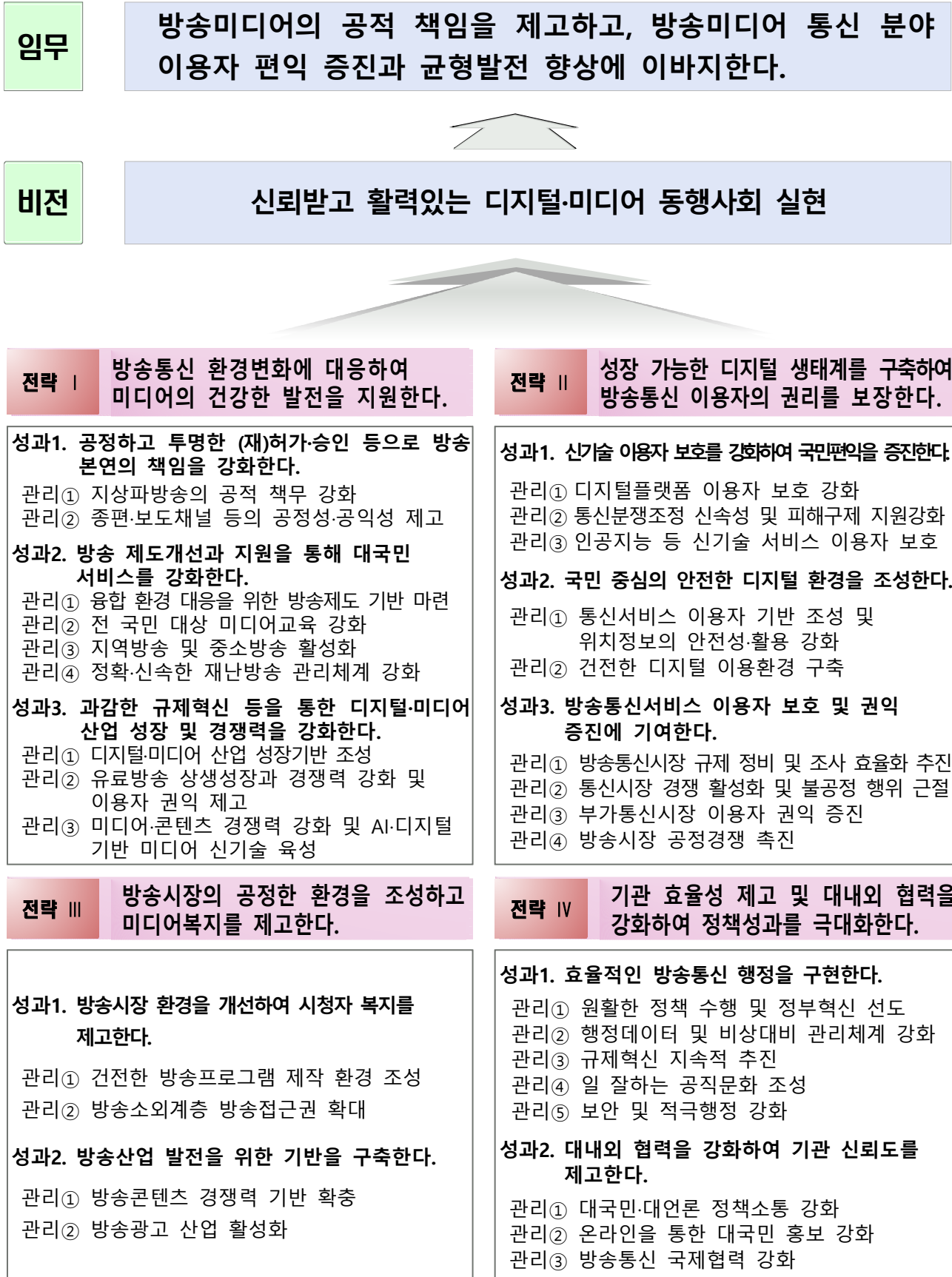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 특성

-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대응하여 방송·미디어 전반의 제도를 정비하고, 공영방송 등 방송의 공적역할 제고 및 전국민의 미디어 활용역량 강화
- 규제에 따른 행정부담 완화 및 투자 촉진을 통해 유료방송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진흥전략 수립
- 방송미디어 관련 AI 기술 개발, 제작과정 효율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방송미디어 산업 활성화 추진
- 청년층이 선호하는 디지털크리에이터 등 새로운 직업 발굴·육성 및 미디어 스타트업 종합 지원을 통해 청년·소규모 기업 지원
-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규범 마련 및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기술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 기술발전에 따른 디지털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 국민(정보취약계층, 학생, 학부모 등) 대상 디지털윤리교육 및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실시
- 불법스팸 관련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불법스팸 발송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전송자격인증제 운영 등 대응체계 정비
-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 등의 의무를 방송통신사업자가 충실히 이행하도록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강화
- 기술발전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다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통신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온라인상 피해구제에 대한 지원 강화

- 위치정보 분야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활성화 기반 마련,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실태점검 및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 온라인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책무를 강화하고, 망법 시행령 개정 추진
- 방송통신 분야 금지행위 등 사후규제 관련 법령을 정비·보완하여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집행력을 강화
-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조사를 강화
- 유료방송 미가입 가구 및 고령자층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우수한 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 선정·시상 등 건전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환경 조성
-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일총량제 확대·개선 등 방송법령 개정 추진을 통한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TV 보급 및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 제고
- 국내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편성규제 개선, 방송평가를 통한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방안 마련,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 추진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3)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4	3	10	12	30	57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I.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한다.		
1. 공정하고 투명한 (재)허가·승인 등으로 방송 본연의 책임을 강화한다.		
	①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국정7-1, 국정108-1
	② 종편·보도채널 등의 공정성·공익성 제고	국정7-1, 국정108-1
2. 방송 제도개선과 지원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		
	① 융합 환경 대응을 위한 방송제도 기반 마련	국정7-1, 국정108-1, 업무2-5, 업무3-1
	②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	국정7-3, 업무3-2, 업무3-3
	③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	국정7-4, 업무2-3
	④ 정확·신속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국정7-3, 업무1-5
3. 과감한 규제혁신 등을 통한 디지털·미디어 산업 성장 및 경쟁력을 강화한다.		
	① 디지털·미디어 산업 성장기반 조성	국정108-1, 국정108-3
	② 유료방송 상생성장파 경쟁력 강화 및 이용자 권익 제고	국정108-3
	③ 미디어·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AI·디지털 기반 미디어 신기술 육성	국정108-2, 국정108-3
II. 성장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여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1. 신기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편익을 증진한다.		
	①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보호 강화	국정108-4
	② 통신분쟁조정 신속성 및 피해구제 지원강화	업무3-4
	③ 인공지능 등 신기술 서비스 이용자 보호	국정108-4
2. 국민 중심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한다.		
	① 통신서비스 이용자 기반 조성 및 위치정보의 안전성·활용 강화	국정7-3, 국정108-3, 국정108-4
	②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구축	국정7-2, 국정108-4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3.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한다.		
	① 방송통신시장 규제 정비 및 조사 효율화 추진	국정108-5
	②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및 불공정 행위 근절	국정108-5
	③ 부가통신시장 이용자 권익 증진	국정108-5
	④ 방송시장 공정경쟁 촉진	국정7-3, 국정108-3
III.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① 건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환경 조성	
	②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	국정7-3, 업무3-2
2.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국정108-1, 국정108-2, 국정108-3, 업무2-1, 업무2-4
	②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	국정108-1, 국정108-3, 업무2-1, 업무2-4
IV.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1. 효율적인 방송미디어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① 원활한 정책 수행 및 정부혁신 선도	
	② 행정데이터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③ 규제혁신 지속적 추진	
	④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	
	⑤ 보안 및 적극행정 강화	
2.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① 대국민·대언론 정책 소통 강화	
	②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③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Ⅲ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I

전략목표 II

전략목표 III

전략목표 IV

전략목표 I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한다.

기본방향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OTT의 급속한 확산, 방송시장 활력 저하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미디어의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법체계 필요성 증대
- 방송의 독립성 강화 및 보도·편성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이의 현장 안착을 위한 하위법령 등 정비 필요

* 방송법 공포('25.8.26.), 방문진법·EBS법 공포('25.9.9.)

- 디지털 기술 발달에 의한 미디어 이용역량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 지원 필요
- 지역여론 형성 등 지역사회 공론의 장으로 기능하는 지역·중소방송을 위해 콘텐츠 경쟁력 강화, 수익기반 확대 등 자립기반 조성지원 필요
- 재난의 국지화 및 일상화로 인해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방송과 방송 재난 예방을 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
-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유료방송시장의 자율성 제고 등을 통해 방송·미디어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 우리 미디어·콘텐츠의 성장잠재력과 他산업 수출 견인 역할을 고려, 방송미디어·콘텐츠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

◇ 그간의 성과

- 공영방송 이사 구성 및 사장 선임절차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 (방송법·EBS법·방문진법) 개정 지원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 및 독립성 제고에 기여
- 'EBS 중학프리미엄' 강좌 전면 무료화('23.7월~) 이후, '24년 기준 4,300억 원 규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25년부터는 교육부에서 전액 지원)
- 엄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24년 종편·보도PP(3개사) 재승인 실시
- 전국 광역시·도별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확충*하고 미디어 나눔버스를 전국 권역별로 확대 배치·운영**

* 부산('05년), 광주('07년), 강원·대전·인천('14년), 서울('15년), 울산('16년), 경기('19년), 충북·세종('20년), 경남·대구('23년)

** 미디어나눔버스 운영횟수('23년 483회→'24년 850회→'25년 972회)

- 전국 12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활용해 전 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미디어 교육·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방송 제작시설·장비 무료 활용 지원
- 지역기반 우수 프로그램 제작지원, 신규 미디어 대응 강화 등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지역의 시·청취자 프로그램 만족도가 지속 상승
- 재난방송 의무사업자(144개사)의 재난방송 상황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AI 기능을 활용한 재난방송 감지 시스템으로 재난방송 실시 지원
- 터널·지하 공간 등 재난방송 수신 음영지역 수신환경 실태조사, 방송수신 음영지역에 중계설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 「유료방송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안)을 마련하여 사업자·전문가 의견 수렴 및 간담회('25.8월) 개최
- 유료방송(케이블TV, IPTV, 위성) 사업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재허가·재승인제·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등 규제 개선을 위한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 발의(한민수의원, '25.9월)
-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역 우수상품 발굴(94개) 및 홈쇼핑사(7개사) 온라인 쇼핑몰 입점, 무료·할인방송 편성(21사, 21개 상품) 지원
-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2만여 시간 구축, AI 활용 콘텐츠('모범택시3' 등) 제작 지원 및 해외 투자상담 134.8억 원 달성
- 전업 크리에이터, 유망 신직업(크리에이터 PM, 채널거래 전문가 등) 발굴·육성('25년 총 90팀)하여, 취·창업률 90%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중점 추진내용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여 방송·OTT 등 신·구 미디어를 포괄 하고 미디어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통합 법제 제정 추진
-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절차 및 방송 편성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하여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 하고, 방송 독립성 및 편성의 자유를 보장

- 공영방송의 책무, 평가, 재원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체계를 마련하여, 공영방송 발전의 구조적 기반을 조성
- (재)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만료 또는 만료 예정인 방송사에 공정하고 투명한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추진하고, 관련 제도개선* 추진
 - * (재)허가·승인 유효기간 확대, 부관 합리화 등
- 생애주기별 특성에 기반하여 단계별 미디어 교육 내용과 교육방식을 반영한 설계표에 맞추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미디어 교육 제공 및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운영
- 지역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역민과의 소통 협력 강화 등 지역방송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 기반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지속 운영으로 신속·정확한 재난방송을 지원하고, 방송재난 시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전국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 강화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방송미디어·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 전략(가칭)」 마련
- 미디어 분야 10대 AI·디지털 기술(AI 영상생성, 버추얼 프로덕션, 디지털 휴먼 등) 적용·확대로 방송 전주기(기획·제작·유통) 생산성 혁신
- 유통·미디어 환경 변화로 위축된 홈쇼핑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방송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안)」 마련
- 케이블TV 지역채널 및 TV홈쇼핑과 연계하여 지역 소상공인 및 전통 시장 판로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전략목표와 임무 간의 상관성

- 방송미디어 제도개선 및 지원을 통해 국내 방송이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서도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고, 나아가 품격 높은 대국민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
- AI·디지털 기반 방송·미디어 산업 혁신, 유료방송 규제혁파 등을 통한 미디어·콘텐츠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3	3	9	18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한다.		① 방송사업자의 공정성 관련 제재 건수(건)
1. 공정하고 투명한 (재)허가 승인 등으로 방송 본연의 책임을 강화한다.		①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률(%)
	①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①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제고율(%)
	② 종편·보도채널 등의 공정성·공익성 제고	① 종편·보도채널 등의 공적책무 제고율(%)
2. 방송 제도개선과 지원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		① 방송의 사회적 책임 제고율(%)
	① 융합 환경 대응을 위한 방송제도 기반 마련	① 미디어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율(%)
	②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	①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② 미디어 역량 향상도(%)
	③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	① 제작지원 프로그램 시청·청취자 만족도(점) ② 콘텐츠 마켓 출품 프로그램 수(개) ③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점)
	④ 정확·신속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① 재난콘텐츠 제작 달성률(%) ② 방송재난 대비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율(%)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과감한 규제혁신 등을 통한 디지털·미디어 산업 성장 및 경쟁력을 강화한다.		① 방송산업육성 활성화 추진율(%)
	① 디지털·미디어 산업 성장기반 조성	① 유료방송시장 규제 개선 추진율(%) ② 홈쇼핑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확보 지원율(%)
	② 유료방송 상생성장파 경쟁력 강화 및 이용자 권익 제고	① 유료방송사 상생협력 추진율(%) ② 이용자 권익 제고 추진율(%) ③ 유료방송 품질제고 추진율(%)
	③ 미디어·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AI·디지털 기반 미디어 신기술 육성	① 미디어·콘텐츠 경쟁력 강화 추진율(%) ② 미디어 신기술 활성화 지원율(%) ③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육성 지원율(%)

(1) 주요내용

□ 방송·통신 환경 대응방안 마련

- OTT 등 새로운 미디어의 급격한 성장 및 글로벌 미디어 경쟁 가속화 상황 등에 대응하여, 국내 방송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방송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등 효율적인 제도방안 마련 필요
 -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가칭)시청각 미디어서비스법(안)」 및 차세대 방송발전 전략과 제도개선 방안 등 추진
- 민영방송과 차별되는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해, 공영방송의 책무, 평가, 재원 제도 전반의 효율성·합리성 제고 필요
 - 공영방송의 책무 구체화·명확화, 효과적인 평가제도 도입, 공적 재원 운용의 투명성·전문성 제고 등 추진

□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지원

- 국내 방송이 국내 시청자에 품격높고 공익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본연의 책무 수행을 통해 시청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 필요
 - 공정하고 투명한 인·허가 제도를 운영 및 공영방송·지역방송·재난방송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원책을 마련

□ AI·디지털 기술로 방송미디어·콘텐츠 산업 생태계 혁신

- 미디어분야 10대 AI·디지털 기술(AI 영상생성, 디지털휴먼 등) 적용·확대로 방송 기획·제작·유통 소주기 생산성 혁신
- 방송미디어의 수요 맞춤형 R&D 강화 및 지원 규모 확대로 미디어·콘텐츠의 제작·서비스 핵심기술 확보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3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25	'30			
방송사업자 공정성 관련 제재 건수(건)	12	4	6	12	0	15	'30년 목표치는 최근 5년('20~'24년) 실적치의 평균값(11.4)과 성과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여건 등을 고려	방송법에 따른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 조항 위반에 따른 제재 건수 + 방송 공정성 위반**에 따른 방송심의 제재 건수 * 방송법 제4조제2~6항, 제4조의2 ** 방송심의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대담·토론 프로그램 등)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14조(객관성)	방송사업자 제재 현황

성과목표 1-1

공정하고 투명한 (재)허가·승인 등으로 방송 본연의 책임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공정하고 투명한 지상파·중편PP (재)허가·재승인 심사 및 조건 등 이행점검으로 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 제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3	'24	'25*	'26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률(%)	95.3 (지상파 97.7+ 중편 92.9)/2	99.4 (지상파 98.8+ 중편 100)/2	0	96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현황에 대한 엄격한 점검 결과 '23~'24년은 목표치('23년 94%, '24년 95%)를 초과하여 달성하였으나, '25년은 방미통위 위원 미구성으로 위원회에 결과보고가 되지 않아 목표치('25년 96%) 미달하였던 점과 직전 재허가·재승인에 비해 엄격한 조건을 부여한 점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목표치를 96%로 설정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지상파 재허가 조건 이행 건수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지상파 재허가 조건* 수)×0.5]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중편·보도 PP 재승인 조건 이행 건수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중편·보도 PP 재승인 조건** 수)×0.5]	실적 점검 결과

※ 이행점검은 완료하였으나, 위원회 위원 구성이 지연되어 위원회 보고절차를 거치지 못함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외부환경

- OTT 활성화 등 미디어 환경변화로 미디어 간 경쟁이 심화되고 지상파, 중편·보도PP의 경영여건 악화로 이어져 공적책임 훼손 우려

- 엄격하고 공정·투명한 재허가·재승인을 실시하되,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한 심사평가 기준, 심사절차 효율화 등의 필요성 증대
- 이전 (재)허가·승인 시 미흡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부과한 조건 이행 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성 제고

□ 갈등요인

- 엄격한 재허가·재승인 조건 부과 및 상대적으로 짧은 유효기간으로 인한 잦은 심사가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OTT와 같은 디지털 경쟁 매체의 등장으로 인한 경쟁 심화 및 국회·시민단체·일반국민 등 이해관계자 간 뚜렷한 입장차이로, 종편PP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한 정부 규제와 방송 산업 활성화 간의 조화로운 균형점 모색이 필요

□ 갈등관리계획

- 방송사의 행정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사업운영 등을 위해 (재)허가·승인 유효기간을 확대하고 부과 합리화를 추진
- 종편PP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사업자,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소통 절차를 강화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I-1-①)

□ 추진배경

- 미디어 매체가 다변화함에 따라 지상파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요구 증대를 반영한 재허가 심사 및 조건 이행점검 추진
 - 재허가 심사의 효율성 및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23~'26년 재허가 심사 사전 기본계획 수립('22.9월)
 -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24·'25년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해 재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지상파방송의 안정적 송출 지원
 - '23년~'26년 재허가 심사 사전 기본계획('22.9월)을 반영한 '26년 재허가 세부계획 수립, 현장점검 및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거쳐 엄격하고 공정한 재허가 실시
 - 또한, 기존 재허가 시 부과한 조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철저한 이행점검 실시

* 주요조건: 방송프로그램 제작 투자, 비정규직 현황 제출, 협찬고지 관련, 경영의 독립성·투명성 제고, 외주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준수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24·'25년 재허가)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24·'25년 재허가 대상 지상파·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신속한 재허가 절차 추진
 - * KBS 1DTV, MBC DTV, EBS 등 23개 방송사업자, 163개 방송국
- ('26년 재허가) '23~'26년 재허가 사전 기본계획을 반영한 '26년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 이를 기반으로 재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2개 방송사업자, 107개 방송국에 대한 엄격하고 투명한 재허가 추진

-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위하여 재허가조건을 부과하고, 향후 철저한 이행점검 추진

○ (조건 이행점검)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부과된 재허가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재허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

- '24.'25년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및 조건 위반사업자에 행정처분 추진

※ 추진근거: 「방송법」제9조(허가 등), 제17조(재허가 등) 및 제99조(시정명령 등)

○ (기본계획 마련)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강화, 심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 수립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4년 지상파 재허가 심의·의결	'26.3~4월	
	지상파 재허가조건 '24년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26.3~4월	
	지상파 재허가 조건 '25년 이행실적 접수	'26.3~4월	
2/4분기	'26년 지상파 재허가 세부계획 의결	'26.6월	
	'26년 지상파 재허가 관련 사업자 설명회 개최	'26.6월	
	'26년 지상파 재허가 신청서 접수	'26.6월	
3/4분기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 의결	'26.9월	
	'26년 지상파 재허가 관련 현장점검 실시	'26.7~10월	
	'26년 지상파 재허가 관련 시청자 의견접수, 기술심사 등	'26.7~10월	
4/4분기	지상파 재허가조건 '25년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26.11월	
	'26년 지상파 재허가 심의·의결	'26.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재허가 심사 세부계획 심의·의결 후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지상파방송사업자 애로사항 등 청취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설명회	재허가 대상 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 설명회 개최	'26.6월
현장방문	재허가 대상 사업자 현장점검 시 애로사항 청취	'26.7~10월

□ 기대효과

- 공정하고 투명한 허가 심사를 통한 방송의 공익성 및 공적책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제고율(%)	98.8	98.8	50.6	98.7	'25년의 경우 재허가 조건 이행 실적을 면밀히 점검하였으나, 위원회 보고가 불가능하여 이행 실적 점검결과에 대한 달성여부 판단 곤란 - '26년 목표치는 '25년을 제외한 이전 최근 3년('22~'24년) 실적치 평균으로 설정	[(재허가 세부계획 반영 건수/재허가 사전 기본계획 수립시 세부계획으로 위임한 건수)× 0.5]+[(지상파 재허가 조건 이행 건수/지상파 재허가 조건 수)×0.5]	실적자료

② 종편·보도채널 등의 공정성·공익성 제고(I-1-②)

□ 추진배경

- (종편·보도PP)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엄격하고 투명한 재승인* 심사를 실시하고 관련조건 및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점검 추진

* 종편·보도PP는 승인유효기간 만료 시 방미통위의 재승인을 받아야 함(방송법 제17조)

- (공익채널) 방송의 다양성 제고 및 시청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방송법 제70조에 따라 2년마다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을 선(인)정

※ 종합유선방송, 위성,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는 장애인복지채널과 공익채널 각 분야별 1개 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용하여야 함(방송법 제70조)

<2025~2026년도 공익·장애인 복지채널 선정 현황>

구분	공익성방송분야	해 당 채널
공익채널	사회복지	육아방송, 소상공인방송, 다문화TV
	과학문화진흥	사이언스TV, 아리랑TV, 토마토클래식
	교육 및 지원	EBS English, EBS플러스1, EBS플러스2
장애인복지채널	복지TV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대상인 종편PP(JTBC, MBN)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재승인 심사를 실시하고, 방송사의 안정적인 사업운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 확대 등 추진

- 공적책임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행실적 점검 시 현장점검 및 회계(법률)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면밀히 점검하고 조건 위반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엄정히 처분

- (공익채널) '25~'26년 선·인정 사업자(유효기간: '25.4.1.~'27.3.31.) 현장 점검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의견수렴 실시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5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조건(심사대상 사업자) 이행실적 접수	'26.1월	
2/4분기	'24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조건 이행점검 결과 위원회 보고	'26.4월	
	'25년도 하반기 재승인 대상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26.4~5월	
	'26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신청서 접수	'26.5월	
	'25년도 하반기 재승인 대상 종편PP 재승인 심의·의결	'26.6월	
	종편·보도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서면점검 및 현장실사 등	'26.5~9월	
3/4분기	종편·보도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서면점검 및 현장실사 등	'26.5~9월	
	공익채널 선정사업자 현장점검	'26.7~9월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신청서 접수	'26.9월	
4/4분기	'26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26.10월	
	'25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조건 이행점검 결과 위원회 보고	'26.11월	
	'26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의·의결	'26.11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종편·보도PP의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관련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등의 이행현황을 점검
-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선정사업자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사항 발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심사위원회	종편PP(JTBC)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26.4~5월
현장방문	종편·보도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서면점검 및 현장실사 등	'26.5~9월
현장방문	공익채널 선정사업자 의견수렴 및 현장점검 등	'26.7~9월
현장방문	종편PP 재승인 관련 현장 실사(심사대상 사업자)	'26.7월
심사위원회	종편PP(MBN)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26.10월

□ 기대효과

- (종편·보도PP) 재승인 시 부과한 조건 및 권고 등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26년 재승인 시 엄격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공익성 제고 유도
- (공익채널)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를 방지하고 상대적 소수자의 이해 고려, 국민정서 함양, 방송의 교육적 역할 증대 등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억 원)

		회계구분	'25	'26
방송통신행정지원				
방송통신 운영지원(7131)			2.37 (44.08)	2.42 (73.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채널 운영실적 모니터링 및 평가(303) - 공익·장애인복지채널 방송 모니터링 - 공익·장애인복지채널 프로그램 평가 	일반회계	2.37 1.90 0.47	2.42 1.95 0.4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종편·보도채널 등의 공적책무 제고율(%)	96.7	50	49	98.4	'24, 25년에는 위원회 미구성으로 인한 의결 지연 등으로 실적이 부진했던 점을 감안하여 전년도 목표(98.4) 수준으로 설정	$< ① + ② + ③ >$ ① 종편·보도PP 재승인심사 추진율(0.4) : (재승인 신청서 접수·보완×0.1) + (시청자 의견청취 및 관계 법령 위반조회×0.1) + (재승인 심사위 구성·운영×0.1) + (재승인 심의·의결×0.1) ② 종편·보도PP 재승인조건 이행점검 추진율(0.2) : (서면·현장점검×0.1) + (이행점검 결과보고×0.1) ③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재승인조건 이행률(0.4)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종편보도PP 조건 이행 건수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재승인 조건 건수×0.4) ※ 성과지표 측정산식 수정 : 유료방송 사전동의 업무가 없어 지고 공익채널도 2년 주기로 선정되어 '26년도에 공익채널 선정업무가 없어 관련 지표내용 제외(유료방송 사전동의 처리율, 공익채널 선정 업무추진율)하고, 종편·보도PP 공적책무 제고업무 세분화	실적자료

성과목표 1-2

방송 제도개선과 지원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OTT 성장 및 기존 방송매체 성장 정체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미디어산업 진흥 및 시청자보호 강화 등을 위한 방송 전반의 제도개선 추진
 - ▲ 「(가칭)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마련, ▲공영방송 책무·평가·재원 등 규율체계 정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보도·편성 자율성 제고를 위한 하위법령 정비
-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발맞추어 전국민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방송·재난방송 등 공적 역할 제고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
 - 생애주기별 특성에 기반하여 단계별 미디어 교육 내용과 교육방식을 반영한 설계표 등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미디어 교육 제공
 - 지역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역민과의 소통 협력 강화 등으로 지역방송의 발전과 지역 기반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추진
 -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지속 운영으로 신속·정확한 재난방송을 지원하고, 전국 중요 방송시설 안전 점검을 강화하여 방송재난 예방 적극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3	'24	'25	'26			
방송의 사회적 책임 제고율(%)	100	100	100	100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와 재난방송 수신지원 관련 과제 목표달성 결과 측정	< ①+② > ①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만족도 × 0.5 ※ 7점 리커트 척도(만족도 목표치 81.1을 100점으로 환산) ② 재난방송 음영 지역 기술지원 터널수 목표 달성도 × 0.5 ※ '26년 목표: 190개	개별지표 실적자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방송·통신 산업과 기술의 역동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00년 전후 수립된 현행 미디어 법에 관련 변화 반영이 지체
 - 지상파방송의 위기, 특히 지역·중소방송과 지상파 DMB, UHD 등의 효율적 투자 등을 위한 지원 및 조정 요구가 지속 제기
 -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의 영향력 강화,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저하 등으로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수행이 위축
 - 공영방송의 명확한 역할 설정, 효과적인 평가제도 도입, 공적재원 운용의 합리성 제고 등을 통해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 회복 필요
 - 미디어융합에 따른 매체간 경쟁 심화 환경에서 지역사회 공론의 장으로 기능하는 지역·중소방송을 위해 콘텐츠 경쟁력 강화, 수익 기반 확대 등 자립기반 조성 지원 필요
- ※ 광고매출: '19년 2,264억 원 → '24년 1,677억 원 (△587억 원, △25.9%),
영업손실: '23년 △411억 원, '24년 △506억 원 등 '18년 이후 지속 적자 상태
- 유아기·청소년기·청장년기·노년기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 참여 인원이 매년 증가('23년 43.3만 명 → '24년 49.6만 명 → '25년 59.9만 명) 하는 등 미디어 교육에 대한 전 국민 수요가 지속 증가
 - 재난의 국지화·일상화, 재난유형의 다양화에 따라 변화하는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요구 증대
 - 전국 터널·지하공간의 FM·DMB 수신불량률의 높은 수준('24년 60~70%)으로, 대다수 시설관리기관은 기술적 역량이 부재하여 해당 터널의 재난방송 불량 원인 파악 등이 어려운 상황

□ 갈등요인

- 현행 미디어 법 체계의 재편은 방송사 및 이해관계자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에 따라, 사업자, 시청자,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이견 존재
- 공영방송 규율체계 정비 요구는 지속되고 있으나, 개편 방향 및 개편 수준에 대한 이견이 존재
- 미디어 교육 확대를 위해 전국 광역시·도별 1개 센터를 목표로 지자체와 협업*하여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나, 구축지로 선정된 일부 지자체의 예산확보 문제 및 일정 지연 등이 발생, 차질없는 센터 구축 및 개관**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 (지자체)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물 건립, (방미통위) 방송 시설·장비 구축

** (경북, 전남, 전북, 충남지역) '27~'28년 개관을 목표로 센터 구축중

- 전국 터널·지하공간 등 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재난방송 수신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설관리기관의 관심 및 예산확보 부족 등으로 재난방송 수신 환경 개선에 어려움 존재

□ 갈등관리계획

- 미디어법제 정비, 공영방송 제도 개선 등의 과정에서 관련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입법 추진 과정에서 국회 등에 협조를 적극 요청
-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화를 위해 센터를 건립 중인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여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
- 재난방송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수신불량으로 확인된 터널의 시설 관리기관의 기술지원 신청을 받아, 수신불량 원인 및 중계설비 유지보수 방안에 대한 기술지원 결과를 통보하여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유도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융합 환경 대응을 위한 방송제도 기반 마련(I-2-①)

□ 추진배경

- OTT의 급속한 확산, 방송시장 활력 저하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미디어의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법체계 필요성 증대
- 방송의 독립성 강화 및 보도·편성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방송법·EBS법·방문진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이의 현장 안착을 위한 하위법령 등 정비 필요
- 경쟁적 방송·통신 환경에서 민영방송과 차별되는 공영방송의 역할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공영방송의 책무·평가·재원 제도 전반에 대한 규율체계 개선 필요성 증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미디어법제 정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여 방송·OTT 등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통합 법제 마련
- (방송 3법 하위법령 정비) 법에서 대통령령 및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편성규약 미준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및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기준 등)에 대한 정비안 마련 및 시행
- (공영방송 법제 정비) 공영방송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이행 여부를 효율적으로 점검하는 협약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는 공적 재원 산정·배분 등 관리체계 개선 추진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실무(안)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26.3월	
2/4분기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 위원회 보고 및 의결	26.4~6월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 관련 정책연구과제 추진	'26.6월	
	공영방송 제도개선 관련 정책연구과제 추진	'26.6월	
4/4분기	공영방송 제도개선(안) 마련	'26.12월	
	「(가칭)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안 마련	'26.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미디어법제 정비)** 「(가칭)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관련 각계 전문가 및 사업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 추진
- **(방송 3법 하위법령 정비)** 방송 3법(방송법·EBS법·방문진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실무(안) 관련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및 제·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실시
- **(공영방송 법제 정비)** 공영방송 책무·평가·재원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연구반을 구성·운영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의견수렴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실무(안)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26. 3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 입법·행정예고	'26. 4월
	「(가칭)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관련 의견수렴 진행	'25.6~9월
	공영방송 제도개선 관련 연구반 운영	'26.6~12월

□ 기대효과

- **(미디어법제 정비)**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는 미디어 법제 개선을 통해 국내 미디어 시장 진흥 및 시청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
- **(방송 3법 하위법령 정비)**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절차 및 방송 편성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하여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방송 독립성 및 편성의 자유를 보장

- (공영방송 법제 정비) 공영방송 규율체계 개편을 통한 공적 기능 강화를 통해, 공영방송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 신뢰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미디어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율(%)	100	100	100	100	지배구조 개선, 공영방송 법제 정비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상황이나 목표치를 100%로 적극 설정	$< ①+②+③ >$ ① 공영방송 지배 구조 추진율(0.4) : (방송법 시행령 및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개정 $\times 0.4$)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개정 $\times 0.3$) +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개정 $\times 0.3$) ② 공영방송 제도 개선 추진율(0.4) : (정책연구 실시 $\times 0.5$) + (제도개선안 마련 $\times 0.5$) ③ 미디어 법제 개편(안) 마련 추진율(0.2) : (정책연구 실시 $\times 0.3$) + (의견수렴 진행 $\times 0.3$) + (법안 마련 $\times 0.4$)	

②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I-2-②)

□ 추진배경

- 디지털 미디어의 기술 발전으로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효과적 활용을 통해 국민의 보편적 미디어 복지권을 보장하고, 미디어 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전하고 행복한 미디어 생활을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 지원 필요

< 국정기조와 연계성 >

-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 및 시청자권의 제고(국정 7-3)
- 미디어 접근성 보장(업무 3-2)
-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강화(업무 3-3)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상설 미디어교육 운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12개)를 통해 미디어에 대한 이해·활용 교육, 방송제작 시설·장비를 활용한 실습 등 맞춤형 미디어교육 실시
 - (생애주기별·대상별 맞춤형 교육) 유아기·청소년기·청장년기 등 생애주기별 필요역량에 따른 커리큘럼 개발, 배움의 현장 방문 등 미디어 이론·체험교육 실시
- 디지털 기술 고도화 환경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도 빠짐없이 특성에 맞는 미디어 교육 제공

구분	주요내용
유아	건강한 미디어 이용습관 형성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등에 방문하여 스마트폰 활용, 미디어 이용 규칙 만들기 등 놀이형 미디어교육 제공
청소년	미디어 분야 진로 탐색을 위해 학교 교과 및 동아리(초중고), 자유학기제(中), 고교학점제(高) 등과 연계교육 제공
청장년	1인 미디어 콘텐츠 기획·촬영·편집 등 미디어 전문 인재 양성 및 취·창업 연계교육 제공(지역 센터 및 온라인을 통한 상시교육)
노인	65세 이상 노인, 퇴직자 등에 디지털기기(키오스크 등) 활용 교육
장애인	발달장애인·특수학교 학생 등에 미디어를 통한 자기표현 교육
다문화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 등에 한국사회 적응 위한 미디어교육

- **(미디어 인프라 강화)** 시청자미디어센터 접근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시설·장비를 탑재한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운영, 미디어교육 정보 및 강좌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 운영

구 분	주요내용
미디어 나눔버스	· 지역 간 차별 없는 미디어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서산간 지역 등에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운영
미디어교육 통합플랫폼	· 교육자료 제공 및 온라인 학습관리 등 통합적이고 안정적인 미디어교육 지원이 가능한 온라인 통합플랫폼 운영

- **(미디어 전문성 강화)** 미디어교육 효과성 조사, 강사 양성·연수, 미디어교육 관련 정책연구 등 미디어 교육의 전문성 강화 추진

구 분	주요내용
미디어교육 효과성 조사	· 센터 교육 수강생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 수강 전후의 미디어 역량 차이를 분석
강사 양성·연수	· 미디어교육 신규 강사 양성 과정을 위한 자격검정과정을 운영하고 기존 강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과정 운영
미디어교육 연구	·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및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교수학습자료 개발 수행
미디어교육 전문지 발간	· 미디어교육 분야 교·강사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 최신 동향, 교육 우수사례 등을 담은 미디어교육 전문지 '미디어리' 발간

- **(미디어교육 참여행사)**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별 다양한 주간 행사, 공모전 등 지역민 중심의 소통·참여 행사 개최

구 분	주요내용
장애인 미디어 주간	·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는 배리어프리 영화상영·전시회·특강·체험 등 미디어 주간 개최
청소년 미디어 주간	· 청소년 미디어 역량 및 교육 확대를 위한 공모전·특강 등 미디어 주간 운영
미디어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 미디어교육 분야 교·강사의 우수 교육사례를 발굴·시상하고 공유·확산하기 위한 공모전 개최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상설 미디어교육 개시	'26.2월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개시	'26.3월
2/4분기	미디어교육 연구용역 기관 공모 및 선정	'26.4월
	미디어교육 운영	'26.4월
3/4분기	청소년 미디어 주간 개최	'26.8월
	청소년 미디어교육 2학기 운영	'26.9월
4/4분기	미디어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26.11월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26.10~11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청소년, 미디어교육 교사강사 등 미디어교육 참여자의 현장의견 수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행사	청소년 미디어 주간	'26.8월
	미디어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26.11월

□ 기대효과

- 전 국민에 차별 없는 미디어교육 제공으로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쉽게 접근하여 올바르게 이해·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억 원)

	회계구분	'25	'26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Ⅱ-1-일반재정③)			
① 시청자 권익보호 및 참여 활성화(3133)	기금	224.33	213.63
		(237.09)	(224.57)
▪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303)		224.33	213.63
- 미디어 역량교육 강화		49.47	11.8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93.0	80.1	81.1	81.1	'26년 예산 수준을 고려하여 '25년 실적치를 목표치로 설정 ※ '24년부터 지표 측정 조사 전반 재설계로 최초 목표치 신규 설정	7점 리커트 척도 (100점 만점 환산)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센터 이용자 설문 조사 (E-mail, 전화 등)
미디어 역량 향상도(%)	6.18	6.75	7.47	7.6	'23년 실적 대비 '24년 실적 증가율 (9.2%)을 '25년 목표치 (7%)에 적용 하여 '26년 목표치 설정	{(교육 후 미디어 역량 점수 -교육 전 미디어 역량 점수) /교육 전 미디어 역량 점수}×100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센터 이용자 설문 조사 (온라인)

③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I-2-③)

□ 추진배경

- 지역방송은 지역 공론의 장으로 지방자치 실현, 지역성·다양성 구현, 재난방송과 같은 ‘미디어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 OTT의 확산 등 미디어 시청환경 변화로 인한 경영악화로 콘텐츠 경쟁력이 약화되고 지역방송 본연의 역할 수행이 어려워 지원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프로그램 제작지원)** 지역밀착 우수 프로그램 제작지원 확대, 신규 미디어 대응 강화로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향상 및 지역성 강화
 - 지역 밀착형, 경쟁력 강화, 신유형 콘텐츠 분야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 지역-해외방송사 간 공동제작 프로그램 인센티브 부여
- **(유통체계 강화)** 국내·외 콘텐츠 시장 판로 개척을 통한 신규수익원 발굴 등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기반 조성
 - 해외 콘텐츠마켓 참가, 우수 콘텐츠 재제작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지역 콘텐츠가 유통될 수 있도록 파트너십 구축 지원
- **(재직자 교육 지원)** 급변하는 방송환경 대응력 향상 및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
 - 지역방송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하고 세분화된 방송사별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교육 지원 대상 확대 추진
- **(중·장기 지원계획)** “제5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2027~2029년)” 수립을 통한 중·장기적인 지역·중소방송 지원책 마련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제작지원 프로그램 공모·심사 및 지원작 선정	'26.2~3월	
	상반기 맞춤형 교육 과정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26.3~6월	
2/4분기	상반기 지역방송 재제작 콘텐츠 선정 및 지원	'26.4~6월	
	피칭포럼 교육과정 참가자 모집 공고	'26.5월	
	상반기 콘텐츠 마켓 참가 지원	'26.6월	
3/4분기	프로그램 제작지원 방송사 현장점검	'26.7~8월	
	하반기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26.7~12월	
	국내 피칭포럼 참가 지원	'26.9월	
	하반기 지역방송 재제작 콘텐츠 선정 및 지원	'26.8~12월	
4/4분기	지역방송 콘텐츠 교류협력 행사 개최	'26.11월	
	제작지원 프로그램 시청·칭취자 만족도 조사	'26.12월	
	하반기 콘텐츠 마켓 및 피칭 포럼 참가 지원	'26.12월	
	제5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	'26.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사업관계자 의견수렴) 지역·중소방송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작 지원, 유통활성화 관련 추진방향, 교육과정 수요 등 사업계획 및 중·장기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 (사업 설명회) 제작지원 분야 및 세부내용, 회계 정산 규정, 해외 유통·마케팅 전략 등 세부내용 안내, 의견수렴 실시
- (제작지원 프로그램 현장점검) 제작지원 선정 프로그램별 방송사 현장 방문을 통해 제작진행 경과 점검 및 건의사항 등 의견 청취
- (지역방송 콘텐츠 교류협력 행사) 지역방송 콘텐츠 교류협력 행사 개최를 통해 국내·외 방송사 공동제작, 유통 협력 등 파트너십 강화 및 교류협력 방안 의견 청취

구분	내용	세부일정
사업관계자 의견수렴	지역·중소방송사 사업 관련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작지원, 유통활성화 관련 지원사업, 교육과정 수요 및 중·장기 지원 계획 수립 등 의견수렴	'26.1월, 11월
사업 설명회	제작지원 분야 및 세부내용, 회계 정산 규정, 해외유통·마케팅 전략 등 사업 관련 담당자 대상 세부내용 설명 및 의견수렴	'26.2월
현장점검	제작지원 선정 프로그램별 방송사 현장방문을 통한 제작현황 점검 및 의견 청취	'26.7~8월
교류협력행사	지역방송 콘텐츠 교류협력 행사 개최를 통한 국내·외 방송사 공동 제작, 유통 협력 등 파트너십 강화 및 의견 청취	'26.11월

□ 기대효과

-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 방송품질 향상 및 콘텐츠 경쟁력 제고 → 콘텐츠 유통 활성화 및 수익 창출 → 제작비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여 건전한 지역문화 창달을 실현하는 지역방송 발전기반 마련
- 지역방송사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역민 소통 강화, 공익·공공성 강화 등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억 원)

		회계구분	'25	'26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Ⅱ-1-일반재정①)				
① 방송인프라 지원(3131)		기금	44.64	54.64
			(582.3)	(418.6)
▪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308)			44.64	54.6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제작지원 프로그램 시청·청취자 만족도(점)	87.7	87.8	88.2	88.2	최근 3년('23~'25년) 실적치의 평균(87.9)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제작지원 프로그램 시청·청취자 만족도를 정량화된 설문을 통해 계량 측정 (7점척도 설문을 백분율로 환산)	시청·청취자 만족도 조사 결과
콘텐츠 마켓 출품 프로그램 수(개)	208	233	247	244	'25년 예산 감액분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24년도 실적과 동일하게 설정	참가마켓 출품 프로그램 수 측정	사업결과보고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점)	-	-	신규	80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정 및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 측정을 위해 참가자의 '만족' 이상의 결과 도출을 목표로 80.0점을 목표로 설정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를 정량화된 설문을 통해 계량 측정 (5점척도 설문을 백분율로 환산)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조사 결과

④ 정확·신속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I-2-④)

□ 추진배경

- 재난 및 매체환경 변화에 따라 재난정보 전달방식을 고도화하여 정확·신속하게 재난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이 재난·재해로부터 신속히 대응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방송 강화 필요
- 최근 노후화된 장비, 무정전 전원장치(UPS) 배터리 화재, 전력 설비 이상 등으로 화재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방송시설의 체계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방송시설 안정성 확보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재난방송 의무사업자(144개사)의 재난방송 상황을 AI 기능을 활용한 재난방송 감지시스템으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재난 상황을 전파하고,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방송사에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송출되도록 독려(전화) 조치
-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 콘텐츠 제작('26년도 TV·라디오용 각 90편), 재난방송 수어통역 교육 콘텐츠를 제작('26년도 20편)하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 공유
- 재난방송 주관방송사(KBS)는 수어 재난방송의 의무를 부과하고 그 외 방송사는 노력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접근성 강화
- 재난방송의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와 방송사 지원 강화 등을 규정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 발의하여 재난방송 체계 일원화 및 종합정책 근거 마련

- 방송중단 등 방송재난 발생 시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전국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26년 36개사 162개 시설) 실시, 방송재난관리 기본 계획 수립 및 주요 10개사 대상으로 방송 송출 이중화 여부 확인, 방송재난 사후관리 등 내용을 포함한 방송재난관리계획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하여 방송재난 예방 활동 적극 추진
- 전국 도로·철도 터널 등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실시('26년 약 5,900개소), 수신환경 불량 터널 대상으로 기술 컨설팅 지원('26년 190개소) 확대, 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설비 설치지원('26년 218대) 확대를 통해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에 기여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국회 의결(제40조 제4항, 제40조의2 제4항)	'26.1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제40조 제4항, 제40조의2 제4항)	'26.2월	
	해빙기 대비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	'26.2~3월	
	'25년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결과 공표	'26.3월	
2/4분기	하절기 대비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	'26.5~6월	
3/4분기	'26년 방송사업자 방송재난관리계획 수립	'26.9월	
4/4분기	재난방송 관리체계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26.11월	
	'26년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26.11월	
	동절기 대비 중요방송시설 안전점검	'26.11~12월	
	'26년 주요방송사 방송재난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26.12월	
	'26년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및 기술 컨설팅 완료	'26.12월	
	'26년 재난방송 수신환경 중계설비 설치 지원 완료	'26.12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국회 발의	'26.12월	
연중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수어방송 실시(KBS)	연중	
	재난 콘텐츠 제작·확산	연중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의 상설 협의	연중	
	실시간 재난방송 모니터링(재난방송 종합상황실)	연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재난방송 관계기관 상시 협력) 산불, 태풍, 집중호우 등 재난발생 시 재난방송을 통해 효율적인 재난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재난 방송협의회 등을 통해 관계기관(행안부 등)·방미통위·방송사 간 협력

- (방송시설 현장점검) 주요 방송사 재난방송 대응체계, 계절별 자연 재난에 대비한 방송시설 안전상태·비상대응 체계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

□ 기대효과

-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에서 24시간 재난방송 실시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정확·신속하게 재난방송을 전달하고, 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콘텐츠를 제작·공유하여 국민들의 안전의식 제고
-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수어 재난방송 의무 부과 및 그 외 방송사가 노력하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수어방송 제작 지원을 통해 재난 취약계층의 재난 정보 접근권 보장
- 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음영지역에 라디오·DMB 수신환경을 개선하여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방송 수신률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안전 확보 및 재난피해 예방에 기여
-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 실시, 방송재난관리계획 수립·이행 여부 점검 등 종합적인 방송재난관리를 통해 평상시 및 재난 상황 시 안정적인 방송서비스를 제공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국회 발의를 위해 적극 지원하여 재난방송의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방송사 지원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억 원)

		회계구분	'25	'26
방송통신행정지원(성과관리 비대상)				
① 방송통신운영지원(7131)			8.41	39.32
			(44.08)	(73.82)
▪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307)		일반회계	8.41	39.32
- 방송재난관리 강화			2.00	2.20
- 방송재난관리 활동지원			0.20	0.20
- 비상대비 및 재난안전 활동지원			0.36	0.32
-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5.85	32.58
-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	4.02*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I-1-일반재정①)				
① 방송통신운영지원(3135)			26.86	32.86
			(67.12)	(64.99)
▪ 재난방송 운영지원(307)		기금	26.86	32.86
- KBS 재난방송 운영지원			21.19	27.19
- 방송통역 수어통역사 재교육			-	-
-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운영			5.67	5.67

* 해당 내역사업은 조직개편('25.10월)에 따라 과기정통부에서 방미통위로 이관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재난콘텐츠 제작 달성률(%)	신규	100	100	100	재난유형별 예방정보와 재난 발생시 국민이 취해야 할 국민행동요령 콘텐츠와 재난방송 수어통역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26년도 목표치(110편)를 100%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 설정	(제작편수/제작 목표편수)×100 - '26년 목표: 110편	내부자료
방송재난 대비 중요방송시설 안전점검율(%)	100	100	100	95	중요 방송시설 취약·위험 요인을 사전 발굴 개선하여 중단 없는 방송 서비스 실시를 위해 '26년도 목표치(104개소)를 100%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 설정	('26년도 안전점검 시설 수/안전점검 대상총시설수)×100 - '26년 목표 104개소	내부자료

(1) 주요 내용**□ 디지털·미디어 산업 성장기반 조성**

- 최신 글로벌 방송·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각종 규제개선 및 미디어 분야 법체계 전면 개편을 통한 국내 방송산업의 지속 성장 기반 마련
- 홈쇼핑분야 재승인규제 합리화, 홈쇼핑-유료방송 상생협력 방안 마련 등을 통한 국내 홈쇼핑 산업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발판 마련
-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판로 확보를 위한 지역채널커머스 방송 법제화 추진 및 케이블TV와 홈쇼핑의 상생성장 도모

□ 유료방송 상생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이용자 권익 제고

- 유료방송의 공적책임 충실화를 위한 재난·재해 대비 안전점검 및 유료방송 동일 계열사 동일 심사로 재허가 심사 시 사업자 부담 완화
- 유료방송 이용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채널 및 이용요금 관련 지침 개선 추진 등 규제 완화

□ 미디어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AI·디지털 기반 미디어 신기술 육성

- 방송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디지털 기반 방송콘텐츠 제작 및 해외 진출 지원, 전략 펀드를 통한 투자 활성화 추진
- AI·디지털 기반으로 방송미디어 산업의 생산성·효율성 강화를 위해 신기술 개발 및 현장 수요 기반의 AI+미디어 융합 기술 교육 추진
- 전업 크리에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 청년 크리에이터 선도기업 육성과 크리에이터 보호 생태계 조성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3	'24	'25	'26			
방송산업육성 활성화 추진율(%)	100	100	100	100	방송산업진흥을 위해 각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유료방송 품질제고 추진율, 미디어·콘텐츠 경쟁력 강화 추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목표 설정	$< \textcircled{1} + \textcircled{2} >$ $\textcircled{1}$ 유료방송 품질 제고 추진율 $\times 0.5$ $< \textcircled{1} = \textcircled{2} + \textcircled{3} + \textcircled{4} >$ $[\textcircled{2}]$ (영상 및 음량 품질 기준 충족 사업자수/전체 유료방송사업자수 (18개사) \times 100% $\times 0.4$) $+$ $[\textcircled{3}]$ (의견수렴 실적 건수/의견수렴 목표 건수) $\times 100\%$ $\times 0.3$ $+$ $[\textcircled{4}]$ (홍보 실적 도달 수/홍보 목표 도달 수) $\times 100\%$ $\times 0.3$ $\textcircled{2}$ 미디어·콘텐츠 경쟁력 강화 추진율 $\times 0.5$ $< \textcircled{2} = \textcircled{5} + \textcircled{6} >$ $[\textcircled{5}]$ 방송·OTT 콘텐츠 제작시 AI·디지털 기술 투입비율(실적) /20% 이상(목표) $\times 100\%$ $\times 0.7$ $[\textcircled{6}]$ 콘텐츠 전략펀드 자펀드 조성(실적)/1 건 이상(목표) $\times 100\%$ $\times 0.3$	추진계획서, 보도자료, 결과보고서 등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사업자(OTT)의 성장으로 종합유선방송(SO)·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IPTV)·위성방송은 역성장·정체
- 유료방송 시장 정체, 콘텐츠 제작비 증가 등으로 인해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지상파·PP)간 콘텐츠사용료 관련 갈등 심화

□ 갈등요인

- 유료방송사는 방송매출 감소, 시청률 하락 등으로 콘텐츠사용료 인하를 주장하는데 반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은 제작비 증가 등으로 콘텐츠사용료 인상을 요구

□ 갈등관리계획

- 사업자 간 대가 거래 협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입자수, 시청률 등의 신뢰성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갈등 조정 지원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디지털·미디어 산업 성장기반 조성(I-3-①)

□ 추진배경

-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국내시장 잠식에 따라 매출·광고·가입자 감소, 제작비 증가로 국내 미디어 생태계 붕괴 위기에 직면
 - 위기 극복을 위해 방송미디어·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필요
- 온라인·모바일 커머스의 급부상으로 판매 경쟁이 심화되고 수수료·매출 구조가 약화되는 등 국내 홈쇼핑 업계의 위기 지속
 - 홈쇼핑 산업 전반의 체질개선을 위한 정부 대책 필요
- 내수 부진 및 고비용 환경 여파로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감소와 비용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방송 기반의 판로확보 지원 필요
 - * 소상공인 폐업은 수익성 악화, 매출 부진이 86.7%로 가장 높았으며,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감소·인건비 상승 등이 원인(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중기중앙회)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송미디어 진흥전략)**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을 통해 재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및 진흥 정책 수립
 - OTT 등 신규 미디어와의 규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 미디어에 부과되어 온 과도한 규제 완화 방안 마련
 - 국내 OTT 등 방송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송콘텐츠 제작·유통에 AI·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성 제고 및 부가가치 확대
-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홈쇼핑 산업의 안정적 성장 구조 구축, 홈쇼핑 정책의 신뢰성·수용성 제고, 방송미디어 생태계의 균형적 발전 유도를 통해 홈쇼핑 산업의 지속 가능한 기반 마련

- 자율적 경영 여건 확충, 규제 운영의 실효성 강화, 상생형 생태계 구축 등 홈쇼핑 산업 전반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 홈쇼핑을 판로로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입점 기회 제공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특화된 데이터홈쇼핑 채널 도입 검토

○ **(홈쇼핑 공적 역할 강화)**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TV(우리, 홈앤)·데이터홈쇼핑(10개)사 재승인 심사를 통해 사업자의 공적 역할 강화*

* 방송법 제10조: 홈쇼핑 승인 심사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

- 홈쇼핑의 중소기업 편성, 시청자·소비자 보호 등 재승인 조건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시정조치 등을 통하여 공적책무 제고

○ **(홈쇼핑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역 우수상품을 발굴하여 홈쇼핑사* 연계 방송 및 홍보 지원

* TV홈쇼핑(7개사) 및 데이터홈쇼핑(10개사) 등 총 12개사(겸업 제외)

- 지자체·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지역상품 발굴, 홈쇼핑사 등 전문인력을 통한 컨설팅, 홈쇼핑사 방송 편성 및 홍보 추진

○ **(PP산업 활성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M&A 절차 간소화, 부실PP 퇴출을 통해 우수한 채널로의 자본유입 촉진, PP산업의 건전성 제고 등 방송시장의 선순환 구조 정착

- PP의 계열회사 합병 시 변경 등록 의무 완화, 채널 양수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행정부담 경감 및 사업 재편 활성화

※ (예시) 방송법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 조항 적용대상에 PP 추가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홈쇼핑사 사업계획서 및 재승인 조건 전년도 이행실적 접수	'26.3월	
	홈쇼핑사 이행실적 점검(재승인 심사 대상)	'26.3월	
2/4분기	데이터홈쇼핑(10개) 재승인 심사	'26.4월	
	TV홈쇼핑(우리, 홈앤) 재승인 심사	'26.6월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대국민 공청회	'26.6월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	'26.6월	
	(가칭)'방송미디어 진흥전략' 관련 정책연구 착수	'26.6월	
3/4분기	홈쇼핑사 이행실적 점검 추진	'26.9월	
	'26년 부실PP 직권 취소 계획(안) 마련	'26.9월	
4/4분기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우수제품 홈쇼핑 방송 판매	'26.12월	
	홈쇼핑사 중소기업 지원 관련 주요 통계 조사	'26.12월	
	'26년 부실PP 직권 취소 추진	'26.12월	
	방송채널사용사업 M&A절차 간소화 법률 개정안(안) 마련	'26.12월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채널 관련 정책방안(안) 마련	'26.12월	
	(가칭)'방송미디어 진흥전략' 발표	'26.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방송미디어진흥전략 마련을 위한 지상파·유료방송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 방송업계 전반 의견수렴
- 홈쇼핑사(TV·데이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중소 납품업체, 시청자, 소비자 등과 간담회, 공청회 등 개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홈쇼핑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시청자 간담회	'26.3월
간담회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개척 시범사업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26.4월
공청회	홈쇼핑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	'26.6월
회의	(가칭)'방송미디어 진흥전략' 관련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26.11월

□ 기대효과

- 국내 방송미디어 시장의 규제 형평성 제고, 콘텐츠 제작·유통의 AI 혁신 지원을 통해 방송미디어 산업의 지속 성장 및 활성화 도모
- 홈쇼핑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 확대 지원을 통해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적 역할(중소기업 판로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제고
- PP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여 자본의 효율적 재배분과 우수 채널 중심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부실PP 정비를 통해 방송시장 전반의 건전성·순환 구조 확립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추진율(%)	100	106	100	100	유료방송시장의 규제개선 및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실적 (목표 2건)을 달성율, 업계·전문가 등 의견수렴 실시 추진율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산출 ※ 제도개선 목표건수: 2건 - 방송법령·행정규칙 개정, 가이드 라인·지침 제·개정 실적 ※ 의견수렴 실시 목표건수: 4건 - 유료방송 업계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실적	<①+②> [①(방송 법령· 행정규칙 개정*, 가이드라인·지침 제·개정 실적 달성율(실시건수/ 목표건수×100%) ×0.6)] + [②의견 수렴 실적 추진율 (실시건수/ 목표건수 ×100%) ×0.4] * 법령은 개정안 마련 또는 입법추진(정부안 제출 의원입법) 실적	입법예고문, 내부보고서, 보도자료 등
홈쇼핑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확보 지원율(%)	100	100	100	100	홈쇼핑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 확보를 위한 측정지표와 효과에 따른 가 중치를 고려하여 달성률 100%를 산출	<①+②+③+④> [①(홈쇼핑 재승인 심사계획 수립·시행(2건) ×100%)×0.3]+ [②(중기상품 편성(100개) ×100%×0.2)]+ [③(중기상품판매 수수료율(33%↓) ×100%×0.2)]+[④(홈쇼핑 주요 통계공개(1회) ×100%)×0.3]	보도자료, 결과보고서 등

② 유료방송 상생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이용자 권익 제고(I-3-②)

□ 추진배경

-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사업자(OTT)의 성장으로 지상파·종합유선방송(케이블TV)·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위성방송은 역성장·정체
- 유료방송 시장(매출액*, 가입자**) 정체, 콘텐츠 제작비 증가 등으로 인해 유료방송사-콘텐츠사(지상파·PP)간 콘텐츠사용료 관련 갈등이 심화

* 방송시장 전체 매출액: '22년 19.9조 원 → '23년 19.0조 원 → '24년 18.8조 원

** 유료방송 가입자 수: 3,638만('24.上) → 3,636만('24.下) → 3,623만('25.上)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유료방송 상생협력 기반 조성 】

- (시청데이터 기반 생태계 상생) 유료방송 시청 데이터 기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디지털 친화적 방송광고 생태계 조성방안(안) 수립
- (지역채널 커머스 제도화) 실증특례 기간 만료에 따른 지역채널-소상공인 상생협력 커머스 방송* 임시허가 추진

* 케이블TV(종합유선방송)가 운영하는 지역채널에서 시간을 한정(1일 3시간)해 지역 특산품 등을 판매하는 방송

- (가입자수 검증) 시장점유율 제한(1/3 초과금지) 준수 여부 및 정책 수립 시 활용가능한 공신력 있는 통계 제공을 위한 가입자수 반기별 조사·검증

【 유료방송 제도개선 및 이용자 권익 제고 】

- (유료방송 사업 자율성 제고) 유료방송사가 채널 및 이용요금을 자율적으로 구성·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 추진('26.下)

- (유료방송 품질향상) 객관적인 유료방송서비스 품질 정보제공과 사업자간 서비스경쟁 촉진을 위해 유료방송 품질평가 실시 및 결과공표('26.12월)
 - ※ 품질평가 추진계획 수립 → 품질평가 실시(7~11월) → 결과발표(12월)
- (역외재송신) 역외재송신 승인 기간이 만료된 위성방송사업자(스카이라이프) 대상 지상파 방송(OBS)의 역외 재송신 심사 추진

【 유료방송 공적책임 충실화 】

- (재허가 심사) 유효기간 도래·만료 유료방송사업자(9개)* 대상 공적책임 이행여부 점검을 위한 재허가 심사 및 방미통위 안건 상정·의결
 - * 위성(스카이라이프), SO(금강,푸른), RO(동두천,현대,심천,미금,금일,청산)
- (유료방송시설 안전점검) 유료방송사업자(18개사, IPTV·SO·위성방송)를 대상으로 재난·재해에 대비한 중요시설 안전점검 실시('26.上)
- (정보보호·회계분리 점검)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한 유료방송사 정보보호 현황 점검(1월), IPTV의 공정 경쟁을 위한 회계 적정성 검증(12월)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유료방송사 정보보호 간담회 개최	'26.1월	
	위성, 중계유선방송 재허가 심사 기본계획(안) 수립	'26.3월	
	위성, 중계유선방송 재허가 심사 세부계획(안) 수립	'26.3월	
2/4분기	종합, 중계유선방송 재허가 여부 결정	'26.5월	
	데이터 기반 유료방송 생태계 혁신 관련 협의체 출범	'25.5월	
	'25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조사·검증 및 발표	'26.5월	
	중계유선방송 재허가 심사 추진	'26.6월	
	위성방송 재허가 심사 추진	'26.6월	
	전국 유료방송시설 안전점검 추진	'26.6월	
3/4분기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추진	'26.8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추진	'26.8월	
	제6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전문심의회 구성	'26.8월	
4/4분기	'26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조사·검증 및 발표	'26.11월	
	'26년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발표	'26.12월	
	데이터 기반 유료방송 생태계 혁신 관련 정책제언(안) 도출	'25.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시청데이터 기반 생태계) 「데이터 기반 유료방송 생태계 혁신 얼라이언스」 발족 및 ▲데이터 ▲산업 ▲법·제도 협의체 분과 운영
- (유료방송 자율성 제고) 유료방송사의 채널 및 이용요금 자율적 구성·변경 등 사업 자율성 제고 정책 수립을 위한 유료방송사 의견 수렴
- (유료방송 품질평가) 품질경쟁 촉진 및 이용자 권익 제고를 위해 '26년 품질평가 추진계획 수립 시 사업자·전문가·이용자 의견을 반영

구분	내용	세부일정
자문회의	품질평가 관련 전문가(학계·시민단체·연구계 등) 의견 수렴	'26.5월
간담회	품질평가 관련 유료방송사업자(IPTV·위성·SO) 의견 수렴	'26.7월
온라인 패널조사	품질평가 관련 인식 및 개선 필요 사항 설문조사	'26.8월

- (가입자수 검증) 가입자수 검증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반기별 전문 심의회 운영(4, 10월) 및 검증 결과에 대한 사업자 의견수렴(5, 11월) 실시
- (정보보호 간담회) 빈발하는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한 유료방송사 정보보호 현황 공유 및 정책 제언 청취(1월)

□ 기대효과

- 유료방송 제도개선 및 유료방송사의 품질경쟁 활성화 등을 통해 이용자 권익을 제고하고 유료방송 산업 경쟁력 강화
- 공정한 재허가 심사 및 유료방송시설 안전점검 등을 통해 공적책임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료방송 환경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억 원)

		회계구분	'25	'26
방송산업육성기반구축(Ⅳ-1-정보화②)				
①방송산업육성기반구축(1140)			10.96	9.30
			(10.96)	(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미디어산업 육성기반 구축(정보화)(301) 디지털미디어 실태조사(내역사업) 유료방송가입자 실태조사(내역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료방송 가입자 수 조사·검증 -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기금	10.96	9.30
			10.96	9.30
			(7.22)	(7.22)
			1.52	1.52
			5.70	5.7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유료방송사 상생협력 추진율(%)	100	100	100	100	유료방송의 상생협력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각종협의체 운영, 회의, 협력방안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로 목표치 설정	$\langle \text{①}+\text{②}+\text{③}+\text{④} \rangle$ [①실무협의(횟수/3회) × 100% × 0.2] + [②고위급참석협의(횟 수 / 2 회) × 100% × 0.2] + [③ 전문가의견수렴(횟수/5회) × 100% × 0.2] + [④협력방안·제도 개선안 마련 (1건) × 100% × 0.4]	보도자료, 결과보고서, 회의 개최계획, 제도개선(안) 등
이용자 권익 제고 추진율(%)	100	100	100	100	유료방송산업환경 개선을 통한 이용자의 권익제고를 위해 유료 방송 제도개선(안) 마련 건수를 1건으로 설정	$\{ \text{유료방송 정책 제도 개선(안)마련건수} / (\text{목표건수}) \times 100\%$	법령·고시, 지침 등 개정안 마련, 주요 제도 개선 계획, 보도자료, 결과보고서 등
유료방송 품질제고 추진율(%)	100	100	100	100	이용자가 직접 평가하는 '서비스 단계별 만족도 조사' 결과 등 이용자 중심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를 위한 의견수렴,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영상 및 음량 품질) 과기정통부 고시에 따른 표준 음량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자 수로 전체 18개 사업자를 목표로 설정 - (의견수렴) 추진계획 수립 시 이용자, 이해관계자, 시민단체·전문가 측 의견수렴 건수 3건을 목표로 설정 - (SNS 홍보 도달 수) '블로그 게시물 조회 수+SNS 홍보물 도달 수'로 작년 실적과 동일한 3만회를 목표로 설정	$\langle \text{①}+\text{②}+\text{③} \rangle$ [①(영상 및 음량 품질 기준 충족 사업자수/ 전체 유료방송사업자수 (1 8 개 사)) × 100% × 0.4] + [②(의견수렴 실적 건수/의견수렴 목표 건수) × 100% × 0.3] + [③(홍보 실적 도달 수/ 홍보 목표 도달 수) × 100% × 0.3]	결과보고서, 보도자료 등

③ 미디어·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AI·디지털 기반 미디어 신기술 육성(I-3-③)

□ 추진배경

- 생성형 AI의 등장 및 방송 다변화*,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의 성장 등 방송미디어 시장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고,

* OTT 중심 플랫폼 확장, 콘텐츠 제작방식·주체 다양화, 맞춤형 미디어서비스 고도화 등

- AI·디지털 기반 방송미디어 분야의 생산성·효율성 제고 및 新성장 영역 육성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방송미디어 선순환 생태계 구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미디어·콘텐츠 경쟁력 강화 】

- (방송콘텐츠 기획·제작 지원) AI 기술을 활용한 방송콘텐츠의 기획·제작비를 지원하여 방송산업의 생산성 혁신(비용↓, 품질↑)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방송콘텐츠 유통 지원) 국내외 방송콘텐츠 마켓*과 연계하여 방송 콘텐츠 기획안 투자설명회 개최, 상영회 개최 등 K-콘텐츠 홍보 지원

* 국내: 부산콘텐츠마켓(6월, '26년 신규), 차세대 미디어 페스티벌(11월)

국외: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4월, 프랑스),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11월, 네덜란드), 아시아TV포럼&마켓(12월, 싱가포르)

- (전략펀드)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운영*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킬러 콘텐츠·IP·기술, 기업 등 전략적 투자 추진

* (~'25년) 1호 모자펀드 및 2호 모펀드 결성, ('26년) 3호 모펀드 및 2호 자펀드 결성

【 미디어 신기술 육성 】

- (미디어 R&D) 고비용·노동집약적 방송미디어 프로세스(기획-제작-서비스)의 디지털·AI 기반 지능화·자동화 및 신규 서비스 R&D 추진
 ※ '26년 2개 세부사업(12개 과제) 총 137.67억 원(신규 97.67억 원, 계속 40억 원)
- (R&D 성과확산) 국가R&D 결과물의 성과확산(사업화, 기술이전 등) 및 시장수요에 기반한 과제발굴·추진을 위한 기술교류회 추진
- (AI+방송 융합인력 양성) AI 신기술에 대한 현장수요 맞춤형 교육을 통해 방송·미디어 현장에 필요한 핵심 AI+방송 융합인재 양성

【 크리에이터 미디어 생태계 조성 】

- (인력 양성) 전업 크리에이터, 유망 신직업(커머스 크리에이터, 채널 관리자 등) 육성을 통한 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
- (창업 지원) '크리에이터미디어콤플렉스(서울)'를 통해 기업 입주공간, 제작 스튜디오 제공, 비즈니스 연계 등 청년 일자리 허브 역할 강화
- (글로벌 진출) 사업확장 컨설팅, 투자교육, 국내·외 투자설명회, 해외 박람회(미국/중국 라이선싱 엑스포 등) 참가 및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지원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디지털미디어이노베이션기술개발(R&D) 신규과제 공고	'26.1월	
	AI·디지털 기반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고	'26.2월	
	AI·디지털 기반 미디어융합인재 사업 공고	'26.3월	
	지역방송 제작역량 강화 사업 공고	'26.3월	
	크리에이터 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 참가사 모집공고	'26.3월	
	크리에이터 미디어 신직업 육성 참가사 모집공고	'26.3월	
2/4분기	칸시리즈 연계, 방송콘텐츠 해외홍보 행사 개최	'26.4월	
	디지털미디어이노베이션기술개발 신규과제 선정 및 협약체결	'26.4월	
	전업 크리에이터 육성 참가사 모집공고	'26.5월	
	라이선싱 엑스포 연계 크리에이터 해외진출 지원	26.5월	

3/4분기	미디어 R&D 기술교류회 개최	'26.7월	
	K-DOCS 페스티벌 행사 개최	'26.8월	
	2026 크리에이터 미디어 대전 개최	'26.8월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자펀드 운용사 선정	'26.8월	
4/4분기	K-DOCS 다큐멘터리 해외 투자설명회 개최	'26.11월	
	2026 차세대 미디어 페스티벌 개최	'26.11월	
	방송·미디어 분야 AI 융합인재 양성 세미나	'26.11월	
	콘텐츠 전략펀드 모펀드(3호) 조성	'26.12월	
	콘텐츠 전략펀드 자펀드(2호) 조성	'26.12월	
	아시아TV포럼&마켓 연계, 방송콘텐츠 해외홍보 행사 개최	'26.12월	
	미디어 R&D 오픈랩 개최	'26.12월	
	디지털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실태조사 결과발표	'26.12월	
	미디어·콘텐츠 스타트업 투자설명회 개최	'26.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국내 방송사·OTT사, 솔루션 개발사, 크리에이터 및 관련 종사자, 방송미디어 예비인력 및 제작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 의견수렴

구분	내용	세부일정
사업설명회	2026년 디지털미디어이노베이션기술개발(R&D) 사업설명회	'26.1월
간담회	크리에이터미디어콤플렉스 이전 개소식 및 기업 간담회	'26.1월
사업설명회	2025년 AI·디지털 기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설명회	'26.2월
간담회	크리에이터미디어콤플렉스 입주기업 간담회	'26.2월
세미나	미디어 R&D 기술교류회	'26.6월
간담회	미디어 R&D 오픈랩	'26.11월
세미나	방송·미디어 분야 AI 융합인재 양성 세미나	'26.11월
컨퍼런스	국내 방송산업의 미래전략 모색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	'26.11월

□ 기대효과

- (미디어·콘텐츠 경쟁력) 방송제작에 AI·디지털 기술의 적용으로 방송산업 혁신(품질↑, 비용↓) 및 방송 미디어·콘텐츠 산업 투자 확대
- (미디어 신기술 육성) 미디어 융합·혁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R&D 지원 및 ICT 신기술 융합 교육을 통한 융합 전문인재 양성
- (크리에이터 미디어 생태계)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한 청년 창업 활성화 및 글로벌 성장 발판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억 원)

		회계구분	'25	'26
콘텐츠방송산업육성(Ⅱ-3-일반재정①)				
① 콘텐츠진흥(1131)	일반회계		41.57	41.57
			(81.57)	(179.24)
▪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320)			41.57	41.57
콘텐츠방송산업육성(Ⅱ-3-R&D①)				
① 콘텐츠진흥(1131)	일반회계		30	137.67
			(81.57)	(179.24)
▪ 프로그래머블미디어핵심기술개발(518)			30	40
▪ 디지털미디어이노베이션기술개발(520)			-	97.67
콘텐츠방송산업육성(Ⅱ-3-일반재정①)				
① 방송통신콘텐츠진흥(1131)	기금		243.97	172.92
			(243.97)	(172.92)
▪ 방송콘텐츠 진흥(301)			193.97	167.92
▪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308)			50	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미디어·콘텐츠 경쟁력 강화 추진율(%)	100	103	102	100	방송·OTT콘텐츠 제작 시 AI·디지털 투입비율*과 콘텐츠 전략펀드 자펀드 조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목표 설정 * AI 투입비율: AI·디지털 기술이 실제로 투입된 비용 /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예산 ※ '23년 방송콘텐츠 제작 AI 기술 활용 비중: 10.3%	$\lt \textcircled{1} + \textcircled{2} \gt$ [①방송·OTT 콘텐츠 제작시 AI·디지털 기술 투입비율(실적)/20% 이상(목표) $\times 100\% \times 0.7$ [②콘텐츠 전략펀드 자펀드 조성(실적)/1건이상(목표) $\times 100\% \times 0.3$	결과보고서, 투자유치실적 증빙, 펀드 운용기관 선정 결과 등
미디어 신기술 활성화 지원율(%)	100	116	110	100	미디어 R&D 신규과제 지원, 성과교류, 융합인재 교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목표 설정 * 미디어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전년대비(3개) 신규과제 확대 지원 ** AI 기반 R&D 성과교류회 연 2회 운영 *** 융합인재 교육 수요 확대를 고려하여 작년 수혜자(515명) 대비 도전적 목표	$\lt \textcircled{1} + \textcircled{2} + \textcircled{3} \gt$ [①미디어 R&D 신규과제 지원(실적)/8개(목표) $\times 100\% \times 0.4$ [②미디어R&D성과교류(실적) / 2건(목표) $\times 100\% \times 0.3$ [③융합인재 교육(실적) / 576명(목표) $\times 100\% \times 0.3$	공문, 보도자료, 결과보고서 등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육성 지원율(%)	100	100	103	100	크리에이터 미디어 생태계 강화를 위한 해외진출, 인력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 크리에이터 미디어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전년 대비(35건) 도전적 목표 ※ 인력양성 일부 사업종료, 예산규모, 단가 등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	$\lt \textcircled{1} + \textcircled{2} \gt$ [①해외진출 지원(실적) / 40건(목표) $\times 100\% \times 0.5$ [②인력양성(실적)/85팀(목표) $\times 100\% \times 0.5$	공문, 보도자료, 결과보고서 등

기 본 방 향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온라인상 피해 관련 정책이 소관에 따라 흩어져 있고 사각지대도 존재하여 종합적·체계적인 피해구제 지원 필요
-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 및 확산 가속화에 따라 기존의 ICT 관련 법률을 통한 이용자 보호의 한계를 보완한 법·제도 마련 필요
- 알고리즘으로 인한 확증편향, 불법정보 노출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및 선택권 보장
- 딥페이크, 사이버폭력 등 디지털 역기능 고도화·일상화에 따라 디지털 속 위험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윤리 역량 강화 필요
- 불법스팸이 국민의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의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불법스팸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최소화 필요
-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가 급속히 유포·확산되어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건전한 민주 공론의 장의 형성을 저해하고 있어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
- 단말기 유통법 폐지('25.7월 시행)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시장 혼란 및 이용자 피해 방지대책 마련 필요
- 온라인에서 기사 등 콘텐츠를 가리고 삭제 제한하는 플로팅 광고로 인해 이용자 불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할 필요
- 인터넷 플랫폼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할 필요
- 방송시장 정체, OTT 활성화 등으로 유료방송사업자간 가입자 확보 경쟁이 심화되어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발생 가능성 증가
- 위치정보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보호조치 교육 등을 통한 위치정보 보호에 대한 사업자 인식 제고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 그간의 성과

- 디지털 유산 승계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25.8월)
- 이용자가 유사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에 활용토록 사례집을 발간('25.2월) 하고, SKT 사이버 침해사고와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 사건을 직권조정결정('25.8월)으로 조정하는 등 통신분쟁 피해 구제
 - ※ 분쟁조정('24년 1,533건 → '25년 2,123건) 및 조정상담('24년 9,038건 → '25년 8,431건)
-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피해지원을 위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
 - ※ '25.12월 기준 4,181건, 총 누적 10,488건, '24년 대비 8.4% 증가
- AI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25.5월, 12월) 및 콘퍼런스 개최('25.11월) 등 정책네트워크 구성·운영
-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25.2월) 및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개설('25.10월) 등 사업자의 자율적인 서비스 개선 유도
- 본인확인기관인 KT, SKT 및 연계정보(CI) 이용기관인 롯데카드에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본인확인기관 서비스 안전성 및 연계정보 안전 조치 여부 등에 대한 대응
-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제 법제화('25.3월), AI 기반 악성문자 필터링 서비스 도입 및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이동전화 가입제한 강화('25.8월)
- AI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올바른 AI·디지털 이용의식 제고 및 역기능 예방·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윤리 교육 실시('25년 28.7만 명)
-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대상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실시('25년, 47개 서비스)
- 노년층·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피해예방 및 디지털서비스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25년, 55,010명)
- 인터넷상 불법촬영물 등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 및 특수부가사업자(웹하드·P2P)'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 실태점검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사업자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대상 사이버안심존 앱 보급·확산

- 팩트체크 전국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보판별능력을 제고하고, 팩트체크 교육·홍보 등 허위조작정보 대응기반 강화
-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가중 배상제도, 플랫폼 사업자 자율정책 수립·시행 의무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26.1.6. 공포)
- 위치정보 관련 법·제도 및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업자의 위치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25년 총 9회, 1,126명)
-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안전한 위치정보이용환경 조성 및 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보호 강화
- 단말기 유통법 폐지('25.7월 시행) 이후 시장 모니터링 및 사전 협의체 운영을 통해 하위 법령 입법 미비에 따른 시장 혼란을 방지
-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기만광고, 유통점 사전승낙서 미게시 영업 등 통신시장 불공정 행위 조사·점검을 통한 시정조치·제도개선 수행
- 플로팅광고 관련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 관련 안내서 배포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이용자 불편 개선
- 쇼핑·배달·교육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이용사업자+최종이용자) 피해유발 행위 집중 점검 추진
- SO 사업자의 불법 영업 관련 방송법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 사실조사 실시('24.11월~'25.5월)

◇ 중점 추진내용

- 통신분쟁조정 신속성·접근성·실효성 개선 등을 위해 상임(5인)·비상임(25인) 위원을 위촉·운영하고, 집단분쟁조정제도, 분쟁 조정 시 사업자의 참여 의무화, 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등 제도개선 추진
- 인공지능서비스 이용 아동·청소년 보호,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추진
-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통해 확증편향, 필터버블 등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 보호

- 가상융합서비스(메타버스) 사업자·이용자 대상 이용자 보호 현황 조사 및 서비스 인식 등 조사를 통해 안전한 메타버스 이용 환경 조성
- 전 국민 디지털 역기능 대응 역량 강화 및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디지털윤리 교육, 홍보 등 인식제고 활동 추진
- 디지털성범죄물 등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를 근절하고, 민간 자율적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고 '자율규제 권고(안)' 마련 추진
- 단말기유통법 폐지 후 시장 경쟁 활성화 및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 및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시책 마련
- 실생활에 밀접한 유·무선·결합 방송통신시장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시 점검·조사
- 인터넷 불편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금지행위 위반이 확인된 사업자 행정지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 앱 마켓 사업자의 서비스 정책, 운영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행위 점검 및 정책 개선 사항 발굴
- 방송사업자 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사실조사, 시정명령, 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권익 제고
- 위치정보 분야 중소·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화 지원 등으로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
-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LBSP) 운영을 통해 긴급구조 요청자 등의 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제공
- 방송통신시장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사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규제집행력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 전략목표와 임무 간의 상관성

- 방송통신시장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 행위 대응 강화를 통해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 보호·강화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3	3	9	13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I. 성장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여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① 휴대전화·이메일 스팸 수신량(통)
1. 신기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편익을 증진한다.		① 통신분쟁조정 해결률(%)
	①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보호 강화	① 온라인 이용자보호 관련 정책개선 건수(건)
	② 통신분쟁조정 신속성 및 피해구제 지원강화	①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실적(점)
	③ 인공지능 등 신기술 서비스 이용자 보호	①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활성화율(%) ② 안전한 메타버스 이용환경 조성 지원(%)
2. 국민 중심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한다.		① 디지털 윤리교육 만족도(점)
	① 통신서비스 이용자 기반 조성 및 위치정보의 안전성·활용 강화	①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역량 향상률(%) ② 위치정보 사업화 지원 만족도(점)
	②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구축	①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 불법정보 기술적 조치 개선율(%) ②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기술성능 평가 수행률(%)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한다.		① 방송통신시장 불공정 행위 개선 건수(건)
	① 방송통신시장 규제 정비 및 조사 효율화 추진	① 방송통신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규제정비 및 조사 효율화 추진율(%)
	②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및 불공정 행위 근절	① 통신시장 공정경쟁 활성화 지수(점)
	③ 부가통신시장 이용자 권익 증진	① 부가통신시장 이용자 권익 증진 지수(점)
	④ 방송시장 공정경쟁 촉진	① 방송 및 방송광고 시장 불공정 행위 개선 인식도(점) ② 유료방송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개선 제고율(%)

(1) 주요내용

□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조성

-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팸신고 처리, 정책적·기술적 조치 방안 마련,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규제 강화 등 대응체계 운영
- 전 국민 디지털윤리 역량 강화를 위해 유아, 청소년, 성인 등 다양한 계층 대상 맞춤형 디지털윤리 교육 및 홍보 등 인식제고 활동 추진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구제 및 불편해소

- 통신서비스 관련 국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분쟁조정 신속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불편 해소
- 온라인상 다양한 피해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처하는 일원화된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이용자 보호 강화 및 편의 증진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

- 인공지능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잠재적 위험·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내에서의 혐오·차별, 청소년 사이버폭력 등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메타버스 사업자·이용자 실태조사 추진

□ 이용자 권익 보호 정책 강화 및 실효성 제고

- 정보취약 계층별 맞춤형 피해예방 교육, 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등 정보제공을 통한 이용자 역량 강화
- 평가대상 서비스별 특성,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개선을 통해 평가의 실효성 제고
- 유족·친지들이 사망한 이용자의 사후조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 유산 승계 관련 제도 마련(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 마약, 도박 등 사회적 해악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불법정보에 대해 소관기관이 방미통위에 조치를 요청할 경우 방미통위가 사업자에게 직접 시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국내·외 인터넷 관문망(ISP) 및 이를 우회한 CDN(국내 임시저장 서버)* 까지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 강화
- * CDN(Content Delivery Network): 용량이 크거나 수요가 많은 콘텐츠를 캐시 서버에 미리 저장해 놓고, 이용자 요청 시 최적의 서버로부터 콘텐츠를 전달하는 서비스
-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조치의무 대상을 기존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 모니터링 및 점검 추진
- 민간 자율 허위조작정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민 대상 허위조작정보 대응역량 교육 및 청소년 팩트체크 대회 실시
-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및 협의체 지속 운영
- 이용자가 허위조작정보를 판별할 수 있도록 팩트체크 플랫폼을 구축하고, 투명성 센터 설립 추진을 통해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를 도모

□ 방송통신분야 공정한 시장경쟁 촉진 및 이용자 불편 해소

- 방송통신 시장 불공정행위를 점검·조사하고 이용자 피해·불편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 강화
-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발전을 유도
-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등에 대해 점검·조사를 강화하고 제도개선 사항 발굴
- 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대응을 위한 실태 파악
- 방송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방송 시청 차단, 시청자 정보 무단 유용 등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시청자 권익 보호 강화

□ 이용자 중심의 위치정보 산업생태계 조성

- 위치정보 법·제도 개선, 혁신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사업자 교육, 실태점검 및 모니터링의 실시로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 긴급구조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LBSP) 운영 및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등을 통해 신속한 긴급구조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긴급구조 위치정보 사각지대 해소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3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25	'30			
휴대전화·이메일 스팸 수신량(통) (하향지표)	13	12	12	14	9	10	스팸 수신량의 최근 3년간 스팸 수신량 평균 및 정책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각 1,500명 대상 1인당 월 평균 수신량 측정	휴대전화·이메일 스팸 수신량 조사결과

(1) 주요 내용

□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보호 강화

- 유족·친지들이 사망한 이용자의 사후조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 유산 승계 관련 제도 마련(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의존·중독 예방을 위한 기능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입법 지원)

□ 통신분쟁조정 신속성 및 피해구제 지원강화

- 통신서비스 불편·피해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비상임위원 위촉·운영, 분쟁조정 제도 개선 등 통신분쟁조정제도 강화
- AI기술·디지털폭력 등 온라인 상 피해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전문적인 상담서비스·피해지원을 위해 '온라인피해365센터' 기능 확대 운영 추진

□ 인공지능 등 신기술 서비스 이용자 보호

- AI 서비스의 잠재적 위험성을 관리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규율로서 「(가칭)AI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 추진
- 알고리즘으로 인한 확증편향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해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선택권 보장 관련 제도개선 추진
- AI 기술 고도화 및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에 대응하고, AI 산업 발전과의 조화를 위한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 마련 추진
- 생성형 AI 부작용, 역기능 등 위험요소 제보·검증을 통해 이용자 피해 확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 플랫폼 개설

- AI 기술 확산에 따라 복잡하게 발생한 방송통신산업 분야의 이용자 보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AI 서비스 사업자가 알아야 할 법령 안내서 마련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통신분쟁조정 해결률 (당해연도, %)	82.1	82.9	79.3	81.4	최근 3개년도 '당해년도 해결률'은 ('23년) 82.1%, ('24년) 82.9%, ('25년) 79.3%로, 2026년도 성과지표 목표치는 최근 3개년도 실적치의 평균값인 81.4%로 설정	[해결건수(조정전합의+조정안수락+신청취하) / 해결건수(조정전합의+조정안수락+신청취하) + 미해결건수(조정안불수락+합의가능성 없음)] × 100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통계자료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요인

- AI 등 신규 통신서비스 등장 및 기존 서비스의 다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통신취약계층을 포함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들의 전기통신서비스 관련 피해와 분쟁이 크게 증가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10인 임기만료('25.8월), 6인 임기만료('26.2월)에 따라, 상임위원 5인과 비상임위원 25인을 신규로 위촉·운영하여 분쟁조정 신속성 및 전문성 제고
- 온라인상 피해 관련 제도·정책이 소관에 따라 흩어져 있고 사각지대도 존재하여 종합적·체계적인 피해지원 필요
 - 365센터 법적근거 마련 및 기능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안 통과를 지원하여 365센터의 안정적 운영지원 기반 마련

-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 및 융복합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불편 및 피해, 법적 쟁점 등이 복잡하게 발생
- 특히, 일상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학습데이터 오류나 기술적 특성으로 왜곡된 정보 생성, 편향된 결과물을 생성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 증가

□ 갈등요인

- 인공지능 산업은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기술 주도권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흥 중심의 정책 기조에 따라, 규제정책 수립 시 사업자 저항 및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 역차별 우려도 존재
- SNS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가 정보의 효율적 전달이라는 이점과 동시에, 선택적 노출, 확증편향, 정신건강 악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갈등관리계획

- 아동·청소년 SNS 과의존 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에 대하여 청소년, 학부모, 전문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청취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보호 강화(Ⅱ-1-①)

□ 추진배경

- 디지털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등이 사후 조치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디지털 유산 승계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 다수 발의(5건)

※ 정준호('25.2월), 신영대('25.3월), 유동수('25.4월), 이훈기('25.5월), 김현('26.2월)

- 인터넷·통신 이용자보호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선발·포상하여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 이용자 권익 보호 문화 확산의 계기 마련 필요
- 디지털·AI 기술의 발달에 따른 스마트 기기의 보편화로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및 의존 현상 심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디지털 유산 승계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 이용자 의사에 따라, 디지털 유산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지원 등
- 아동·청소년의 온라인서비스 과의존·중독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입법 지원
- 2026년도 인터넷·통신 이용자보호 유공 정부포상 추진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아동·청소년 SNS 이용 간담회	'26.2월	
	통신사 CEO 간담회	'26.2월	
	국내대리인 실태점검 추진	'26.2월	
	디지털 유산 승계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26.2월	
	아동·청소년의 SNS 과의존·중독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	'26.3월	
2/4분기	아동·청소년 SNS 과의존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입법 지원	'26.6월	
3/4분기	2026년도 인터넷·통신 이용자보호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	'26.7월	
4/4분기	2026년도 인터넷·통신 이용자보호 유공 정부포상 수여	'26.12월	
	전기통신사업법(통신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전면 개정) 국회 제출	'26.12월	과기정통부 공동
연중	디지털 유산 승계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입법 지원	(계속)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아동·청소년 SNS 과의존 예방정책 마련을 아동·청소년 관점에서 시작하기 위한 간담회 실시
- 국민에게 안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하기 위고 통신분야 정책 추진 시 사업자와 소통강화를 위한 통신사 CEO 간담회 실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아동·청소년 SNS 과의존 정책 마련을 위한 열린 간담회 개최	'26.2월
	주요 통신 정책 이슈에 대한 통신사 협력 강화	'26.2월

□ 기대효과

- 아동·청소년 SNS 과의존 예방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
- 이용자보호를 위한 통신정책 추진 시 통신사 등 주요 기관과 협력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해당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온라인 이용자보호 관련 정책개선 건수(건)	3	3	3	3	온라인 이용자보호 관련 정책개선 건수 (예: 청소년 SNS 과의존 대응방안, 국내대리인 제도개선, 디지털유산 법안마련 등)	정책개선 건수를 결과물로 실적 산정	법령(안)마련, 위원회 안건, 보도자료, 정책 개선연구반 운영 등

② 통신분쟁조정 신속성 및 피해구제 지원 강화(Ⅱ-1-②)

□ 추진배경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18.12.11.)에 따라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시행('19.6.12.)
- 전기통신서비스는 기술 발전에 따라 복잡해지고 있으며 일상 전반에 활용되는 만큼 분쟁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 개개인이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
- * 분쟁조정신청건수: '24년 1,533건 → '25년 2,123건 (↑38.5%)
- 온라인상 다양하고 복잡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상담센터의 기능을 강화 운영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통신서비스의 복잡화, 비대면 가입 확대, 이용자 권리의식제고 등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분쟁신청 건수는 제도 도입 이후 '20년 572건에서 '25년 2,123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 단순 접수 건수 증가가 아닌 결합상품 분쟁, 플랫폼·콘텐츠 분쟁, 고령자·취약계층 분쟁사건으로 처리 난이도 또한 상승하고 있으므로, 상임·비상임위원을 16인 → 30인으로 증원하여 운영하는 등 통신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 제고
- 통신분쟁조정 처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통신분쟁조정제도 개선
- 같은 유형의 피해가 다수 국민에게 동시에 발생한 경우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 사업자의 통신분쟁조정 참여 의무화 및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도록 하는 등 사업자 의무 참여 제도 신설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으로 규정된 통신분쟁 조정결정 효력을 재판상 화해효력으로 격상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 추진

○ 각종 온라인 피해에 대한 원스톱 상담창구로서, 단순 상담·안내 →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온라인피해365센터'의 피해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신유형·복합 피해에 대한 피해예방 활성화*

- ①피해신고 등 증빙·서류준비 지원 안내 도입, ②상담이용자 대상 법률상담 서비스 실시, ③관계형DB구축, ④상담일지 개선, ⑤상담원 교육 등

* 온라인피해지원 유관기관 협의회(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 운영, 상담현황 발표 및 사례집 발간, 이용자 피해주의보 발령, 대국민 피해예방 교육 등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5년도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현황 발표	'26.2월	
	365센터-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상호협력안 회의	'26.2월	
	'25년도 통신분쟁조정 처리결과 발표	'26.3월	
2/4분기	'25년도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및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 발간	'26.4월	
	온라인서비스피해지원협의회 회의 개최	'26.4월	
	상호협력안 MOU 체결 및 법률상담 서비스 관련 365센터 홈페이지 개편	'26.5월	
	365센터 관계형DB 구축 방안 수립 및 피해신고 등 증빙서류 준비 지원(안) 마련	'26.5월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	'26.6월	
	상담이용자 대상 법률상담 서비스 개시	'26.6월	
3/4분기	통분위 비대면 조정회의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26.9월	
	온라인서비스피해지원협의회 회의 개최	'26.9월	
	365센터 성과지표 개선안 마련 및 상담일지 개선	'26.9월	
4/4분기	통신분쟁조정시스템-소비자24시스템 간 연계	'26.10월	
	(현장소통) 통신사업자 현장간담회 개최	'26.11월	
	365센터 지원시스템 기능개선 관련 관계형 DB 구축·운영	'26.11월	
	(플랫폼·유관기관) 피해신고 등 증빙서류 준비 지원 도입	'26.11월	
	(현장소통)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세미나	'26.12월	
	온라인서비스피해지원협의회 회의 개최	'26.12월	
연중	통신분쟁조정 제도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연중	
	통신품질 현장측정 실시	연중	
	온라인서비스 대국민 피해예방 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연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통신사업자 현장 간담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개인분쟁조정위원회 합동 세미나 개최 등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구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통신사업자 현장간담회 개최	'26.4분기
세미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세미나	'26.4분기

□ 기대효과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위촉·운영 등을 통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통신분쟁조정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분쟁조정 사례집·분쟁조정처리결과 발표 등을 통해 이용자 피해 사전 예방 강화
- 온라인상 다양한 피해에 대한 상담 창구 일원화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지원이 가능해져 이용자 권익증진 및 피해 예방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억 원)

		회계구분	'25	'26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I-1-일반재정①)				
①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 구축(2141)	일반회계	5.64	7.55
	▪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301)		(80.61)	(80.19)
	-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5.64	7.55
②	안전한 인터넷 정보활용 기반구축(3251)	기금	9.21	9.69
	▪ 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319)		(204.42)	(191.54)
	- 인터넷 피해 상담센터 구축·운영		9.21	9.6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실적(점)[건수+만족도]	-	3.0	3.05	3.10	사업 효과성의 다방면 평가를 위해 피해상담 건수와 상담 만족도를 각 5점 척도로 산출하여 모두 반영 되도록 성과지표를 변경, '25년 실적을 감안하여 '26년도 실적을 0.05점 상향하여 목표로 설정	전년목표 대비 10% 상향 피해상담 건수 기준, 당해 실적 5점 척도 산출점수 x 60% + 상담 만족도 5점 척도 산출점수 x 40%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건수 및 상담 만족도 (온라인피해상담지원시스템 통계 www.helpos.kr)

③ 인공지능 등 신기술 서비스 이용자 보호(Ⅱ-1-③)

□ 추진배경

-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활용 환경을 마련하고, 잠재적 위험·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 보호
- 인공지능 등 신기술 서비스 확산 및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제기 되는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 환경 개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AI 기술을 활용한 불법촬영물 생성 방지, 아동·청소년 대상 유해 정보 생성, 과몰입 유도 방지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사항 도출
 -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연구반 운영을 통해 국내·외 규제 및 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이용자 보호 목적의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 알고리즘으로 인한 확증편향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해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선택권 보장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 AI 생성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AI 생성물 제공 시 해당 결과물이 AI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표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 지원
- 통신 관계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AI 서비스 규제 가능성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및 공백 해소를 위해 기존 통신법의 AI 서비스 적용 가능성, 개선 방향 등을 도출한 법령안내서 마련
 - 전문가 연구반 운영을 통한 법·제도 사례 조사,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이슈 분석 등을 통한 '통신관계 법령안내서' 발간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24.8월)에 따라 가상융합서비스(메타버스)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 위해 발생 가능성 및 사업자의 분쟁조정 절차 마련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한 실태조사 추진

-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와 산업 발전 간의 균형점을 모색하고, 바람직한 AI 이용자 보호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신기술 이용자 보호 정책기반 조성
 - 인공지능기술에 기반한 신유형 서비스의 출현에 따른 이용자의 이용행태 및 인식 변화를 진단·검증하여 AI 이용자 보호 정책 수립의 실증적·실효적 근거 마련을 위한 ‘AI 이용자 패널조사’ 추진
 - AI 산업 발전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 발굴, AI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 간의 균형점 모색 등을 위해 산업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AI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운영
 - AI 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콘퍼런스’ 개최
-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중 발견한 불편사항을 이용자가 직접 제보하고, 이를 사업자에게 전달하여 사업자의 자율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문 플랫폼 운영(‘25.10월~)
 - 이용자가 경험한 위험성·역기능 제보, 위험성 관련 분석자료 제공, 유형별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방법 및 특성 안내 등 기능으로 구성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 발표	’26.2월	
	‘메타버스 이용자보호 실태조사’ 연구반 구성·운영	’26.3월~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정책개발 연구반 구성·운영	’26.3월~	
2/4분기	제2기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1차 회의 개최	’26.5월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패널조사 결과 발표	’26.6월	
	AI 이용자보호를 위한 ICT 법제 연구반 구성·운영	’26.6월~	
3/4분기	메타버스 사업자·이용자 설문조사 진행	’26.6~7월	
4/4분기	AI 서비스 사업자가 알아야 할 법령 안내서 발표	’26.11월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콘퍼런스 개최	’26.11월	
	제2기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2차 회의 개최	’26.12월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	’26.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관련 민관협의체 운영, 콘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AI 전문가 및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구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제2기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1, 2차 회의 개최	'26.5, 12월
콘퍼런스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콘퍼런스 개최	'26.11월

□ 기대효과

-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및 중장기 플랜을 통해 건강한 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 조성
-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등 신기술 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구제 체계 확립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억 원)

		회계구분	'25	'26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I-1-일반재정①)				
①	안전한 인터넷 정보활용 기반구축(3251)	기금	10.7	14.19
			(204.42)	(191.54)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환경조성(308)		7.92	11.41
	▪ 안전한 AI 활용기반 조성(321)		2.78	2.7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활성화율(%)	-	-	80	82	생성형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오픈 여부와 플랫폼 주 기능인 신고와 관련 정보 제공을 모두 고려해 플랫폼 활성화율을 측정 ※ 정보제공건수 '25년 목표치가 32건, 실적치가 26건을 고려, '26년 목표치를 40건으로 설정	[(위험성 신고 내용 검증 건수/위험성 신고건수)×0.5+ [(정보제공건수/목표 정보제공 건수(40건))× 0.5	플랫폼 실적자료
안전한 메타버스 이용환경 조성 지원(%)	-	-	-	100 (신규)	메타버스 사업자의 운영정책 및 분쟁조정체계의 모범·개선 사례를 각각 발굴하고,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통한 확산 및 사업자의 자발적인 운영정책 개선 등을 도모하여 안전한 메타버스 이용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항목으로 설정함	사업자 운영 정책 모범·개선 사례 발굴 건수/목표 건수(2)×0.4 + 분쟁조정 체계 모범·개선 사례 발굴 건수/목표 건수(2)×0.4+ 사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 건수/목표 건수(1)×0.2	사업자 실태조사 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

(1) 주요 내용**□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 강화·기반 조성**

-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팸신고 처리, 정책적·기술적 방지 방안 마련,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규제 강화 등 대응체계 운영
-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등 서비스 활용 역량 제고 및 최신 피해 유형에 대한 맞춤형 피해예방 교육 실시
- 서비스 장애 급증, 복잡한 서비스 해지·탈퇴 등 이용자 피해 사례 반영 및 연구반 운영을 통해 평가제도 개선 추진
- 디지털 역기능 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맞춤형 디지털윤리 교육, 홍보 등 인식제고 추진

□ 위치정보 산업활성화 및 이용자 권리보호 강화

- 위치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과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추진
- 위치정보사업자 및 서비스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안전한 위치정보이용환경 조성 및 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보호 강화
-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긴급구조 시 구조 대상자의 위치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

□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구축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운영·관리 등 점검 강화
-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운영·관리 등 점검 강화
-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공공 DNA DB를 구축·확대하여 필터링 적용, 필터링 성능평가제도 고도화 등 추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 대상 청소년유해광고 점검 등 청소년 보호 조치 강화 및 태블릿 PC용 청소년보호 SW 개발·보급 추진
- 허위조작정보로부터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팩트체크 플랫폼 구축 및 허위정보 대응 역량 교육 실시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3	'24	'25	'26			
디지털윤리 교육 만족도(점)	90.1	91.0	91.7	91.6	만족도 지표로 달성할 수 있는 한계 목표(10명 중 9명 만족)에 도달하여 전년과 동일한 91.6점으로 목표치 산정	디지털윤리교육 종료 후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이용한 서베이(Survey)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요인

- SNS, 앱 푸쉬 등 스팸 전송매체가 다양해지고, 불법스파머들의 필터링 기술을 우회하는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기술적 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 인공지능·플랫폼 등 디지털 서비스가 국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책임 제고 필요

- 특히, 사업자의 서비스 중단·장애 발생 시 대규모 이용자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 및 대응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 중요성 증대
- 생성형 AI·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의 확산으로 딥페이크 범죄와 같은 디지털 역기능이 심화, 갈등 확산 등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
- 정보취약계층은 디지털 대응 역량 부족으로 피해 위험이 큰 만큼, 실질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밀착형 교육 강화 필요
-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위치정보법이 제정('05년도)된 이후 새로운 방식의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가 출현하는 등 발전하는 산업현장에 맞는 제도개선 필요
-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융합형 서비스의 확대로 신규 사업자와 대량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국내외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위치정보 유출·오남용 예방을 위한 선제적 관리 필요성 증대
-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가 급속히 유포·확산 되어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건전한 공론의 장의 형성을 저해하고 있어 효율적인 대응 필요
- 허위조작정보 근절 관련 개정 정보통신망법('26.7.7. 시행)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정책 수립 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세부적 기준에 대한 시행령 마련이 필요

□ 갈등요인

- 허위조작정보 근절 관련 법안에 규정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정책 수립·시행' 의무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24.11월)에 따라 불법스팸 전송자 및 관련 통신사 처벌 상향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통신사에 규제 부담으로 작용
-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관련 법제도에 대한 사업자의 인지 미비로 실태점검 시 주요 위반사례가 발생

□ 갈등관리계획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등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자의 수용도 제고
-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운영으로 불법스팸 발송 및 법 위반 현황을 정부, 사업자(이통사, 문자중계사, 문자재판매사) 간 공유함으로써 불법스팸 감축 노력·공감대 형성
- 급변하는 통신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한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이용자 권익증진 기여
- 위치정보 분야 사업자 대상 정기실태점검 실시 이전에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요 위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사업자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규제 수용성 및 정책소통 제고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통신서비스 이용자 기반 조성 및 위치정보의 안전성·활용 강화(II-2-①)

□ 추진배경

- 비대면 서비스 보편화로 인터넷상 본인확인서비스* 및 연계정보 활용 수요가 증가하여 주민번호 대체수단 및 연계정보 안전성 강화 필요
 - * 본인확인 이용 건수: '20년 20억 건 → '25년 30억 건
-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운영 강화를 통해 불법스팸 유통을 최소화 하고 국민의 불편 해소 환경 조성
- 통신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이용자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이용자 맞춤형 교육 강화 필요
- AI·디지털의 발전 이면에 부작용도 심화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디지털윤리 교육 등 인식제고 추진 필요
-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이용자의 권리보호의 균형감 있는 위치정보 정책의 추진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본인확인·연계정보 관련 제도 개선 및 점검 》

-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 마련을 위한 주민번호 대체수단 제도 관련 법제정비 및 정책연구 수행
-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환경 제공을 위한 본인확인기관 정기점검, 연계정보에 대한 생성·처리 승인심사 위원회 운영 및 이용기관 대상 연계정보 안전조치 실태점검 등 수행

- 본인확인 업무 인식제고를 위한 지원포털 운영, 이용기관 안전성 제고를 위한 통합모듈 배포 지원 등 본인확인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업무 지원

《 불법스팸 대응 》

- 휴대전화이메일 서비스 제공자의 스팸 유통현황을 정기적으로 분석·공개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인 스팸 감축 노력 유도
-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제 운영, 과징금, 몰수·추징 등 불법스팸 관련자 처벌 강화 등 추진

《 피해예방 교육·정보제공 및 이용자 역량강화 》

- 계층별 맞춤형 피해예방 교육, 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등 정보제공을 통한 이용자 역량 제고
 - 뎁페이크 등 지능화된 신종 통신 범죄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 장애인·노년층·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특성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 제작을 통한 맞춤형 교육 추진
 - 최신 통신금융사기 피해사례를 반영한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대국민 홍보 강화
- 이용자 피해, 서비스별 특성 등을 고려한 제도개선 및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대상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자의 자율적인 업무 개선 유도

《 디지털윤리 교육 및 인식제고 강화 》

- 뎁페이크, 사이버폭력, 혐오표현 등 디지털역기능 예방·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 국민 대상 맞춤형 디지털윤리 교육 추진('26년 17만 명 교육목표)

- 딥페이크 범죄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딥페이크 이해, 법적 규제, 예방·대응방법 등 성인·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피해예방 윤리교육 확대

※ 토론을 통해 딥페이크에 관한 윤리 문제를 직접 고민해볼 수 있는 청소년 참여형 교육 신설

- 전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건전한 디지털윤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캠페인 추진

- 창작콘텐츠 공모전(6~10월), 디지털윤리 주간(7월), 디지털윤리 대전(12월) 등 국민참여형 캠페인 및 생활밀착형 온·오프라인 홍보(공공 시설물, 온라인 등) 추진

- 디지털윤리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제고를 위해 디지털윤리체험관과 콘텐츠 제공을 위한 디지털윤리 홈페이지(디지털윤리.kr) 운영

《 위치정보 정책 》

- 차세대 신규 위치정보 서비스 발굴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하여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서비스 기획·개발 단계에 있는 위치기반 스타트업을 모집하여 클라우드 인프라 등 서비스 개발 환경 및 서비스 고도화 컨설팅 지원

- 중소·영세 기업 및 청년·스타트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수 서비스를 선정하여 투자 유치, 비즈니스 네트워킹 확대 등 사업화 지원

- 국내·외 위치정보 관련 법·기술·서비스 동향 및 위치정보 산업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산업규모와 사업자 대상 정보 제공

-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LBSP) 운영을 통해 긴급구조 요청자 등의 위치 정보를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제공

- 위치정보 전달 체계상 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증시험을 실시하고, 품질측정 대상 지역 및 평가지표(측위 정확도, 충족률 등) 등을 객관적으로 선정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위치정보 품질 제고 유도

○ 위치정보사업자 대상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 법 준수 여부 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위치정보 보호 인식 제고 및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 강화

- 정기실태점검 설명회 개최로 사업자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합리적인 점검계획 수립 및 신규·주요 사업자 점검강화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디지털윤리 교육 수요기관 모집 및 선정	'26.1~2월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 선정 및 평가 계획 수립	'26.1~5월	
	이용자보호 이슈리포트 발간	'26.3~12월	
	위치정보사업자 법·제도 설명회	'26.3월	
	본인확인기관 정기 적합성 심사 추진	'26.3~11월	
	대상별 디지털윤리 교육 운영	'26.3~12월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강사단 발대식 개최	'26.3월	
2/4분기	'25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분석 및 공개	'26.4월	
	무선데이터 소모량 측정	'26.4~9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 사업자 컨설팅 실시	'26.4~5월	
	연계정보 안전조치 실태점검(서면)	'26.4~11월	
	'25년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결과 발표	'26.4월	
	'26년 상반기 스팸 수신량 조사	'26.5월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공모전 추진	'26.4~6월	
2/4분기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추진	'26.4~12월	
	디지털윤리 가족 및 청소년 캠프 운영	'26.6~12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실시	'26.6~9월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 개최	'26.6~10월	
3/4분기	디지털윤리 주간 캠페인 운영	'26.7~8월	
	공모전 선정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	'26.7~11월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강사단 보수교육 실시	'26.8월	
	무선데이터 소모량 측정 결과 분석 및 공개(와이즈유저)	'26.9월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실시	'26.9~11월	
4/4분기	'26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분석 및 공개	'26.10월	
	'26년 하반기 스팸 수신량 조사	'26.11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 집계 및 공개	'26.11~12월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공모전 시상	'26.11월	
	디지털윤리대전 개최	'26.12월	
연중	사업자별 월별 스팸신고현황 대국민 공개	'25.2월~	
	불법스팸 대응센터 운영 및 스팸신고 접수처리	연중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준수여부 현장점검	연중	
	디지털윤리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연중	
	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정보 제공	연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본인확인) 2026년 본인확인기관 대상 정기 적합성 심사 설명회 개최

구분	내용	세부일정
설명회	2026년도 본인확인기관 정기 적합성 심사 설명회	'26.2월

- (스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관련 인증 신청 방법 및 절차, 심사기준 등 대량문자사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

구분	내용	세부일정
설명회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관련 설명회	'26.5월

-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 사업자 대상 설명회 및 평가위원 간담회 실시

구분	내용	세부일정
사업자 설명회	'26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변경사항 등 설명	'26.5월
평가위원 간담회	'26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운영 계획 등 안내 및 의견 수렴	'26.5월

- (피해예방 교육) 교육 개선사항, 교육 시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실시

구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 간담회	교육 협력기관 담당자, 강사, 교육생 대상 교육 개선사항 등 의견수렴	'26.4~11월

- (디지털윤리) 교육 및 캠페인 현장방문 등을 통한 정책 수혜자 의견수렴 실시

구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디지털윤리 교육 현장 및 캠페인 현장 방문	'26.7~8월

-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위치정보사업자 등 정기실태점검 전 설명회 개최를 통한 점검 내용 사전 안내 및 사업자 의견 청취

구분	내용	세부일정
사업자 설명회	위치정보사업자 정기 실태점검 제도, 일정 등 안내 및 사업자 의견청취	'26.3월

□ 기대효과

-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을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연계 정보 이용기관 실태점검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 불법스팸 차단 강화로 불법스팸 유통을 방지, 유통현황 공개를 통해 통신사의 자발적인 스팸 감축을 유도하여 스팸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
- 피해예방 교육 및 정보제공,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통한 이용자 역량 강화 및 권익 제고
- 디지털윤리 교육 및 인식제고 활동 추진을 통해 디지털 역기능 예방·대응 역량 강화 및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확산
- 위치정보 분야 중소·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화 지원 등으로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
-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1,200여개사)을 통해 안전한 위치 정보이용환경 조성 및 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보호 강화
- 긴급구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품질협의체 등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을 제고 사업자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합리적인 점검계획 수립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억 원)

		회계구분	'25	'26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I-1-일반재정①)				
①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21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301) <li style="padding-left: 20px;">-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307) ▪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309) 	일반회계	47.92	48.63
			(80.61)	(80.19)
			13.76	13.76
			2.15	1.83
② 안전한 인터넷 정보활용 기반구축(32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307) ▪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304) ▪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기반 구축(311) ▪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318) 	기금	32.01	33.04
			127.9	110.93
			(204.42)	(191.54)
			61.4	52.19
			13.6	10.9
			19.2	19.2
			33.7	28.6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역량 향상률(%)	18.7	19.2	19.6	20.2	3개년 평균 증가율(0.5%) 고려하고, 도전적인 목표 설정을 위해 0.2%를 추가하여 전년도 교육역량 향상률 목표대비 0.7%p 상향된 20.2%로 설정	[(계층별 교육후 역량 점수-교육전 역량 점수)/교육 전 역량점수]×100	교육전·후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 집계
위치정보 사업화 지원 만족도(점)	91	91	92.3	92	과거 실적 및 추세, 위치정보 사업화 지원 관련 외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치를 설정	(신규 BM 발굴 사업화 지원 만족도 ×0.5)+(맞춤형 컨설팅 만족도×0.5)	사업화 지원 및 컨설팅 수혜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만족도 조사

②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구축(Ⅱ-2-②)

□ 추진배경

-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허위 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 온라인상 마약, 도박 등 불법·유해정보로 인해 국민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어 체계적인 대응 강화
- 불법음란정보 및 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점검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

- 허위조작정보로부터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플랫폼 자율규제 및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 등 추진
 - 개정 정보통신망법(26.1.6.)에서 위임한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허위 조작정보 관련 규제의 실효성 확보
 - 사업자의 자율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업자 의견 청취를 위한 협의체 지속 운영
 - 이용자가 허위조작정보를 판별할 수 있는 팩트체크 플랫폼 구축 및 팩트체크 단체에 대한 활동 예산 지원
 - 이용자의 비판적 사고 및 정보판별 역량 향상을 위한 허위조작정보 대응 역량 교육 실시

《 온라인 상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

- 기존 디지털 성범죄물 외에 마약, 도박, 저작권 침해물 등 불법 정보를 방미심위 서면의결 대상에 포함하여 신속하게 삭제·차단

※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던 방미심위 서면심의(24시간) 대상에 ▲마약, ▲도박, ▲저작권 침해, ▲통신금융사기, ▲자살유발, ▲장기·개인정보 매매, ▲총포·화약류 제조 등의 정보까지 확대하는 방미통위법 개정('26.2.19.)

- CDN*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제도가 원활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하여 해외불법 사이트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

* CDN(Content Delivery Network): 용량이 크거나 수요가 많은 콘텐츠를 캐시 서버에 미리 저장해 놓고, 이용자 요청 시 최적의 서버로부터 콘텐츠를 전달하는 서비스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P2P 등)의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모니터링 및 상시점검* 강화

* AI기반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지원시스템 등 활용

- 인터넷사업자(부가통신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의 불법촬영물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모니터링 및 상시점검 체계 구축

* 신고기능, 사전안내여부, 검색제한 조치, 게재제한 조치 등

- 국민피해형 AI 범죄 대응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및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 수립 추진

* 방미통위(총괄), 과기정통부, 외교부, 법무부, 성평등부, 금융위, 공정위, 개인정보위, 경찰청, 식약처, 금감원, 방미심위 등

**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등 AI 범죄에 대응한 예방-탐지-대응-피해회복 순 단계에 걸친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및 상시적·종합적 대응 체계 마련

《 인터넷상에서의 청소년 보호 》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광고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 사이버안심존 앱의 서비스 편리성 강화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능 고도화 진행 및 청소년 이용과 접근성 확대를 위해 아이패드용 자녀용 앱 개발 추진
- 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피해예방 윤리교육 확대 실시(교재·교구 개발)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디지털성범죄 근절·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계부처 MOU 체결	'26.1월	
	청소년 팩트체크 전국대회 운영학교 모집 및 선정	'26.1~2월	
	청소년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및 위반사항 조치(1분기)	'26.3월	
2/4분기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기술적 조치 실태점검(상반기)	'26.3~5월	
	국민피해형 AI 범죄 대응 실무협의의체 구성 및 회의 개최	'25.4월	
	맞춤형 허위조작정보 대응교육(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등)	'26.4~6월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령 마련	'26.6월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공개	'26.6월	
	청소년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및 위반사항 조치(2분기)	'26.6월	
3/4분기	'범부처 AI 범죄 근절 종합대응계획' 수립	'25.7월	
	허위조작정보 관련 사업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	'26.7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기술적 조치 실태점검(하반기)	'26.9~10월	
	청소년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및 위반사항 조치(3분기)	'26.9월	
4/4분기	청소년보호SW 고도화(자녀용 아이패드용 앱개발)	'26.9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 현장 점검 실시	'26.10~12월	
	사전조치의무사업자 기술적·관리적 조치 실태점검	'26.10~12월	
	청소년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및 위반사항 조치(4분기)	'26.12월	
	허위조작정보 국제 컨퍼런스 개최	'26.12월	
	팩트체크 플랫폼 시스템 구축	'26.12월	
	청소년 팩트체크 전국대회 결과 발표	'26.12월	
연중	불법음란물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 상시 점검	연중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 상시 점검	연중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기술(DNA 필터링 시스템) 성능평가 수행	연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여 애로사항 등 사업자 의견 청취(상시)

구분	내용	세부일정
협의체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 운영	상시

□ 기대효과

- 웹하드 사이트상 건전하고 적법한 콘텐츠 유통 및 이용환경 구축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환경 조성
- 범부처 협업 기반의 AI 범죄 예방-탐지-대응-피해회복 전주기 대응을 통해 대응 실효성 제고 및 국민 피해 최소화
- 정부와 민간 차원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허위조작 정보가 야기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에 효과적으로 대응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억원)

		회계구분	'25	'26
안전한 인터넷 정보 활용 기반 구축(I-2-일반재정①)				
① 안전한 인터넷 정보 활용 기반 구축(3251)	기금		56.61	56.75
			(204.42)	(191.54)
▪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306)			14.66	12.46
▪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314)			41.95	44.29
미디어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II-1-일반재정②)				
② 미디어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3132)	기금		4.75	10,61
			(767.42)	(760.02)
▪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조성(317)			4.75	10,6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불법정보 기술적 조치 개선율(%)	108	103	100	100	<기술적 조치 개선> ○ 지속적 증가추세 반영하여 전년 실적치(220,159건) 대비 1% 상향한 목표치(222,000건) 설정 <불법음란정보 특징값 제공> ○ 음란물 채증자료 중복 등을 고려 하여 전년 실적치(99,918건) 대비 1% 상향한 목표치(101,000건) 설정	[(상시점검 등을 통한 기술적 조치 개선(차단) 건수/ 목표)×0.5]×100+ [(불법음란정보 특징값(해시, DNA) 방심위 제공건수 /목표)×0.5]×100	실적보고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기술성능평가 수행률(%)	97.1	98.9	99	99	* 성능평가 신청 대비 처리율을 전년 대비 2%p 증가한 99%로 설정, 평가기술 고도화 건수 달성률을 100%로 설정	[수행건수/신청 건수×0.5]×100+ [평가기술 고도화 건수×0.5]×100	사업결과보고서

(1) 주요 내용

□ 방송통신 분야 공정한 시장경쟁 촉진 및 이용자 불편 해소

- 방송통신 시장 불공정행위를 점검·조사하고 이용자 피해·불편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 강화
-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발전을 유도
-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등에 대해 점검·조사를 강화하고 제도개선 사항 발굴
- 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대응을 위한 실태 파악
- 방송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방송 시청 차단, 시청자 정보 무단 유용 등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시청자 권익 보호 강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3	'24	'25	'26			
방송통신시장 불공정 행위 개선 건수(건)	8	10	10	11	과거 실적 및 추세와 '25년도 실적인 10건을 감안하여 '26년에 11건을 목표로 설정 방송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과 제도개선은 방송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므로 동 지표를 성과 지표로 설정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실적 ※ 실태점검(6건) + 제도개선(5건)	내부자료, 실태점검 보고서 등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25.7.22.) 후 시장 혼란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종합시책을 마련할 필요
- 플랫폼 사업자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며 산업생태계 패러다임이 기존 전통 산업에서 플랫폼 산업 중심으로 변화
 - 디지털 플랫폼 산업이 급성장하고 국민들의 플랫폼 서비스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이용자 피해 및 부작용도 함께 증가
- OTT시장 확대에 따른 유료방송가입자의 이탈(코드커팅*), 방송광고 시장 위축, 콘텐츠 수급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유료방송 성장 한계
 - * 케이블TV, 인터넷TV 등의 유료 유선방송의 가입을 해지하고 OTT 서비스로 이동 현상

□ 갈등요인

- 전기통신사업법 하위법령 정비 및 단말기 유통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시책 마련 등 후속조치 추진 과정에서 통신사, 제조사, 유통점, 소비자단체, 알뜰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이견 표출이 예상

□ 갈등관리계획

-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협의체'를 운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견을 조율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방송통신시장 규제 정비 및 조사 효율화 추진(Ⅱ-3-①)

□ 추진배경

-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방송통신시장 이용행태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방지를 위한 규율체계 마련
- 주요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이용자 피해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사관 역량 강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규제 실효성 강화) 전기통신사업법 상 과잉 형벌규정을 완화하고 중대한 위법행위에 금전책임을 강화하는 등 규제 실효성을 강화
-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보완입법) 앱마켓사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중소 앱 개발사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 방지를 위한 금지행위 규정 개선
- (신유형 서비스 조사) 생성형 AI, 온라인 여행플랫폼 등 이용자가 급증하는 신유형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 조사
- (조사인력 전문성 제고) 방송·통신분야 조사 관련 직무 교육, 디지털 포렌식 운용 교육을 통해 조사 전문성 및 실무 역량 강화
- (조사실무 매뉴얼 개선) 조사절차 및 기준을 정비하고, 조사 실무 매뉴얼을 개정하여 조사 업무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강화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경제형벌 완화 및 과징금 상향 등 규제 실효성 강화 추진	'26.2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보완입법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6.3월	
2/4분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개정	'26.4월	
	앱마켓사업자 등 불공정행위와 이용자이익 침해행위 규제 관련 정책연구 추진	'26.6월	
	방송통신시장 조사관 교육 실시	'26.6월	
	방송통신시장 동향 분석 보고	'26.6월	
3/4분기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보완입법 개정 추진	'26.9월	
	방송통신시장 동향 분석 보고	'26.9월	
4/4분기	방송통신시장 동향 분석 보고	'26.12월	
	방송통신 조사실무 매뉴얼 개정	'26.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방송·통신 사후규제 정비방안 마련 등에 대한 업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방송통신 사후규제 정비방안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연중
회의	방송통신 분야 규제 동향 관련 전문가 회의	연중

□ 기대효과

- 방송통신 사후규제 관련 법제 정비 등 규제 정책 수립을 통해 방송통신 분야 규제 집행의 체계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
- 조사체계 개선,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효율적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조사기법 고도화 등 조사 역량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방송통신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규제정비 및 조사 효율화 추진율(%)	-	100	100	100	방송·통신시장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등 규제정비 추진율과 조사 효율화 추진율을 측정, '24~'25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26년 목표를 100%로 설정	$< ① + ② >$ ① 규제 정비 추진율(0.5) : (규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0.1) + (규제정비 개선안 마련(2건)×0.4) ② 조사 효율화 추진율(0.5) : (규제 동향 분석×0.2) + (조사관 교육×0.1) + (신유형 조사추진×0.2)	법·제도개선 관련 보고서, 동향분석 보고, 조사관 교육 자료 등

②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및 불공정 행위 근절(Ⅱ-3-②)

□ 추진배경

- 단말기유통법 폐지 후 시장경쟁은 활성화하고, 이용자 권리 침해는 방지하는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
- 유·무선 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유통망의 책임 판매를 강화하여 통신서비스 계약·이용 과정에서 정보취약계층 등 이용자 피해 방지
- 일상생활과 밀접한 통신서비스의 불완전판매 및 특정 서비스 이용강요 등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통신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기획점검, 제도개선, 공동규제 활성화를 통해 이용자 권익을 증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3(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따른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시행 및 이행현황 점검
 - 시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정부, 통신사, 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단말기 유통환경개선협의체' 구성·운영
 - 시책 시행과 개정 법령의 주요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동통신시장 모니터링 개선방안 마련, 관련 가이드라인 제·개정 등 후속절차 추진
-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과정에서 사기판매 방지와 법령 준수 이행을 위한 판매자 정보 등록·관리 등 유통망 책임판매 강화
 - 단말기 지원금 안내 허위·과장광고 및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미준수 등 실가입자 신고가 필요한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 참여 기반의 자율 신고제도 실시

- 인터넷 시장의 서비스 계약체결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민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이동통신 유통망에 시행 중인 법정 자율규제체계인 사전승낙 조항을 유선·결합 영역으로 확대하여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유선·결합 판매점 사전승낙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추진

- 이동통신 시장의 불공정행위 및 정보취약계층 피해 방지를 위해 특정시기·대상별 핀셋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 시 점검 및 조사(연중)
 - ※ 신규단말기 출시·신학기 전후, 온라인 성지점·집단상가 등에 대해 ▲허위과장고지, ▲부가서비스 가입강요, ▲지원금 약속 후 미지급 행위,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단속
 - ※ 신규 단말기 출시 전후 이용자 피해 특별 예방 기간 운영

- 알뜰폰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대포폰 개통 등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상시 시장동향 파악 및 불공정 행위 점검(연중)
 - 이통사의 중소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가입절차 준수 여부 점검 등 사업자 자율참여를 통한 모니터링 방안 마련

- 집합건물 단체계약*에 있어서 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 계약을 대리하는 자(대리점, 판매점 등)가 특정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통신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 *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개별 세대별로 따로 통신서비스 등을 계약하지 않고 건물 전체 또는 일정 범위를 하나의 계약으로 묶어 체결하는 계약

- 신규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선택재 앱 현황 점검 및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모니터링(주요 스마트폰 신규 출시 시)
 - 이용자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선택재를 방지하여 이용자의 단말기 서비스 선택권 보장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신규 단말기 출시 전후 이용자 피해 특별 예방 기간 운영	'26.2월	
	이용자 참여형 자율 신고제 시행	'26.3월	
2/4분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6.4월	
	판매자 등록과 책임판매제 도입	'26.5월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시책 위원회 보고·시행	'26.5월	
	단말기 유통환경개선 협의체 구성·운영	'26.6월	
3/4분기	신규 단말기 출시 전후 이용자 피해 특별 예방 기간 운영	'26.8월	
	집합건물 내 특정서비스 강제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	'26.9월	
4/4분기	단말기 유통환경개선 협의체 운영	'26.12월	
	비필수 삭제 제한 앱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실태점검 등 조치	'26.12월	
연중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제조업자 및 이해관계자 등 간담회	연중	
	경품 제공 수준, 허위과장광고 모니터링	연중	
	통신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연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등 관련 이통사, 제조사, 소비자단체, 유통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 현장방문 등 실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시책 시행 이전 소비자 단체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26.2월
간담회	시책 시행 관련 공동규제 준수 협약서 체결	'26.2분기
현장방문	유·무선 통신분야 유통현장 방문 등 업계 의견청취	'26.3분기

□ 기대효과

- 건전한 단말기 유통 시장 형성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혜택을 증가
- 통신서비스 계약·이용 과정에서 법령 위반 행위 개선을 통해 정보 취약계층 등 이용자 피해를 방지
- 실생활과 밀접한 유형의 선택권 제한 등 불공정행위 대상 실태점검, 공동규제 활성화 등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억 원)

	회계구분	'25	'26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환경조성(I -2-일반재정①)			
①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 구축(2141)	일반회계	16.12	14.42
▪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302)		(80.61)	(80.19)
- 방송통신시장 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		16.12	
-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보호환경 조성 (선택재 앱 금지행위 모니터링)		15.02	12.98
- 방송통신시장 상시조사 분석체계 운영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협의체 운영 지원 등)		1.10	1.10
		-	0.3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통신시장 공정경쟁 활성화 지수(점)	-	-	-	91.8 (신규)	Δ 통신시장 분야별 현장·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공정경쟁 준수율, Δ 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 등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Δ 이용자 실생활과 밀접한 통신분야의 피해방지를 위한 조사·점검 강화를 고려하여 목표치를 설정 $\langle (\textcircled{1} \times 0.4) + (\textcircled{2} \times 0.3) + (\textcircled{3} \times 0.3) \rangle$ ① [(이동전화 시장 공정경쟁 준수율 \times 0.5)] + [(유선 시장 공정경쟁 준수율 \times 0.25)] + [(유무선 결합시장 공정경쟁 준수율 \times 0.25)] ※ 준수율: 공정경쟁 준수 건수 / 모니터링 총 건수 ② 유무선 통신시장 제도개선 건수: 4건 ③ 통신시장 금지행위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4건	①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② 제도개선 관련 보고서, 위원회 안건, 보도자료 등 ③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결과보고서

③ 부가통신시장 이용자 권익 증진(Ⅱ-3-③)

□ 추진배경

- 부가통신시장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사실 조사를 추진함으로써 공정경쟁 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
- 부가통신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추진을 통해 이용자 권익 증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점검·조사 강화)**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다양한 플랫폼서비스의 '가입 → 이용 → 해지' 전 주기에 걸친 이용자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점검 및 조사를 추진
 -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추진
 - 쇼핑·배달·교육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이용사업자+최종이용자) 피해유발 행위 집중 점검
 -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부가통신시장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점검 및 모니터링
 - 다크패턴 등 금지행위 관련 이용자 피해 예방 및 현황 파악을 위해 총 40개사(8개 분야*, 상위 5개사)의 모바일 앱 모니터링 추진
- * ①배달, ②쇼핑, ③OTT, ④음악, ⑤AI, ⑥웹툰·웹소설, ⑦여행, ⑧금융
-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대응 및 앱 마켓 이용자(이용사업자+최종이용자) 보호를 위해 앱 마켓 및 인터넷 플랫폼시장 실태조사 실시

- 인터넷 불편광고(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위반 사업자에 대한 후속 조치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 5-사-6):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 모바일 앱 대상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모니터링

※ 이용약관, 결제·환불 고지, 중도해지 고지, 유료전환 고지 등 10개 항목

- 인터넷 플랫폼 산업 생태계 주요 현안 파악 및 신유형 불공정 행위 대응을 위한 국내·외 시장 동향 분석

- 앱 결제 안심터 홈페이지 및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앱 결제 피해 관련 뉴스 및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 예방법 등 정보 제공

- (이용자 권익증진 관련 제도개선 추진)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등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추진

- 온라인 상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및 신유형 온라인 불편광고**에 대한 제도개선(금지행위 포섭) 추진

* 다크패턴: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이용자 기만 목적의 화면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조작 행위

** 온라인 불편광고: 플로팅광고, 납치광고 등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광고

- SNS플랫폼 내 온라인 거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추진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26.2월	
	인터넷 불편광고 관련 금지행위 상반기 모니터링 및 후속조치	'26.3월	
2/4분기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확인 및 개선	'26.4월	
	다크패턴 관련 모바일 앱 모니터링 결과보고	'26.6월	

3/4분기	인터넷 불편광고 관련 금지행위 하반기 모니터링 및 후속조치	'26.8월	
	인터넷 플랫폼시장 실태조사 실시	'26.9월	
4/4분기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 개편	'26.12월	
연중	디지털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점검 및 조사 추진	연중	
	다크패턴 및 신유형 온라인 불편광고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연중	
	인터넷플랫폼 국내·외 시장 동향 분석	연중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정보제공	연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앱 마켓 실태조사 관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

구분	내용	세부일정
의견수렴	'26년도 앱 마켓 실태조사에 대한 조사표 검토 등에 대한 과기정통부 의견 수렴(서면)	'26.2월
회의	앱 마켓 사업자 및 각 분야 전문가 의견수렴	'26.6월

○ 플로팅광고 금지행위 관련 사업자 설명회 개최

구분	내용	세부일정
사업자 설명회	플로팅광고 금지행위 관련 설명 및 의견수렴	'26.6월, 11월

□ 기대효과

- 급격한 성장으로 시장 영향력이 커진 플랫폼 사업자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모니터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
-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점검·조사 및 시정조치로 이용자 권익이 보호되는 부가통신서비스 이용 생태계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억 원)

		회계구분	'25년	'26년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I -1-일반재정①)				
①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2141)	일반회계	10.8	9.44
			(80.61)	(80.19)
■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302)		10.8	9.44
-	인터넷플랫폼 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		5.17	4.27
-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4.99	4.17
-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0.62	1.0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부가통신시장 이용자 권익 증진 지수(점)	-	-	-	85 (신규)	부가통신시장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추진, △ 부가통신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인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	< ① + ② > ① 부가통신서비스 금지행위 실태 점검 및 사실조사 목표건수 달성률(0.4): 4건 ② 부가통신시장 모니터링 준수율(0.6) : (인터넷플랫폼 동향분석 목표건수(22건) 달성률 × 0.2) + (모바일 앱 결제 가이드라인 준수율* × 0.2) + (온라인 불편 광고 위반사항 개선률*** × 0.2)	①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결과보고서 ② 동향분석 자료, 모니터링 결과
					* 최근 5개년 실적 평균 대비 5% 상향 수준 ** (개선조치 건수 / 개선권고 건수) × 100% *** (위반사항 개선 건수 / 위반사업자 행정지도 건수) × 100		

4 방송시장 공정경쟁 촉진(II-3-④)

□ 추진배경

- 유료방송시장의 성장 정체 및 경쟁 심화로 사업자간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 발생 가능성 증대
 - 사업자간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시정조치 등을 통해 건전하고 공정한 미디어 이용 환경조성 필요
- 방송시장의 경쟁 심화로 방송사업자간 분쟁* 발생 시 사업자간 중재를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공정경쟁 기반 조성

* 사업자 간 주요 분쟁 사례: 방송채널 송출 계약, 프로그램 사용료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송사업자 간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점검·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사항 발견 시 시정명령 등 제재 조치
-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 접수 민원을 분석하고 유형별 주요 이슈를 발굴·공유하여 이용자 권익보호 추진
 - ※ 방미통위, 유료방송사, 협회, 재단이 참여하는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운영
- 연속성 있는 방송분쟁조정 업무 수행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채널 재계약, 송출수수료 협상 등 갈등 상황 파악 및 협상 중재·지원 등으로 방송 송출 중단에 따른 시청자 피해 사전 방지
- '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단독중계와 관련하여 중계방송권자 및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법 상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를 통해 방송시장의 투명한 회계정보를 제공하여 업계·학계·이해관계자 등의 활용을 지원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부과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제공
 - 지상파·종편PP-홈쇼핑 간 연계편성*으로 인한 소비자 오인, 광고효과 유발 등을 방지하고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방송편성 현황 분석 및 사업자 자율규제 이행 점검 실시
- * 지상파·종편PP의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는 프로그램과 인접한 시간대에 홈쇼핑 채널에서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방식
- 방송분쟁조정 대상 확대(사업자↔이용자) 및 직권분쟁조정제도 도입,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도입 등 국정과제 추진 ('26.12월 방송법 개정안 마련 예정)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보편적 시청권 관련 실태점검	'26.2월~	
2/4분기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26.6월	
3/4분기	유료방송시장 불공정 행위 관련 설문조사	'26.8월	
	방송광고시장 불공정 행위 관련 설문조사	'26.8월	
	홈쇼핑시장 불공정 행위 관련 설문조사	'26.8월	
4/4분기	이용자 권익보호 인포그래픽 제작 및 배포	'26.10월	
	지상파·종편PP-홈쇼핑 연계편성 현황 파악	'26.12월	
	방송분쟁, 외주제작사 관련 방송법 개정안 마련	'26.12월	
연중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연중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연중	
	유료방송사 접수민원 분석(4회)	분기별 1회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회의(4회)	분기별 1회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유료방송사, 관련 협회와의 협의체 운영을 통한 시청자의 불편·불만 사항을 공유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자율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구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회의	'26.3, 6, 9, 12월

□ 기대효과

- 방송시장 불공정 행위 시정, 제도개선, 분쟁조정 등을 통하여 방송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
- 방송시장 거래 관계에서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통해 중소·영세 사업자의 피해 예방 및 권익보호
-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공표하여 방송평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등 방송정책 관련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방송시장의 규모 및 거래현황 정보 등을 전 국민에게 공개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억 원)

		회계구분	'25	'26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Ⅱ-1-일반재정②)				
①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3132)			5.65 (757.02)	5.65 (743.21)
▪ 방송시장 불공정 행위 조사지원(312)		기금	5.65	6.20
- 중소방송사업자 대상 공정경쟁 실태 서면조사			0.80	0.80
- 불공정행위 행태개선			3.15	3.20
- 방송사, 미디어랩사 회계자료 검증·조사			1.70	2.2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방송 및 방송광고 시장 불공정 행위 개선 인식도(공통)(점)	71.3	71.5	72.2	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유형별* 불공정 행위 개선도 평균 (*유료방송사, PP, 지상파 방송사, 광고대행사, 미디어랩사) ○ 거래계약 상대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관행 개선도, 사후규제 정책 실효성, 정책홍보 노력도 등에 대한 평가 	리커트 5점 척도 (0점에서 100점 까지 구간별 25점씩 상향)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전문조사기관 설문조사결과	
유료방송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개선 제고율(%)	-	-	10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대비 실적지표로 매년 100% 달성 필요 <p><26년 목표 설정> * 연간 개최 목표: 분기별 1회 총 4회 ** 과거 3년('23~'25년) 실적의 평균과 목표부여(표준편차)방식을 활용하여 목표치 설정: 20,564건</p>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개좌)×0.5 + (모니터링을 통한 유료방송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분석 건수**)×0.5	실적보고서	

전략목표 III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기 본 방 향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4년도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 방송매출액 합계는 18조 8,320억 원으로 전년대비 1,255억 원(△0.7%) 감소하여, 역성장을 기록

< 연도별 방송사업매출 현황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8조 118억 (1.9%)	19조 4,016억 (7.7%)	19조 7,579억 (1.8%)	18조 9,575억 (△4.1%)	18조 8,320억 (△0.7%)

- '24년도 방송광고시장 규모는 2조 2,9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 감소
방송광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엄격한 형식규제 개선 등 지원 필요
- 방송콘텐츠 제작의 핵심주체로서 그간 방송한류를 견인해 온 지상파방송사들은 디지털콘텐츠 확대 및 유통채널 다변화 등 혁신을 추진 중이나,
 - 지상파방송이 과점적 지위를 점했던 당시 도입된 방송편성·광고 등의 규제체계는 방송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글로벌 OTT가 자본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반면, 국내 OTT는 적자지속에 따른 투자여력 부족으로 글로벌 OTT와 격차 확대
 - ※ '24년 매출/영업이익(억 원): 티빙(4,355 / △710), 웨이브(3,313 / △277), 왓챠(341 / △20)
 -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해당 사업자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및 OTT 산업의 경쟁력 확보 필요
- 유료방송사의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권 독점에 따라 유료방송 미가입자, 고령자층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방송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 및 신뢰성 회복과 더불어 우수한 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는 등 건전한 방송문화의 확산 필요
- 디지털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를 향유할 수 있도록 신기술 개발을 비롯한 시청환경 조성 필요성 부각
- 사업자별·매체별 특성을 반영하고, 방송사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노력 평가 등 방송의 공적 책임 평가를 강화하는 방송평가 제도개선 필요

◇ 그간의 성과

- 2026 동계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방송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방송사에 TV 방송중계권 재판매 관련 협조 요청('25.10월)
- 202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을 통해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우수 방송프로그램을 발굴·시상('25.12월)
-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서비스 시청 편의 증진을 위해 폐쇄자막 조정 등 특화기능이 탑재된 맞춤형TV를 3.5만대 보급
- 최신 음성인식·AI기술을 활용하여 모바일 영상을 실시간 자막·아바타 수어 애니메이션으로 동시에 변환하여 제공하는 '이어줌' 서비스 제공
- 매체 다양화, 장르 융합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진 방송편성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 마련
- 국제 OTT 포럼을 개최하여 국내 OTT 사업자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해외 OTT 조사 보고서 발간을 통한 해외진출 전략 수립을 지원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연1회) 및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점검(연2회)을 실시하여 상생의 외주제작 거래 환경 조성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온라인·모바일 등 다른 매체 광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크로스미디어랩 도입 「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안 발의('25.4월)
- 고열량·저영양식품 등의 방송광고 제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식약처와 협의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개정('25.8월 공포, 6개월 후 시행)
-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방송광고 지원을 통해 해당 기업의 성장과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에 기여

◇ 중점 추진 내용

-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유료방송 미가입자, 고령자 등 소외계층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실현

- 방송편성 규제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여, OTT와의 규제 불균형 개선 및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의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
- 국제 OTT 포럼 개최 및 해외 OTT 시장·이용행태 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OTT 산업 경쟁력 제고
- 방송사의 표준제작비 산정기준 제시, 상생협약체 운영 실적 등 「외주 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점검과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방송광고 지원을 통해 신규 광고주를 창출하도록 하여 침체된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를 추진
-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보급과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편리하게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전략목표와 임무 간의 상관성

- 방송미디어 제도 개선 및 지원 등을 통하여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방송사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방송광고·편성·외주제작시장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상생의 콘텐츠 제작 환경을 조성하여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기여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연1회) 및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점검(연2회)을 실시하여 불공정 거래 환경 개선에 기여
- 국내 OTT 사업자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과 해외진출 전략 수립을 지원하여 글로벌 미디어와의 격차 해소 및 OTT 산업 경쟁력 제고
- 방송평가 제도개선으로 사업자간 평가 형평성을 제고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에 기여
-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2	2	4	5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Ⅲ.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① 방송사업자 방송사업 매출액(조원)
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① 방송수신기 시각·청각장애인 전체 누적보급률(%)
	① 건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환경 조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사업 만족도(점)
	②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	① 장애인방송 편성 분량(시간)
2.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① 방송산업 발전 기반 구축도(점)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① 외주제작시장 환경개선 만족도(점)
	②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만족도(점) ② 방송광고규제 검토 및 개선(건)

전략목표 III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1) 주요내용

- 유료방송사의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권 독점에 따라 유료방송 미가입자, 고령자층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 시각·청각장애이용 맞춤형 TV 보급 확대, 실시간·비실시간 장애인 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 제작 지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 개발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 제고
- 새로운 광고 유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경직된 형식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 및 콘텐츠 경쟁력 제고
-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방송광고 지원으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여 매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신규 광고주 창출을 통해 침체된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를 추진
- 사업자별·매체별 특성을 반영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송 평가 제도개선, 방송사-제작사 간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추진
- 국제 OTT 포럼 개최 및 해외 OTT 시장·이용행태 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OTT 산업 경쟁력 제고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3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25	'30			
방송사업자 방송사업 매출액 (조원)	18.0	19.4	19.8	19.0	18.8	21.1	'20~'24년 실적(과년도 방송사업 매출액 합계)의 연평균 증가율(1.8%)을 고려	과년도 지상파 방송 지상파DMB·유선 방송·위성방송 방송 채널사용사업자 등의 방송사업 매출액 합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1) 주요 내용

- 유료방송사의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권 독점에 따라 유료방송 미가입자, 고령자층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 개최 등 우수 방송프로그램 선정·시상을 통해 방송사·제작자의 사기진작 및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 시각·청각장애이용 맞춤형 TV 보급 확대, 실시간·비실시간 장애인 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 제작 지원, 신기술을 활용한 음성 인식기반 자막·수어 변환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제공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 제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3	'24	'25	'26			
방송수신기 시각·청각장애인 전체 누적보급률(%)	23.5	27.9	32.6	36	전체 시각·청각장애인의 증가 추세 및 대상 보급률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 '13년 이전 보급한 셋톱 박스를 실적에서 제외	(전체 누적보급 대수 / 전체 시각 청각장애인 수) × 100	사업 결과 보고서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유료방송사의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권 독점으로 인하여 유료방송 미가입자, 고령자층의 보편적 시청권 제약 우려

- 디지털 기술 발달 및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으로 미디어 이용환경이 인터넷·모바일 위주로 변화함에 따라,
 -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 환경 조성을 위한 기기 접근성 제고 등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필요

□ 갈등요인

-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의 중계권료를 둘러싸고 방송사 간 입장 차이가 있음

□ 갈등관리계획

- 방송미디어 생태계 참여자들이 연대하고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여 공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법제 정비 추진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건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환경 조성(Ⅲ-1-①)

□ 추진배경

- 유료방송사의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권 독점에 따라 유료방송 미가입자, 고령자층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창의적이고 우수한 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선정·시상하여 방송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방송문화 확산 촉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보편적 시청권 개선) 유료방송 미가입자, 고령자 등 소외계층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실현을 위하여 제도 개선안 마련 추진(상·하반기)
- (방송언어 환경 개선) 청소년의 올바른 언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상파, 종편·보도PP 등 방송사를 통한 언어순화 자막 고지 추진(상·하반기)
- (우수 방송 프로그램 시상) 「202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을 통해 사회·문화 발전, 한류 확산 등에 기여한 우수 프로그램 시상으로 방송 제작인의 사기진작 및 건전한 방송문화 확산 촉진(하반기)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문체부, 방송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26.3월~4월	
	보편적 시청권 관련 공개 시민 간담회 개최		
2/4분기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구성·운영	'26.4월~	
	202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작품접수	'26.5~6월	
	방송언어순화 자막고지 등 캠페인 실시(상반기)	'26.5월	
3/4분기	202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26.7~8월	
	202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 개최	'26.9월	
4/4분기	방송언어순화 자막고지 등 캠페인 실시(하반기)	'26.10월	
	보편적 시청권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 개정 추진	연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제도 개선안 검토를 위한 이해관계자(문체부·방송사업자·학계 등) 의견 수렴 및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논의
- 창의적이고 우수한 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선정·시상하여 방송 사업자 및 제작자의 제작의욕 고취

구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회의	'26.2분기~
현장방문	202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	'26.9월

□ 기대효과

- 우수 방송프로그램 선정·시상, 방송언어 사용 환경개선 활동, 보편적 시청권 제도개선 검토 등을 통해 시청자의 미디어 복지 제고 및 방송의 공적 책임성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억 원)

	회계구분	'25	'26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Ⅱ-1)			
② 방송콘텐츠 경쟁력 확보(3134)	기금	3.10	2.90
▪ 방송콘텐츠 기반강화(301)		(96.56)	(82.85)
		2.90	2.7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사업 만족도(점)	-	-	-	65 (신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 행사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신규 목표치인 점을 감안하여 65점으로 설정	[사업필요성*0.5]+ [사업만족도*0.5] (100점 환산)	설문조사 결과

②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Ⅲ-1-②)

□ 추진배경

-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송 시청 편의 제고 및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등 미디어 접근 환경 개선

< 국정기조와 연계성 >

- (국정과제 7-3)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 TV보급 확대, 장애인 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수어방송) 제작 지원 및 리모컨 개발 등을 통한 편의성 개선
- (업무계획 3-2) 차별없는 미디어 접근권 보장
 -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격차 없이 미디어에 접근·활용하기 위한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권 강화 등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맞춤형 TV 지원 확대
- 실시간·비실시간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시각·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EBS 장애인 교육방송물(연 2,600여 편) 및 발달장애 맞춤형 콘텐츠(연 60여 편) 제작 등 장애 유형·이용 목적에 따른 콘텐츠 보급 활성화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개최, 미디어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 추진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장애인방송 유형별 품질 시범평가 실시 및 방송수어통역 실무지침 마련 등을 통해 장애인방송의 질적 개선 도모
- AI 음성인식을 기반으로 미디어(스마트폰·태블릿 등)의 음성을 자막으로, 자막을 수어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 개발·고도화를 지속 추진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설명회 개최	'26.2월	
	장애인방송 VOD 제작지원 사업 사업자 간담회	'26.3월	
2/4분기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방송사업자 선정	'26.4월	
	장애인방송 VOD 서비스 제공 및 발달장애인용 방송물 제작 지원 사업자 선정	'26.5월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신청 접수	'26.6월	
3/4분기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대상자 선정 및 보급 추진	'26.7월	
4/4분기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및 장애인방송 만족도 조사	'26.10~12월	
	음성·자막·수어 변환 앱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26.10~12월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26.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 사업 인지도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국 지자체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
- 장애인방송 의무제도·제작 지원 사업 정보 제공 및 의견 수렴을 위한 방송 사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
-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회의 개최로 장애인방송 정책 개선 등 현안에 관한 이해관계자(학계·법률·장애인 단체 등) 의견 청취
-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 대상자 및 장애인방송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장애 당사자 의견 수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설명회	'26년 장애인방송 의무제도 및 제작 지원 관련 사업자 설명회	'26.2월
설명회	'26년 시각·청각장애인 맞춤형 TV 보급 사업 관련 지자체 담당자 설명회	'26.3월
설명회	'26년 장애인방송 VOD 서비스 지원 관련 사업자 설명회	'26.3월
간담회	'26년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회의 개최	연중
조사	'26년 시각·청각장애인 맞춤형 TV 및 장애인방송 만족도 조사 실시	'26.10~12월

□ 기대효과

- 시각·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행하는 미디어 세상 구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억 원)

		회계구분	'25	'26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Ⅱ-1)				
①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3132)		기금	218.70	200.77
			(780.25)	(761.52)
	▪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308)		218.70	200.7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장애인방송 편성분량 (단위: 시간)	-	771,004	771,004	718,000*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사업자의 제공 추세를 감안하여 목표치 설정 * 26년 예산 삭감(7,759백만 원 →3,581백만 원)에 따른 목표치 수정	장애인방송 필수 지정 방송사업자 전체의 장애인방송 편성분량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의결

(1) 주요 내용

- 방송사와 제작사 간 외주제작 거래 실태 조사 및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상생의 외주제작 환경 조성
- 국제 OTT 포럼 개최·해외 OTT 조사를 실시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해외 시장분석을 통한 해외진출 전략 수립지원으로 OTT 사업자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 도모
- '25년도 방송평가 결과를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에 반영하고, 사업자별·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송평가 제도개선 추진
-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일총량제 확대·개선, 중간·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 등 방송법령 개정 추진
-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방송광고 지원으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여 매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신규 광고주 창출을 통해 침체된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추진

(2) 성과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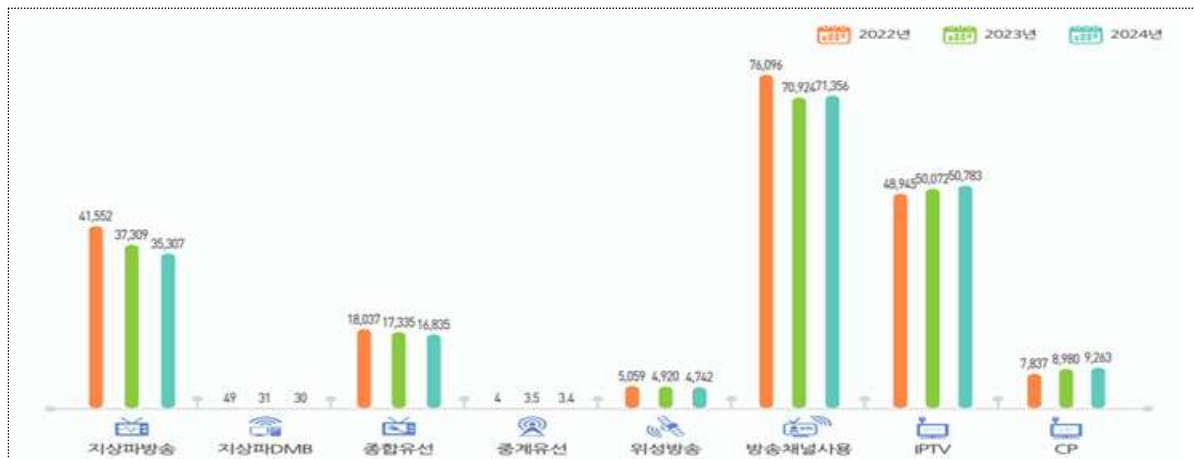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3	'24	'25	'26			
방송산업 발전 기반 구축도(점)	86	83.2	84.2	83.5	각 구성요소별 '26년 각 목표치의 산술평균값을 목표로 책정 ①외주제작시장 환경개선 만족도: 86 ②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만족도: 81	[(①외주제작시장 환경개선 만족도+ ②(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원사업 전반적 만족도 ×0.5)+(소상공인의 지원사업 전반적 만족도×0.5)]/2	사업효과평가 조사결과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방송콘텐츠 제작의 핵심 주체로서 그간 방송 한류를 견인해 온 방송사들은 뉴미디어 시대에 대응하여 디지털콘텐츠 확대,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유통채널 다변화 등 혁신을 추진 중이나,
 - 방송의 매체영향력이 과점적 지위를 점했던 당시에 도입된 방송 광고·편성 등의 규제들이 방송 제작·유통·소비 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국경 없는 경쟁 시대에 적절한 대응에 한계
- '25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24년 방송사업자의 방송 사업 매출액 합계는 18.83조 원으로 전년(18.96조 원) 대비 0.7% 감소
 - ※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 ('18년) 4.8% → ('20년) 1.9% → ('21년) 7.8% → ('22년) 1.8% → ('23년) △4.1% → ('24년) △0.7%

< 방송사업자별 방송사업 매출액 추이(단위: 억 원) >



- '24년도 전체 방송광고시장 규모는 2조 3,0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가 감소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형식규제 개선 등 제도적 지원 필요
- 국내 OTT 사업자들이 글로벌 OTT 사업자의 시장잠식에 대응하여 국내 OTT 산업의 자생력과 지속성장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분석 등 OTT 해외진출 지원 필요

□ 갈등요인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를 포함한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결과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이는 양상으로 공정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거래 질서가 정착되고 있으나, 일부 거래 관행*은 여전히 개선 필요

* 외주제작 계약서 수익배분 관련 사항 중 '협찬수익 배분기준 명시' 등

- 보건복지부 등 타부처 소관 법령으로 규정된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 완화는 국민건강 등 공익가치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접근하고, 소관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 필요
- 방송광고 제작지원은 벤처 등 인증*을 가지고 있는 일부 중소기업을 지원하므로 지원 대상이 제한되며, 중소기업이 방송광고 제작 후 광고 송출비에 대한 부담으로 방송광고 활용에 한계

* 산업부·중기부 내부 기준에 따라 관련 협회 등에서 중소기업으로 인증

- 우수한 기술력에도 재정적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취지를 적극 홍보하고, 여러 미디어랩의 송출비 할인 제도 등을 소개하여 제작한 방송광고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유도

□ 갈등관리계획

-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거래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향상을 위하여 방송사 대상 협찬수익 배분기준 제시 항목 등을 포함한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점검을 통해 거래관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진
- 방송광고 규제완화 관련 이해관계자 및 관련 협회, 시청자 및 시민 단체의 의견수렴 실시

- 새롭게 등장하는 방송광고로 시청자 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침해 여부와 영향 정도를 평가하는 제도 도입
 -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 권고 등 시청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부처간 유사사업의 중복지원 및 부처간 갈등 방지
 -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중기부 한국중소벤처기업
 유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간 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심사 이전에
 중복지원 여부 사전 검수 체계 구축·지속 운영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의 소상공인
 지원협의회 위원 참여(각 2명) 및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지원사업
 홍보 실시 등 협업 강화
- 지원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지원 공모 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공개, 선정 기업 지원사업 전용
 홈페이지에 공지 및 탈락 기업 대상으로 예비순번 안내 등 지원 대상
 기업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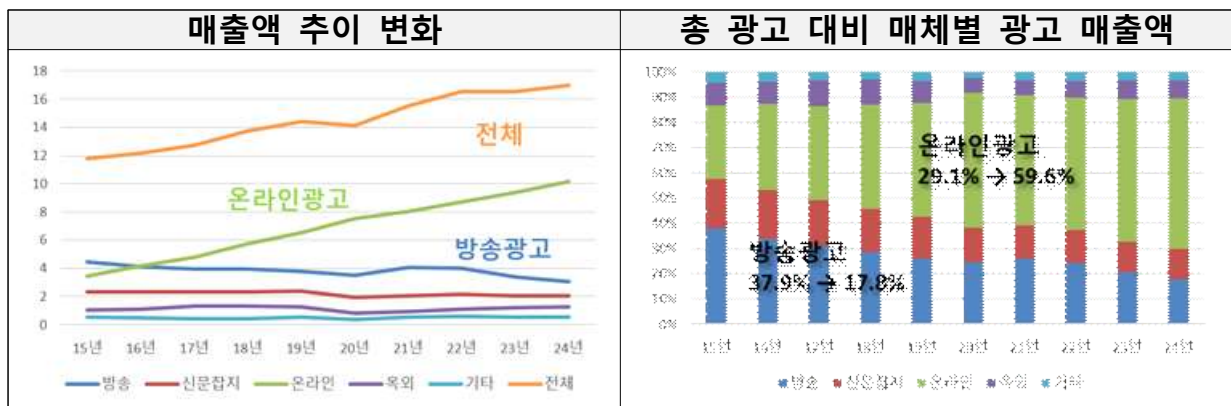
(4) 기타

□ 광고시장 현황

- 방송통신융합 기술의 발전,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등에 따라 방송 광고 매출액 및 전체 광고시장에서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
- 10년간 전체 광고시장('15년 11조 7,906억→'24년 17조 2,087억, 44.2% ↑)과 온라인광고('15년 3조 4,278억→'24년 10조 1,358억, 약 3배 ↑)는 크게 성장 하였으나, 방송광고 매출은 감소('15년 4조 4,640억→'24년 3조 2,334억, 27.6% ↓)

※ 지상파 방송사 광고매출액 '15년 약 2.9조원 → '24년 약 0.8조원으로 56% 하락

< 방송광고와 온라인광고의 매출 변화 >



※ 출처: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방송), 방송통신광고비조사(온라인 등)

□ 방송광고 규제 현황(방송법 제73조, 시행령 제59조, 제59조의 2, 3)

- (개요) 법령에서 열거하는 7가지* 방송광고 외에는 방송이 금지되어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방송법」 개정 필요

* 1)프로그램광고, 2)중간광고, 3)토막광고, 4)자막광고, 5)시보광고, 6)가상광고, 7)간접광고

- 또한, 방송광고 유형별로 크기·횟수·장르 등 복잡한 규제 적용

- (주요경과) '73년부터 칸막이식 규제가 도입되었으며, 방송광고총량 규제 완화('15년),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21년) 등 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광고규제 완화 정책 추진 중

< 방송광고 규제현황 >

유형	정의	현행 규제
프로그램광고	방송프로그램의 전후에 편성되는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20/100 (편성시간당 일평균 17/100) ※ 중간, 자막, 시보 광고 포함 · 어린이프로그램 광고방송 자막고지 (1/64이상)
토막광고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시보광고	현재시간 고지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	-
중간광고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길이별 허용횟수, 매회 광고 시간 1분 이내 <div style="text-align: center;"> <p>회 1 2 3 4 5 6 분 45 60 90 120 150 180</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광고 시작 전 자막(1/32)·음성으로 고지
자막광고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사업자 명칭 또는 프로그램 안내 고지시 · 화면 1/4이내
가상광고	프로그램에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한 가상이미지를 삽입하는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락, 스포츠, 스포츠 보도 (어린이 주시청 대상 프로그램 금지) · 프로그램 7/100, 화면 1/4 이내 · 가상광고 포함여부 고지(1/16), · 스포츠 중계시 선수 등 가림 금지 · 음성, 음향 금지
간접광고	방송프로그램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락, 교양 장르(어린이 주시청대상 프로그램 금지) · 프로그램 7/100, 화면 1/4 이내 · 구매언급 금지 · 간접광고 포함여부 고지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Ⅲ-2-①)

□ 추진배경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17.12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마련(‘19.7월)
 -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및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유도
- 과거 지상파 독과점 상황에서 도입된 낮은 편성규제가 지속되어 시장 변화에 능동적 대응이 어렵고, 방송산업 위기 극복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방송환경 변화, 규제 도입취지, 실효성을 고려하여 편성의 자율성과 방송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편성규제 개선 필요

< 국정기조와 연계성 >

- (국정과제 108-1) 미디어 법제도 정비 및 성장기반 마련
 - (방송광고·편성규제 개선) 네거티브 광고체계 도입 및 오락물 편성비율 폐지 등 방송 광고·편성 규제 개선 추진, 크로스미디어랩 도입 추진 검토
- (국정과제 108-3) 디지털·미디어 상생성장 지원
 - (외주제작 공정거래 환경조성) 외주제작사 간 공정한 외주제작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강화
- (부처업무계획)
 - (2-①) 방송미디어 규제 개선
 - 매체 다양화, 장르 융합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지고, 방송사에만 부담으로 작용하는 편성규제 완화 추진

- 글로벌 OTT가 자본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반면, 국내 OTT는 적자지속에 따른 투자여력 부족으로 글로벌 OTT와 격차 확대
 - ※ '24년 매출/영업이익(억 원): 티빙(4,355 / △710), 웨이브(3,313 / △277), 왓챠(341 / △20)
-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해당 사업자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및 OTT 산업의 경쟁력 확보 필요

< 국정기조와 연계성 >

- (국정과제 108-2) 디지털·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 OTT 산업전략 공유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국제 OTT 포럼 개최 및 해외 제도·이용 행태 등 시장동향을 조사하여 시장진출 정보 제공
- (부처업무계획)
 - (2-4) 디지털·미디어 산업 활성화
 - 국제 OTT 포럼 개최(연1회) 및 해외 OTT 시장·이용행태 조사 실시를 통해 국내 OTT 기업의 네트워크 구축과 해외진출 전략 수립 지원
- '25년도 방송평가 결과를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에 반영하고, 사업자별·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송평가 제도개선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송외주제작 환경 개선 및 편성규제 완화 >

-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방송프로그램 계약체결, 수익분배, 제작과정에 대한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점검(연 2회) 및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연 1회)를 통한 상생의 외주제작 환경 조성
- 방송과 OTT 간 규제 불균형 개선 및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편성규제를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 발의 및 국회 논의 지원
 - 매체 다양화, 장르 융합 등 환경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진 오락물 및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 폐지, 지역방송 외주제작 편성규제 제외

< 국내 OTT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

- 국내 OTT 사업자의 성공적인 해외진출과 안착을 위한 진출예정 국가별 OTT 시장현황, 법·제도적 규제 및 현지 이용자들의 OTT 사용요금제, 선호장르, K-미디어 콘텐츠 선호도 등을 조사

※ 2026 해외 OTT시장 조사: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독일
2026 해외 OTT이용행태 조사(안): 중국, 베트남, 미국, 아랍에미리트

< 방송평가 제도개선 >

- 사업자별·매체별 특성을 평가에 반영하고,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한 해소 노력을 평가 항목으로 신설함으로써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5년 하반기 실적)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26.3월~9월	
2/4분기	(’25년 하반기 실적)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이행점검(계속)	’26.3월~9월	
	「2025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 수립	’26.5월	
	방송평가 제도개선 관련 사업자 의견수렴	’26.5월	
	방송편성 규제 개선 관련 방송법 개정안 발의	’26.6월	
3/4분기	(’25년 하반기 실적)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이행점검(계속)	’26.3월~9월	
	(’26년 상반기 실적)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26.8~’27.1월	
	방송평가심의 관련 방송평가위원회 개최	’26.9월	
	방송평가 제도개선 관련 방송평가규칙 개정	’26.9월	
4/4분기	방송평가심의 관련 방송평가위원회 개최	’26.10월	
	「2025년도 방송평가결과」 발표	’26.11월	
	국제 OTT 포럼 개최	’26.11월	
	(’25년도)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결과 보고	’26.12월	
	해외 OTT 시장·이용행태 조사 보고서 발간	’26.12월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결과 보고	’26.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외주제작 현황과 구체적인 거래 관행 파악을 위한 지상파·중편PP 제작·정책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등 실태조사 실시
- 방송평가 제도개선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수렴 실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설명회	방송평가 제도개선 관련 사업자 의견수렴	’26.5월
인터뷰	방송사-제작사간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26.8~11월

□ 기대효과

- 방송사업자에만 적용되는 오래된 편성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편성·제작을 장려함으로써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의 콘텐츠 경쟁력 제고
-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공정한 외주제작 거래 안착과 방송시장 상생환경 조성에 기여
- 국내 OTT 사업자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국가별 법·규제 등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국내사업자의 성공적 해외진출 지원과 OTT산업 경쟁력 확보
- 사업자별·매체별 특성을 반영하여 방송평가의 실효성을 강화,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 해소 노력 항목 신설 등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억 원)

		회계구분	'25	'26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Ⅱ-1)				
①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3132)	기금		3 (780.25)	2.7 (761.52)
		▪방송시장 상생환경 조성(313)	2.7	2.7
②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3134)	기금		14.71 (96.56)	14.5 (82.85)
		▪방송평가기반조성(302)	8.5	5.08
		▪OTT산업 경쟁력 강화(341)	6	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외주제작시장 환경개선 만족도(점)	85.6	86	86.2	86	최근 3년의 실적치 점수 평균(85.9)을 고려하여 목표치 상향	외주제작 정책만족도 조사 1차·2차 평균 * 5점 척도 평균을 100점 만점 환산	설문조사 (전문조사기관 설문조사결과)

②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Ⅲ-2-②)

□ 추진배경

- **(방송광고 규제개선)** 방송광고 규제개선 사항이 새 정부 국정과제 및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25.10.16.) 등 주요 추진과제 선정

※ (108-1 방송광고·편성규제 개선) 네거티브 광고체계 도입 등 광고·편성규제 개선 추진

- 방송광고 규제 혁신을 통해 증대된 방송 매출이 콘텐츠 제작에 투입되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 마련

-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활동 지원)**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상황 속에서 중소 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및 혁신성장 유도, 침체된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필요

- 우수한 기술력과 상품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 방송광고가 기업 인지도 제고, 매출 및 고용 증대에 효과적이거나 비용이 부담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국정기조와 연계성 >

- **(국정과제 108-1, 108-3)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 예외적인 금지사항 외 원칙적으로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면 개편 추진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과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광고 제작비·지역방송 송출비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부처업무계획 2-1, 2-4)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사항은 사업자 자율로 편성할 수 있도록 '원칙 허용, 예외 금지' 체계 도입 검토 및 추진(방송법 개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송광고 제도개선 >

- (방송광고 규제 개선) 일총량제 확대·개선, 중간·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 등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신유형 방송광고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광고 규제체계 전환 (7종→3유형), 시청자영향평가 등 방송법 개정안 발의 추진
- (고시 개선) 방송의 지역성·다양성 확보 및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역·중소방송사 지원을 위한 결합판매 지원 고시 개선 추진

<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

- (경제적 효과) 우수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으나 마케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 성장과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 추진
 - 혁신형 중소기업 25개사(TV 17개사, 라디오 8개사), 소상공인 114개사를 대상으로 방송광고 제작·송출 지원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실시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방송광고 규제개선 관련 방송법령 개정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5.2월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26.1월	
	중소기업(1차)·소상공인 지원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26.3월~4월	
	중소기업(1차)·소상공인 지원기업 방송광고 지원 및 컨설팅 제공	'26.4월~	
2/4분기	방송광고 규제개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5.4월	
	중소기업(2차) 지원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26.5월~7월	
3/4분기	방송광고 및 협찬 규제체계 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6.9월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개정안 마련	'26.9월~	
4/4분기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효과평가 계획 수립 및 실시	'26.12월~	'27.2월 완료
	방송광고 등 규제체계 개선안 마련	'26.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방송광고 규제개선 관련 방송법령 개정안 이해관계자(방송·광고 유관 단체, 시민·소비자단체, 연구기관 등) 의견수렴 실시

구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방송광고 규제개선 관련 방송법령 개정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6.1분기

□ 기대효과

- 방송광고 규제 혁신을 통해 증대된 방송 매출이 콘텐츠 제작에 투입되어 매체 수요를 증가시키는 선순환 체계 구축
 - OTT 등 타 매체 대비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방송광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 마련
-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방송광고 지원을 통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여 지원 기업의 성장에 기여
 -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새로운 광고주로서 방송광고시장에 진입하여 방송광고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억 원)

	회계구분	'25	'26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II-1)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3134)	기금	52.24	41.61
		(96.56)	(82.85)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315)		18.83	9.44
▪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340)		22.78	14.4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만족도(점)	86.4	80.3	82.1	81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자의 전반적인 사업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사업 참여자의 다양성에 따른 변수를 감안, 5점 척도 기준 '만족한다(4점)=75점'을 6점 상회하는 81점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3년 주기로 리뷰 후 목표치 재설정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원사업 전반적 만족도 $\times 0.5$) + (소상공인의 지원사업 전반적 만족도 $\times 0.5$)	사업효과평가 조사결과
방송광고 규제 검토 및 개선(건)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건수 포함	7	8	16	10	반기당 1회 이상의 의견수렴을 기준으로 전년도 목표치(9건)보다 1건을 상향하여 소관 법률의 규제 재검토 및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치로 설정	이해관계자 회의, 간담회 등 의견수렴 건	이해관계자 회의 공문 및 결과보고서

전략목표 IV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 성과를 극대화한다.

기본 방향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안전하고 활력있는 국민 중심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기관내·외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하고, 정부혁신 및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낡은 규제 해소를 위해 관련 업계,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하고, 법령 정비를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던 규제를 개선
- 방송·미디어·통신 규제 관련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와 한류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 등을 위해 국제협력 활동 지원
- 국가 안보 및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 환경을 조성하여 정책 신뢰도 제고 필요
- 미디어 소비 환경이 모바일·디지털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일방향적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대국민 참여형 쌍방향 소통 강화 필요

◇ 그간의 성과

- (정부혁신) 국정과제, 정부혁신 이행을 위해 주요 정책을 발굴·추진했으며,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 및 영상 제작 등을 통해 주요성과 공유
- (규제혁신)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낡은 규제 해소를 위해 새로운 규제개혁 과제 발굴 추진
- (국제협력) 해외 정부·기관과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방송·미디어·통신 규제 정책 소개 및 현안 공유로 국제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방송 공동제작 협정 체결 및 국제 콘퍼런스 개최로 해외 정부 및 관계자들과 교류 협력 확대

- (보안·적극행정) 방송사 등 주요시설 보안 실태점검 및 보호대책 수립·시행을 통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 여건을 마련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 구현 노력
- (정책소통) 뉴미디어와 레거시미디어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홍보 전략으로 대국민 소통 강화 및 효과적인 정책정보 전달

◇ 중점 추진내용

-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을 발굴하고, 국정과제 및 주요 업무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 점검 등 추진
- 국정기조에 부응하는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재개발, 정보보안, 규제개선, 직장문화, 법제관련 사항 등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통신 행정 구현에 기여
-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규제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
- 규제혁신을 위한 법령 정비 시 자체 규제심사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분석을 진행하고,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합리적인 규제정비 추진을 지원
-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한류 콘텐츠 해외 진출을 위해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지원하고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국제 교류 협력 활동 지원
- 보안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방송시설의 보안 취약요인을 사전 발굴·차단하고 기반시설의 보호대책 수립·시행을 통한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 강화
-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발굴·확산
- 디지털 기반의 전략적 홍보 추진으로 정책의 효용성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소통환경 조성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	2	4	8	21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V.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1. 효율적인 방송미디어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①주요 업무계획 이행상황 점검률(%) ②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정비율(%)
	① 원활한 정책 수행 및 정부혁신 선도	①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률(%) ②혁신과제 이행률(%)
	② 행정데이터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①데이터 분석·정책 활용 실적(점) ②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 ③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이행 수준(점) ④비상대비 및 국가중요시설 방호점검 달성률(%)
	③ 규제혁신 지속적 추진	①규제혁신 제도개선 추진율(%)
	④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	①AI 교육 이수율(%) ②1인당 평균 연가활용일수(일) ③공공구매 법정 의무 구매기준 달성률(%) ④가족초청문화행사 만족도(점)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⑤ 보안 및 적극행정 강화	①보안점검 달성률(%) ②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 정보보호 수준율(%) ③적극행정 활성화율(%)
2.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①보도자료 온라인콘텐츠 제작률(%) ②국제컨퍼런스·회의 등 국제행사 활동 건수(건)
①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강화		①정책소통 활성화율(%) ②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만족도(점)
②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①국민참여 콘텐츠 실적(건) ②유튜브 채널 활성화율(%) ③인스타그램 채널 활성화율(%)
③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①방송통신 국제협력 만족도(점) ②남북 방송통신 교류정책 만족도(점)

전략목표 IV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하여 정책 성과를 극대화한다.

(1) 주요내용

□ 효율적인 방송통신 행정 구현

- ‘안전하고 활력있는 국민 중심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관 내·외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하고, 정부혁신 및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 국정과제, 정부혁신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지원과 행정 관리역량 강화 등 각종 시책 추진
- 방송통신·미디어 법제 정비 및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규제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 하고 국내 미디어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

□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 제고

-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외국정부, 국제기구와 교류·협력 추진 및 방송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 방송·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 체결 추진 및 제작지원을 통해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방송 콘텐츠 및 해외사업자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
-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디지털 콘텐츠 기획·제작으로 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기관 신뢰도 제고

(2) 성과지표: 해당사항 없음

(1) 주요 내용

□ 원활한 정책 수행 및 정부혁신 선도

- 방미통위 주관 국정과제의 추진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국정관리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점검 및 성과관리 추진
- 국무조정실 등 유관 부처와 방미통위 내 주요 정책·사업부서 간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 도모
- ‘안전하고 활력있는 국민 중심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관내·외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하고 정부혁신 및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 정부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역점정책과제 성과 공유를 통해 정책 수행성과 창출

□ 행정데이터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기관 내 데이터 분석 과제를 발굴하고, 과학적 분석을 통해 방송미디어·통신 관련 주요 정책현안 해결
-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확립
- 비상대비 총무계획 수립과 을지훈련 실시로 전시상황 비상대비 태세 구축 및 국가 위기관리 체계 확립

□ 규제혁신 지속적 추진

- 기업활동·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이 되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
-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 보안 및 적극행정 강화

- 위원회 및 특례기관의 평시 보안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보안 취약 요인 사전 발굴·차단 및 보안업무 내실화 도모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대책 수립·시행을 통한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발굴·확산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3	'24	'25	'26													
주요 업무계획 이행상황 점검률(%)	100	100	100	100	방미통위가 수립한 업무목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업무계획 주요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	(이행실적 점검 횟수/4회)x100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자료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정비율(%)	-	44.4	0	27.7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에 대해 폐지 또는 개선한 정비율 산출 - 최근 4년간('22~'25년) 실적 중 '25년도를 제외한 평균 실적 (27.7%)으로 목표로 설정	폐지 또는 개선한 일몰규제 수/전체 일몰규제 수× 100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의 결과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도</th> <th>정비율</th> </tr> </thead> <tbody> <tr> <td>2022</td> <td>16.7%</td> </tr> <tr> <td>2023</td> <td>22.2%</td> </tr> <tr> <td>2024</td> <td>44.4%</td> </tr> <tr> <td>2025</td> <td>0%(제외)</td> </tr> </tbody> </table>	연도	정비율	2022	16.7%	2023	22.2%	2024	44.4%	2025	0%(제외)		
연도	정비율																
2022	16.7%																
2023	22.2%																
2024	44.4%																
2025	0%(제외)																
					※ 최근 4년간 평균 실적 중 이행률이 0%인 '25년도 실적은 평균치 산정에서 제외하여 적극적인 목표 설정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국정과제, 주요업무계획 등 방송미디어통신 관련 주요 정책 추진 시 정부기관, 관계 기관 등 간의 협력 필요성 증대
- 기상이변, 지진 빈도 증가, 신종 감염병 등 자연·사회적 재난 발생 시 조속한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 대비·대응체계 운영 필요
- 중동 상황 등 국제정세 격변 및 北도발 대비 방송시설 보안관리 강화, 생성형AI 등에 따른 안보위협 대비 및 정보유출 차단 필요
-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중요 문서를 유출하거나 소극행정을 시행하는 등의 공직기강 해이 사례 발생 가능

□ 갈등요인

- 방송통신·미디어 정책환경 변화로 방미통위 주요 정책이 과기정통부·문체부 등 다른 정부 부처와의 관련성이 높아지고,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미디어간, 국내·외 경쟁, AI 등 신기술 진흥과 이용자 보호 간 균형 등 정책여건 및 이해관계 복잡화
- 중동 상황 등 국제정세 격변 등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른 보안 분야의 중요성 인식 대두
- 생성형 AI 등 디지털 신기술에 따른 개인·민감정보 탈취 등 안보 위협, 보안에 취약한 외국산 보안장비를 통한 정보유출 가능성 존재
- 선거 및 정부 조직개편 등 일부 어수선한 분위기로 인해 소극행정 등 기강해이 사례 발생 우려 공존

□ 갈등관리계획

- 정책 추진 시 관계부처·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협의를, 의견수렴 등을 통해 방송·미디어·통신 관련 신산업 발전과 함께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
- 민생 현안과 관련된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의 발굴·추진과 함께,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업무를 개선하는 등 조직의 업무역량 강화 노력
- 생성형 AI를 통한 개인·민감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점검 강화 및 보안환경 변화에 대비를 위한 보안업무 체제 구축
- 중동 전쟁상황, 北 대남도발 등 사회적 이슈에 따른 국민 불안감 최소화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운영으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파하고, 방송시설 보안감사, 보안업무 추진계획 및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으로 보안 대비태세 구축
- 정치적 중립성 미준수로 인한 정부 신뢰도 문제와 각종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복무점검 강화 및 소극행정 민원 상시점검 등 공직 기강 확립 활동 추진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원활한 정책 수행 및 정부혁신 선도(IV-1-①)

□ 추진배경

- 국정과제 및 주요업무계획 등 주요 정책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정부혁신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 가능한 성과 창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미통위 소관 국정과제* 추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정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주기적 실적 점검 및 평가 추진

* ⁷미디어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¹⁰⁸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 정부 국정기조에 따라 연도별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국정과제 핵심목표 달성
- 최근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여건 변화에 따라 '26년 업무계획과 주요 사항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방미통위 업무의 체계적인 추진 도모
-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의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혁신 실행계획의 수립·이행을 통해 민생밀접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방미통위 업무역량 강화
- 정부혁신 우수과제 선정과 성과 공유를 통해 정부혁신에 대한 조직 내·외의 공감대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 독려
- 방미통위 주요정책 추진 과정에 수반되는 갈등 리스크를 원만하게 관리하기 위해 주요 정책에 대한 갈등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체계적인 갈등관리 추진
-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연구, 학술행사 등을 지원하여 결과를 방미통위 정책 수립·추진에 활용하는 등 정책의 내실화 도모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6년 업무계획 수립	'26.1월	
	2026년 업무계획 세부추진계획 수립	'26.3월	
	2026년 국정과제 세부이행계획 수립	'26.2월	
	2026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갈등관리 종합시책 수립	'26.2월	
2/4분기	2026년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	'26.4월	
	2026년 갈등관리과제 갈등영향분석 실시	'26.4월	
	2026년 정책연구 과제 공모	'26.4월	
	2026년 중앙행정기관 정책연구 성과점검	'26.6월	
	2026년 역점정책과제 세부이행계획 수립	'26.6월	
4/4분기	2026년 정부업무평가 실시	하반기	
	2026년 갈등관리 실적보고	'26.12월	
	2026년 정부혁신평가 실적보고	'26.12월	
	2026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	'26.12월	
	2026년 정부혁신 성과공유 추진	'26.12월	
연중	업무계획 세부추진계획 이행점검	분기별	
	방미통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연 4회	
	2026년 창의역량 교육 실시	수시	
	방미통위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개최	수시	
	주요 정책과제 이행상황 점검 * 업무계획세부이행계획, 국정과제, 정부혁신과제: 분기별 * 주요 갈등관리과제: 월별	수시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업무계획·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 추진과정에서 방미통위 위원장·부위원장·국장 등 고위급 현장방문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주요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국회 관계자, 사업자, 이용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 요청
- 방미통위 주요정책 추진시 수반되는 갈등관리를 위해 방통통신·이용자보호·법률 전문가들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
 -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정책연구과제·학술행사 선정을 위해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정책 전문가 의견수렴

□ 기대효과

-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민생밀접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하고 활력있는 국민 중심 방송 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억 원)

		회계구분	'25	'26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Ⅱ-2-일반재정①)				
① 방송통신운영지원(3135)		기금	24	17.6
▪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301)			(67.12)	(64.99)
			24	17.6
방송통신행정지원(성과관리 비대상)				
② 방송통신운영지원(7131)		일반회계	3.6	3.7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302)			(44.08)	(69.85)
- 행정서비스 창의역량 개발			3.6	3.7
· 직원 창의역량 향상 교육			0.9	0.9
			0.3	0.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률(%)	100	100	100	100	방미통위가 연초 수립한 국정과제 목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별 월별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	(점검횟수/4) x100	국정관리시스템 등록 실적 등
혁신과제 이행률(%)	100	100	100	100	방미통위 정부혁신 실행계획 상 혁신과제 이행실적 측정	(이행과제수/전체 과제수)x100	이행실적 점검

② 행정데이터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IV-1-②)

□ 추진배경

-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방미통위(산하기관)의 주요 데이터를 정부·공공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발굴·관리·운용 기반 강화
- 체계적인 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한 방송미디어·통신 공공데이터의 품질 향상 및 활용도 제고
- 국가 중요시설(방송국, 송신소)에 대한 방호실태 점검 실시 및 방호력 개선으로 방송시설 통합방위 태세 확립
- 비상대비태세 구축을 위한 총무계획 수립과 중점관리 대상 업체의 비상 시 동원을 위한 자원조사 및 국가 위기관리체계 확립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송미디어·통신 관련 주요 정책현안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AI·데이터분석 교육을 통해 과학적 행정 활성화 추진
- 공공데이터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정기적 품질진단 및 오류 개선
-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 활용도가 낮은 데이터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방송시설에 대한 내실 있는 방호점검을 통해 방호 취약요인을 사전 발굴·차단하여 국가 중요시설 방호력 제고
-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한 총무집행계획 작성·시행·실시계획 승인
- 비상대비분야 확인점검 및 중점관리 대상 업체(동원지정업체) 자원조사 실시로 비상대비 관련 문제점 개선(활용성 제고)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6년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26.2월	
	2026년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수립	'26.2월	
	동원자원조사 실시, 상반기 비상대비시행태세 확인·점검	'26.2~3월	
2/4분기	상반기 국가중요시설 방호실태 점검	'26.4~5월	
	2026년도 데이터기반행정 역량강화 교육 실시	'26.4~7월	
	2026년도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진단 실시	'26.4월	
	2026년도 기관메타데이터 현행화	'26.5~6월	
	2026년도 상반기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및 오류 조치	'26.4~5월	
	2026년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DB 선정	'26.5~6월	
	충무집행계획 수립 및 검토·승인	'26.5~11월	
3/4분기	2026년도 방미통위(산하기관) 데이터협의회 개최(1차)	'26.7월	
	2026년도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강화 방안 마련	'26.8월	
	2026년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대응	'26.7월	
	2026년도 을지훈련 실시	'26.8월	
4/4분기	2026년도 방미통위(산하기관) 데이터협의회 개최(2차)	'26.11월	
	하반기 비상대비시행태세 확인·점검	'26.10~11월	
	하반기 국가중요시설 방호실태 점검	'26.9~11월	
	충무집행계획 부록· 및 자체 충무계획 수립	'26.11~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공공데이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협의회 개최 등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및 데이터기반행정 업무추진의 효율성 도모
- 중점관리대상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전시계획(충무계획)의 상·하 연계성 유지 및 실행력 제고, 비상대비 정책·정보 공유를 통한 업무역량 강화와 협업 증진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워크숍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워크숍	'26.4월
간담회	2026년도 방미통위(산하기관) 데이터협의회 개최(1차)	'26.7월
워크숍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워크숍	'26.11월
간담회	2026년도 방미통위(산하기관) 데이터협의회 개최(2차)	'26.11월

□ 기대효과

- 방미통위 및 산하기관의 데이터 관련 품질·분석·개방 등 현안 협의 및 협력 강화를 통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와 과학적 행정 실현
-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데이터 이용활용도 및 신뢰도 제고
- 현실성 있는 위기상황을 고려한 총무계획 수립, 국가중요시설 방호력 제고, 을지훈련 등으로 위기 대응능력 향상과 비상대비 관리체계 확립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데이터 분석·정책 활용 실적(점)	-	-	-	10 (신규)	- 실적과제 수: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분석사례로 등록하고 최종승인 된 과제 수로 평가 - 목표과제 수: 4건* * 목표과제 수 설정산식(행안부): 정원 400명 미만인 경우 4건	실적과제 수/ 목표과제 수×100	'26년도 데이터기반행정 평가결과(행안부)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	-	-	-	90 (신규)	기관 내 보유DB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정도 평가: 90% 이상* * 행안부 1등급 기준: 90% 이상	(현행화 테이블 수/ 메타관리시스템 등록 테이블수) ×100	'26년도 데이터기반행정 평가결과(행안부)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이행 수준(점)	-	-	-	92 (신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이행 수준 92점 이상 달성 ※ '25년 중앙행정 기관 평균점수: 89점	IRM을 통한 성과관리 결과 확인	'26년도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결과(행안부)
비상대비 및 국가중요시설 방호점검 달성률(%)	100	100	100	100	목표대비 실적지표로 매년 100% 달성 필요 ※ '26년도 목표 - 자원조사 대상업체수: 69개 - 국가중요시설 방호점검 목표: 15개	[[{(자원조사실시 업체/자원조사 대상업체)×0.5}+{ (방호점검 기관수/방호점검 목표 기관수) ×0.5}]×100	점검결과 보고서 (자체)

③ 규제혁신 지속적 추진(IV-1-③)

□ 추진배경

-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방송미디어통신 규제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기업활동·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이 되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규제 혁신 과제 발굴
 - 방송미디어통신 규제 현안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경제·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 합리화를 위해 노력
-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6년 규제정비계획 수립	'26.1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상반기)	'26.1~6월	
2/4분기	2026년 재검토기한 도래 일몰규제 정비	'26.5월	
	「방송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개정	'26.4월	
3/4분기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하반기)	'26.7~12월	
	규제비용 감축제 운영	'26.9월	
4/4분기	규제합리화 실적보고서 제출	'26.12월	
	법제(규제)업무매뉴얼 정비	'26.12월	
수시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 개최	연중	
수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제합리화TF 운영	연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규제혁신 추진과제의 소관부서와 협업하여 관련 사업자 및 협회, 관계부처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합리적인 규제정비 추진

□ 기대효과

- 기업과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완화·폐지함으로써 경제 활력 제고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규제혁신 제도개선 추진율(%)	-	-	85.7	90	<p>①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며, 규제 신설·강화 시 규제심사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분석을 수행하고,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정책수혜자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규제심사 절차 준수가 중요하며, 합리적인 규제 정비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목표(100%) 설정</p> <p>② 규제정비계획 대비 실적 측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적 과제 발굴 방식을 지양하고 성과·질적 지표 중심으로 규제 혁신과제 선정 - 방송미디어통신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한 과감한 규제 혁신 추진을 위해, 최근 4년간('22~'25년) 실적 중 '24년도를 제외한 평균 실적(90.4%)보다 높은 92%를 목표로 설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연도</th> <th>규제정비 이행률</th> </tr> </thead> <tbody> <tr> <td>2022</td> <td>100%</td> </tr> <tr> <td>2023</td> <td>100%</td> </tr> <tr> <td>2024</td> <td>0%(제외)</td> </tr> <tr> <td>2025</td> <td>71.4%</td> </tr> </tbody> </table> <p>※ 최근 4년간 평균 실적 중 이행률이 0%인 '24년도 실적은 평균치 산정에서 제외하여 적극적인 목표 설정</p> <p>①,②번의 목표의 측정산식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종 목표치를 96%로 설정</p> <p>※ 규제혁신 제도개선 추진율(%) = ① 규제심사절차 준수율(%) × 0.5 + ② 기존 규제정비이행률(%) × 0.5 = 100 × 0.5 + 92 × 0.5 = 96(%)</p>	연도	규제정비 이행률	2022	100%	2023	100%	2024	0%(제외)	2025	71.4%	<p>① + ②</p> <p>① 규제심사절차 준수율(%) × 0.5 = (심사절차 준수건수 / 총 심사건수) × 0.5</p> <p>※ 규제심사 절차 준수 여부 판단기준 : - 정책입안(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 입법(행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 부처 자체심사 →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p> <p>② 기존 규제정비 이행률(%) × 0.5 = (기존규제정비 이행과제수 / 기존 규제정비 과제수) × 0.5</p> <p>※ 이행여부 판단기준 - "기존규제정비과제"란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된 규제개선 관리카드 상 마감기한이 해당연도인 과제 - 법률 제·개정 사항은 국회 제출까지를 이행으로 판단하고 시행령 이하 법령 등은 실제 제·개정 여부로 판단 - 법령 제·개정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규제개선 관리카드 상 기재된 개선내용을 보고 이행여부 판단</p>	<p>-사전검토요청 증빙자료 -규제심사대상여부 확인증 -입법·행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증빙 -자체규제심사위 개최 문서 -규제합리화위원회 규제심사 완료 확인증</p> <p>보도자료 및 개정안 내부자료</p>
연도	규제정비 이행률																
2022	100%																
2023	100%																
2024	0%(제외)																
2025	71.4%																

4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IV-1-④)

□ 추진배경

-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의 문제 해결력 강화 및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창의적 대응 역량 개발
- AI 대전환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AI 리터러시를 배양하고, AI 업무 활용능력을 강화하여 미래 대비 역량 제고
- 일·생활·가정의 균형을 목적으로 자유로운 연가·유연근무 활용을 통해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효율적·생산적 근무 환경 조성
-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정친화 휴가제도(육아시간·유급가족돌봄휴가 등)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가족초청 문화행사를 실시
-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함으로써 공공조달을 통해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공직자의 기본 소양을 함양하고, 중장기 과제 및 난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모임 활성화로 국정 성과 창출 기반 강화
 - 주요 정책 및 국정철학 교육을 통해 공직가치를 내재화하고, 직무 전문성 교육 강화로 정책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대응 역량 향상
 - AI 이해 및 업무 적용 등 AI 활용 스킬 강화를 위한 교육을 기획, 교육 확대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공직문화 조성
 - 신규 직원에 대한 온보딩 프로그램 운영, 방송통신 직무교육을 통해 성공적 조직 적응을 위한 관심과 체계적 지원 프로그램 지속 개발
 -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방송·통신 분야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미래역량 향상 도모를 위한 교육 기회 확대

- 유연근무 및 근무상황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개인별 맞춤 형태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
 -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권장연가일수를 지정하고, 하계·동계휴가 기간 사용을 적극 장려
 - 매월 간부급 부서장 연가사용 현황·계획을 기관장에 보고하여 부서장의 연가사용 솔선수범을 촉진, 직원들의 자유로운 연가 사용 분위기 조성
 - 육아시간·유급가족돌봄휴가 등 가정친화적 휴가 사용을 장려하여 직원들의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
 - 유연근무제의 적극적 활용을 권장함과 동시에 유연근무 출퇴근지정 점검 등 주기적인 복무점검을 통해 책임감 있는 유연근무 활용 문화 조성
- 공공물품 구매 및 조달 시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업·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기업의 물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여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에 기여
 - **(중소기업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구매제품(공사,용역,물품) 금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
 - **(여성기업제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구매제품(물품·용역) 금액의 5% 이상을 여성기업제품으로 구매
 - **(장애인생산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연간 구매 제품(용역, 물품) 금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
 - ※ '24년에는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1.0%)으로 하였으나 '25년부터 법정 의무 구매비율이 상향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24년 1.0% → '25년 1.1%)로 변경
 - 분야별 전자시스템(공공구매종합정보망, 꿈드래 등)을 적극 활용
- 가족친화 직장 환경을 만들고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위원회 직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힐링·문화체험 행사를 상·하반기(2회) 실시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자체 교육운영 계획 수립	'26.1월	
	'26년도 위원회 권장연가일수 설정	'26.3월	
2/4분기	AI 역량교육 및 AI 업무활용 공모전	'26.2분기	
	독서통신 교육	'26.2분기	
	가족초청문화행사	'26.2분기	
3/4분기	AI 역량교육	'26.3분기	
	독서통신 교육	'26.3분기	
	'26년도 유연근무 및 연가사용 등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26.3분기	
4/4분기	폭력예방교육	'26.4분기	
	가족초청문화행사	'26.4분기	
매 월	간부급 직원 연가사용 현황·계획 조사	연중	
	위원회 전직원 유연근무 사용 실태 점검(복무점검)	연중	
분기별	시간외근무 실태 조사분석	연중	
수 시	공공구매 및 구매율 점검	연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노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복무·인사·시설 등 조직문화 및 근무환경 등에 대한 내부 직원 의견수렴 실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노사협력 간담회	내부 직원 애로사항 청취, 조직문화 등 논의	'26.7월
노사협력 간담회	내부 직원 애로사항 청취, 조직문화 등 논의	'26.11월

□ 기대효과

- 지속적인 국정철학 및 주요 정책교육을 지원으로 정책 대응 역량 강화 및 시대 변화에 맞춰 직원들의 AI 이해도 및 활용 능력 향상
- 연가 및 유연근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직원들이 가정에도 충실할 수 있도록 가정 친화적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

- 국가배려시책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제품판로 확대와 기술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장애인의 경제 자립을 지원
- 직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직장내 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하여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억 원)

		회계구분	'25	'26
방송통신행정지원(성과관리 비대상)				
① 방송통신운영지원(7131)	일반회계	0.56 (44.08)	0.56 (73.82)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302)		0.56	0.56	
② 본부기본경비(7111)	일반회계	0.54 (31.37)	0.54 (33.71)	
▪ 운영지원과(211)		0.54	0.5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AI 교육 이수율(%)	-	-	-	70 (신규)	성과지표로서 최초 시행임을 감안하여 초기 목표치를 70%로 설정	AI 교육 2시간 이상 이수자 수/현원 (국과장급 포함)	표준인사시스템 통계 자료	
1인당 평균 연가활용일수(일)	14.9	14.9	15.35	15.35	'25년 전직원 평균연가사용일수(15.35일) 및 전부처 평균 권장연가일수(15.3일)를 고려하여 보다 상향된 수치를 목표치로 설정	위원회 직원의 연가사용 일수의 평균 (연가사용 일수의 합/위원회 근무 직원 수)	표준인사시스템 통계 자료	
공공구매 법정 의무 구매기준 달성률(%)	80	100	100	100	분야별 공공조달 구매의 법적 의무 구매 기준을 달성하도록 목표 설정 - (A)중소기업제품 : 50% - (B)여성기업제품 : 5% - (C)장애인생산제품 : 1.1%	분야별 달성률의 평균 [(A)달성률+(B)달성률+(C)달성률]/3	디브레인,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꿈드래 사이트 등	
가족초청문화행사 만족도(점)	-	92.5	85	87	'24년 신규지표로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의 평균 점수 변동성을 감안하여 87.0점으로 목표치 설정 - 행사장소와 신규 프로그램의 발굴 및 참여 수요, 환경변화에 따라, 프로그램 보완으로 보다 체계적인 행사 계획을 추진하여 가족들의 행사 참여 만족도 개선 등 단계적인 목표치를 매년 상향할 수 있도록 추진	참여 직원 설문 조사(100점 척도)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개최 결과보고 문서 등	

⑤ 보안 및 적극행정 강화(IV-1-⑤)

□ 추진배경

- 국가 안보 및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송 시설에 대한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보안 감사 실시
- 생성형 AI, 랜섬웨어, SW 공급망 공격 등 최신 주요 보안위협을 고려, 변화하는 보안환경에 대응하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
- 현장 문제에 대응하여 기존 규제를 뛰어넘는 전문적·창의적 발상을 통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적극행정이 절실한 상황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 발굴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송시설에 대한 내실 있는 보안감사를 통해 보안 취약요인을 사전 발굴·차단하여 보안사고를 예방
- 사이버 침해 위협에 대비하여 취약점 점검 및 제거 등 보호대책 수립을 통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용기반 마련
-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발굴·전파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6년도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26.2월	
	2026년 방미통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26.3~4월	
2/4분기	2026년도 상반기 보안감사 실시	'26.3~4월	
	방미통위 적극행정 자체교육	'26.6월	

3/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자체 경진대회 개최	'26.8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	'26.9~10월	
4/4분기	2026년도 하반기 보안감사 실시	'26.10~11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26.11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추진실적 및 익년도 계획 보고	'26.12월	
수시	소극행정 및 적극행정 민원 처리	연중	
	복무사항 등 공직기강 점검	연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방미통위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구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적극행정위원회 회의 개최	'26.4, 8, 11월
의견수렴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우수사례 심사	'26.8월

□ 기대효과

- 대내외 위기상황을 고려한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보안점검 및 후속조치 이행 확인 등으로 방송시설 보안수준 강화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 보호계획 이행 점검을 통한 정보보호 수준 강화 및 보안인식 제고
- 현장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하는 부처주도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공직사회 실질적 변화 유도 및 국민 체감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억 원)

		회계구분	'25	'26
방송통신 행정지원(성과관리 비대상)				
① 방송통신 운영지원(7131)		일반회계	1.3	1.0
▪ 행정사무정보화(308)			(44.08)	(73.82)
			1.3	1.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보안점검 달성률(%)	100	100	100	100	목표대비 실적지표로 매년 100% 달성 필요 <'26년도 목표> -보안점검 기관수: 32개 -당해연도 보안점검 대상 기관 수: 13개 ※ 보암점검 대상 32개 기관의 점검 주기가 기관별로 상이함을 감안하여 26년도 목표치를 13개로 설정 * 32개기관 점검주기 기준 - 매년: 산하기관(2개), 지상파3사(3개) - 매2년: 지상파라디오(2개) - 매3년: 유관기관(17개), EBS(1개), DMB(1개), 지역MBC(16개), 종편(4개), 보도PP(2개)	(당해년도 실제 보안점검 기관수 /당해연도 보안 점검 대상 기관 수)×100	점검 결과보고서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 정보보호 수준율(%)	82.3	82.8	82.9	82.9	관리기관의 과거 실적추이 및 기관 실정을 검토하여 정보보호 수준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대치인 82.9%로 목표 설정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본인확인기관: 6개 * SKT, KT, LGU+, SCI평가정보, NICE평가정보, KCB - 위치정보사업자: 3개 * SKT, KT, LGU+	$AL(%) = (T/5) \times 100$ ※ AL: 수준율 T: 기반시설 전체 관리 기관 수준평가 점수 평균(5점 만점) * SKT, KT, LGU+, SCI평가정보, NICE평가정보, KCB	정보보호수준평가 방법론 해설서, 기관별 결과보고서 등
적극행정 활성화율(%)	100	75	50	80	과거 3년치 실적 평균(9명) 이상을 목표(10명)로 설정 ※ 연도별 실적 - '23년 12명 - '24년 9명 - '25년 6명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10명×100	적극행정위원회 실적 자료

(1) 주요 내용

□ 대국민·대언론 정책 소통 강화

- 언론의 원활한 취재를 지원하고, 국민들의 정책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홍보·소통활동 추진으로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을 효과적으로 확산
- 다양한 소통활동 전개로 주요 정책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적극적인 오보·왜곡 대응을 통해 정책 추진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

□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 정책을 국민의 일상 언어로 전달·확산하고, 주요 정책 이슈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적시 전달하는 등 능동적·선제적 디지털 홍보 체계 구축

□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 정부 간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기반을 구축하고 급변하는 방송·미디어·통신 통상 환경에 대응
 - 지역별 주요 국가와의 양자·다자간 고위급 면담 및 국제회의 참가 등을 통한 방송·미디어·통신 교류협력 활동 지원
-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체결 및 제작지원,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개최, 해외 우수 방송 공동제작 대상(大賞) 시상 등 추진
 - 해외 방송시장 및 미디어 이용행태 조사 분석 등 방송미디어콘텐츠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K-방송미디어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 남북 방송통신 교류 추진

- 방송미디어통신을 통해 남북간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민·관의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
- 통일에 대한 대국민 공감 확산 등을 위한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3	'24	'25	'26			
보도자료 온라인콘텐츠 제작률(%)	100	100	100	100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을 발표하는 보도자료 내용을 국민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로 구성해 제작하는 비율로, 정책의 적극적 확산을 위해 100% 목표치 설정	온라인콘텐츠 게재 건수/보도자료 배포 건수	방미통위 콘텐츠 게재실적 및 보도자료 배포실적
국제컨퍼런스·회의 등 국제행사 활동 건수(건)	3	3	3	2	국제 컨퍼런스 및 회의 등 국제행사 참여 실적	국제 컨퍼런스 및 회의 등 국제행사 참여 실적	내부자료, 보도자료 등 실적자료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콘텐츠 소비 환경이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정책정보 전달 범위 확대 및 효과적인 정책정보 확산을 위해 디지털 중심의 홍보전략 강화 필요
-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 디지털 무역장벽 등 새로운 통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공조체계 강화 필요
- 남북관계의 경색국면 지속 등 남북관계의 불확실성 증대

□ 갈등요인

- 지원보다는 규제에 집중된 위원회의 정책 특성상 정책 체감도가 낮고, 정책의 복잡화·다변화로 인해 쉽고 정확한 정책정보 전달에 애로사항 있음

- 급변하는 방송·미디어·통신 환경하에서 통상 협상 및 현안 대응을 위해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나, 부처 간 성과경쟁 사례가 다수 있음
-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은 남북 관계 및 한반도 주변 국제상황 등 대내·외 환경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임

□ 갈등관리계획

- 국민 관심사 기반의 정책 콘텐츠를 다양한 방식의 소통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형 콘텐츠 확대를 국민이 직접 정책홍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플랫폼별 최적화된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노출하고, 디지털 소통 접점 확대를 통해 정책 체감도 강화
- 한-터키, 몽골, 말레이시아 등 기존 공동제작협정 협상을 지속하는 한편, 신규 공동제작협정 협상 대상국을 발굴하여 적극적 협상을 통해 공동제작 활성화 및 대상국가 다변화 노력
 - ※ 현재, EU 27개국, EFTA 4개국, 개별 7개국(캄보디아, 싱가포르, 호주, 인도, 뉴질랜드, 베트남, 영국) 등 총 38개 국가와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체결 완료, '26년 상반기 캐나다와 정식 서명 체결 예정
-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산업통상부,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양자·다자간 통상협정 협상 및 통상현안 공동대응
-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남북 관계 등 대내·외 환경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바, 통일 관련 주무부처인 통일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스포츠, 문화 등 非정치적인 방송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제작 지원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대국민·대언론 정책 소통 강화(IV-2-①)

□ 추진배경

- 방송·미디어·통신 관련 정책을 신속·정확하게 확산시키고, 정책 수혜자인 국민의 이해도 및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대언론·대국민 소통 활성화 추진
- 민생·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정책성과는 부각하되, 오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잘못된 정보 확산의 방지 및 원활한 정책 추진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중점홍보 실시) 주요 정책 홍보아이템의 선제적 발굴, 정책홍보 일정의 수립·점검을 통해 위원회 전반의 홍보 로드맵을 지원하는 등 전략적인 기획 홍보 추진
- (대국민·대언론 소통 강화)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정책 브리핑, 방송출연, 간담회 등을 통해 언론의 원활한 취재를 지원하고 국민 소통 활성화 추진
- 정책의 중요도 및 관심도에 따라 효율적인 매체를 활용한 정부광고 실시, 글로벌 협력 분야에 대한 외신 취재 지원 등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 추진 기반 확보
- 정책현장 방문, 이해관계자 간담회 실시, 관계부처 간 또는 민관 협업형 현장행보 추진 등 민생 중심의 소통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주요 정책에 반영 및 환류

- (언론대응 체계 구축) 언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허위·왜곡 보도 발생 시 언론사 대상 설명·반박 자료 배포·언론 중재 등 조치를 통해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 추진
- (홍보역량 강화) 우수 온·오프라인 홍보사례 및 보도자료를 선정·포상하고, 전 직원 대상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 대응 관련 교육 실시
- 정책소통 실적의 주기적·체계적 점검을 통해 위원회 전반의 홍보 역량을 제고하여 정책홍보 효과를 극대화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6 정책 홍보계획(안) 수립	'26.3월	
1/2분기	홍보 역량 강화 교육 실시	'26.6월	
3/4분기	우수 보도자료·홍보사례 선정	'26.7월	
	정책소통 활동 중간 점검	'26.9월	
4/4분기	대국민 정책 만족도 조사	'26.12월	
	우수 보도자료·홍보사례 선정	'26.12월	
연중	기관장 언론홍보 추진	수시	
	보도자료 배포(영문 보도자료 포함) 및 브리핑 지원	수시	
	신문·방송·인터넷 등 언론모니터링	수시	
	주간 홍보계획 관리	수시	
	설명·반박자료 배포 등 오보 대응	수시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정책정보 전달자(대언론) 및 수자(대국민)를 대상으로 정책홍보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소통활동 관련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효과적인 홍보계획 마련

□ 기대효과

- 적극적·효과적인 소통 활동 전개로 주요 정책을 신속·정확하게 확산하고, 정책 수혜자인 국민의 이해도 및 체감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정책소통 활성화율(%)	-	100	100	100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취재 지원을 통한 언론 보도 활성화를 위해 오보대응과 주간 홍보계획 사전배포 100% 달성을 목표로 설정	(주간 홍보계획 사전배포 건수 / 52주) × 50% + (오보대응건수 / 오보모니터링 건수) × 50%	정책여론 수렴시스템 및 방미통위 홈페이지 (알림마당·일일브리핑 코너)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만족도(점)	78.8	76.22	75.95	79.7	최근 3년 만족도 결과의 평균(77.0) 보다 3.5%(2.7)을 상향하여 '25년 목표치(79.7)와 동일한 목표치로 설정	만족도 조사 결과 (대국민만족도 50%+대언론 만족도 50%)	방미통위 온라인 방문자·출입기자단 대상 설문조사

②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IV-2-②)

□ 추진배경

- 디지털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 및 국민참여형 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대국민 신뢰를 공고히 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SNS채널 운영 내실화 및 메시지 확산) 기관 및 기관장 SNS를 일상적 소통 채널로 활용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위원회' 이미지 정립
- (현장 중심 정책 소통 강화) 정책 결정 과정 실시간 생중계 및 관련 콘텐츠 확산을 통해 정책 투명성 제고와 국민과의 직접 소통 강화
- (참여·체감형 정책 홍보 및 브랜드 마케팅) 국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기관 대표 캐릭터 제작·활용으로 정책 공감대 및 기관 친밀도 확대
- (생활밀착형 콘텐츠 확산) 전문용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고 플랫폼별 맞춤형 콘텐츠 제작·확산으로 정책 체감도 제고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상반기	SNS 콘텐츠 제작 및 채널 관리 등 지원 대행사 선정	'26.2월	
	국민정책기자단 모집 및 발대식	'26.3월	
	국민참여 캐릭터 공모전 기획·추진	'26.3월	
	2026년도 디지털 소통계획 수립	'26.4월	
하반기	주요 정책 기획 캠페인 기획·추진	'26.9~12월	
연중	주요 정책 홍보 콘텐츠 제작	수시	
	기관 공식 사회관계망(SNS) 채널 운영·활성화	수시	
	기관장 사회관계망(SNS) 채널 운영·활성화	수시	
	기관 정책홍보 생중계 운영·진행	수시	
	국민참여 온라인 이벤트 활성화	수시	
	국민정책기자단 활용한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콘텐츠 제작	수시	
	대내외 협업 디지털 콘텐츠 제작	수시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정책 담당 부서, 사업수행기관, 국민정책기자단과의 정기적 소통을 통해 홍보 방향을 공유하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확산 추진

구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정책 담당 부서와 수시 소통을 통해 주요 정책 홍보 방향 및 메시지 협의	매월
	국민정책기자단과 월별 회의를 통해 취재 아이템 및 콘텐츠 제작 방향을 논의하고, 전월 SNS 콘텐츠 운영 결과를 공유하며 개선 의견 수렴	
	사업수행기관과 협의를 통해 주요 홍보 과제 관련 콘텐츠 제작 및 확산 계획을 공유	

□ 기대효과

- 위원회 주요 정책을 슷폼·카드뉴스 등 접근성 높은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확산하여 정책 이해도 제고 및 대국민 소통 강화
- 국민참여형 콘텐츠 제작을 통해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위원회에 대한 친밀도 및 신뢰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국민참여 콘텐츠 실적 (건)	147	180	206	210	국민정책기자단 인원 및 예산가용 등을 고려, 전년도 실적치에서 6건 상향하여 210건을 목표치 설정	국민정책기자단이 제작한 콘텐츠 또는 콘텐츠 기획에 참여한 건수	기자단 제출 콘텐츠 및 방미통위 SNS 게재 현황
유튜브 채널 활성화율(%)	155	111	165.4	109.3	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표 SNS 채널인 유튜브의 구독자수와 조회수를 기준으로 활성화 정도를 평가지표로 설정 - (목표구독자) 전년 실적 대비(39,391명) 15% 증가한 45,300명 설정 - (목표조회수) 과거 추세 및 예산감소를 감안하여 '25년도 실적 조회수(657만회)에서 30% 감소한 460만회 설정	[(구독자/목표구독자)×60%] + [(조회수/목표조회수)×40%] ※ '26.12.31 기준	유튜브 채널 내 구독자·조회수 현황 자료
인스타그램 채널 활성화율(%)	-	143	117.6	104.5	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표 SNS 채널인 인스타그램의 구독자수와 도달률을 기준으로 활성화 정도를 평가지표를 설정 - (목표구독자) 전년 실적대비(15,260명) 20% 증가한 18,312명 설정 - (목표도달수) 전년 실적대비(1,876,608회) 35% 감소한 1,212,000회 설정	[(구독자/목표구독자)×50%]+ [(도달수/목표도달수)×50%] ※ '26.12.31 기준	인스타그램 채널 내 구독자·도달수 현황 자료

※ 예산삭감을 고려하여 유튜브·인스타그램 조회수는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의 구독자 수는 제한된 자원 내 지속적인 성장 도모

③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IV-2-③)

□ 추진배경

- 방송통신 규제 관련 외국 정부,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적 현안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교류 협력 활동 지원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3조(방송통신 국제협력)
- 방송통신을 통해 남북 간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민·관의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2조(남북간 방송통신 교류협력)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
 - (국가 간 협력 기반 강화) 정책 수요에 기반한 해외 주요 방송통신 규제기관과의 고위급 면담을 통한 주요 정책 현황 공유 및 방송콘텐츠 해외 진출 확대 기반 마련
 - (국제기구 협력 강화) AIBD 등 방송통신 국제기구 주요 회의 참석 및 주요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 의견 개진, 공동행사 개최 등을 통해 협력체계 강화 및 국가 위상 제고
- 한류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 확대와 방송협력 강화를 위해 FTA에 근거한 국가(튀르키예·몽골·말레이시아 등)와 방송 공동제작협정 체결 추진 및 통상 협상 적극 대응
 - (공동제작 협정 제작지원) 공동제작협정 체결국가와의 방송콘텐츠 공동제작에 필요한 제작비를 지원하여 협정체결의 실효성 제고 및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촉진

-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개최) 방송콘텐츠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방송교류를 통한 미디어 환경 변화와 미래 사회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공유하기 위한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개최
- (방송공동제작협력강화) 방송콘텐츠 해외 진출 대상국의 시장현황, 규제체계, 공동제작 현황 및 콘텐츠 이용 행태,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국내방송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지원
- (방송통신 분야 통상대응 체계 구축) 통상협상 전략 및 통상현안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국내 방송사·제작사·유관기관·법조계·학계 의견수렴과 외교부·산업부·과기정통부·문체부 등 관계부처 협의 추진
- 통일의식 제고와 민족 동질성 회복,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추진
-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TV 프로그램을 통한 북한의 문화, 역사 등 비정치 분야의 통일 관련 프로그램 제작·방영 지원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방송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26.2월~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기본계획 협의	'26.2월~	
	해외 우수 방송 공동제작 대상(大賞) 심사 및 선정계획 협의	'26.3월~	
	방송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 방송사 선정	'26.3월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방송사 선정계획 마련	'26.3월	
	한-AIBD 공동워크숍 기본계획안 수립	'26.3월	
2/4분기	한-캐나다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체결	'26.4월	
	방송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 진행	'26.4월~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방송사 선정	'26.4월~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기본계획안 마련	'26.5월	
	2026 한-AIBD 공동워크숍 개최 및 AMS 참석	'26.5월	

3/4분기	해외 우수 방송 공동제작 대상(大賞) 공모	'26.6~7월	
	해외 우수 방송 공동제작 대상(大賞) 심사 및 수상작 선정	'26.7~9월	
	방송 공동제작 해외시장 설문조사 실시	'26.8~10월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개최 해외 우수 방송공동제작 대상(大賞) 시상	'26.9월	
	방송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 제작현장 실사 추진	'26.9월	
4/4분기	방송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 제작물 결과평가 실시	'26.12월	
	방송 공동제작 협력강화 정책만족도 조사 시행	'26.12월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방송 완료	'26.12월	
	방송 공동제작 해외시장 조사 보고서 결과보고	'26.12월	
연중	주요 국가와의 방송통신 정책 교류·협력 추진	연중	
	방송 공동제작협정 체결 추진	연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국·내외 방송통신 사업자 및 제작사, 해외 방송통신 관련 규제기관 등과 간담회 및 현장방문 실시

구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FTA 추진 관련 방송미디어 분야 의견수렴 회의	'26.1월
회의	AIBD 양자면담을 통한 한-AIBD간 협력강화 방안 논의 및 의견 수렴	'26.5월
현장방문	방송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	'26.9월
회의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방송사업자 제작현장 의견수렴	하반기
간담회	방송 콘텐츠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의견수렴	하반기

□ 기대효과

- 방송통신 규제 분야 정부 간 정책교류 및 주요 국제기구 논의 참여를 통해 글로벌 정책 동향 파악 및 국내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국제협력 기반 강화
- 방송 공동제작협정 체결 시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자국물 인정을 통한 수출 증대, 제작기술과 노하우 공유 및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방송관련 국제기구 및 정부 간 협력 강화 토대 마련, 방송콘텐츠 교류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 해외 우수 방송공동제작 프로그램 발굴(시상) 등 국제 방송 공동제작 인식 제고와 한류 확산 실행력 강화
- 해외 방송시장·규제현황·구매력 등 체감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하여 현장 활용도를 높임과 동시에 공동제작협정 협상 대응 및 방송사 등의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통상규범 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글로벌 통상질서 재정비에 기여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며 국정과제 실천 및 정부의 정책효과 극대화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법·제도와 국제통상규범 간 정합성 수시 검증을 통해 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내 법·제도의 법적 정당성 제고
- 방송통신을 통해 남북 간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에 대한 의식 제고 및 국제적 통일 공감대를 확산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억 원)

		회계구분	'25	'26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Ⅱ-1-일반재정⑤)				
① 방송통신 운영지원(3135)			16.26	14.45
			(67.12)	(64.99)
	▪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302)		16.26	14.45
	- 방송통신 국제협력 인프라 강화		2.54	2.54
	- 방송통신 국제기구 공동협력 사업	기금	0.9	0.9
	- 방송통신 분야 통상 대응체계 구축		2.7	2.7
	-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1.17	1.17
	- 방송공동제작 협력 강화		3.54	3.54
- 공동제작 협정 제작지원		3.6	3.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방송통신 국제협력 만족도(공통)(점)	74.8	76	76.9	77	대내외 환경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국제협력 업무의 특성상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우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25년 실적 이상의 목표치(77점)를 설정	[[방송통신 국제협력 인프라 강화 만족도] × 0.5 + [방송공동제작 협력 강화 만족도] × 0.5]	방송통신 국제협력 및 공동제작 관련 설문조사 결과
남북 방송통신 교류정책 만족도(공통)(점)	-	-	-	85 (신규)	5점척도 시청자 설문조사 기준 다소 만족(4점)이 80점 이상인 것을 감안하여 85점을 목표로 설정	통일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만족도	방송프로그램 시청자(청취자) 설문조사 결과

IV

환류 등 관련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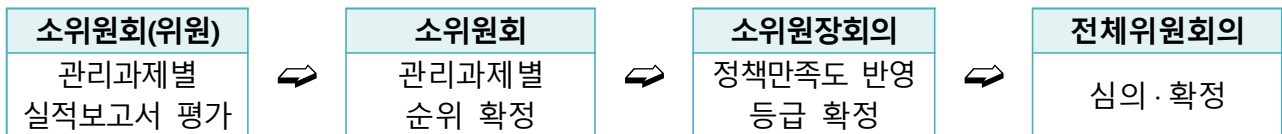
1. 이행상황 점검계획
2. 평가결과 환류체계

1. 이행상황 점검계획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방송·미디어·통신, 행정관리 분야별 전문가 9인으로 구성
-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로 운영하되, 소위원회는 관리과제 분야별로 구성
- 성과관리 시행계획, 자체평가계획 심의와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이행 상황 점검 및 자체평가 실시 결과 심의
- 성과관리에 관한 절차, 환류 등 성과관리의 전반적 사항을 자문

< 자체평가 절차 >



□ 평가지원조직 구성

- 효율적인 평가업무와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지원총괄팀과 자체평가위원회 분과별로 평가 활동을 지원하는 평가지원팀을 구성·운영
- 평가지원총괄팀(의안·정책관리팀)은 자체평가 주요계획을 수립·시행
 - 자체평가 기본방향, 분야별 평가계획, 평가보고서 작성방향, 평가 기준·방법·일정 등 세부 추진방향 수립
 - 평가분야별 점검결과 및 평가결과보고서 종합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전체·분과위원회 회의 운영 등 총괄
 - 정부업무평가 등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시행
 - 평가자와 피 평가부서 간 소통창구 역할

- 평가지원팀(각 국 총괄)은 각 소위별 정책소통 및 평가 실무 지원
 - 평가자료 수합·정리, 자료 제출 등 소위원회 평가활동 지원
 - 평가관련 제도 개선, 정책설명회 개최 수요제기 등 국별 의견 제출
 - 반기별 성과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등 자체점검 시 국별 추진실적 1차 확인·점검

□ 평가(점검)의 시행

- 상반기 세부과제별 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연 예상 과제는 원인분석과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 연간 추진실적 평가 시, 평가지원팀은 자체평가 계획에서 제시된 분야별 평가지표의 측정기준에 따라 각 소관별 추진실적 및 증빙 자료를 소위원회에 제출
 -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평가 후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및 심의·의결
- 자체평가결과 미흡과제는 원인 및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하여 향후 정책수립 시 반영하고 Plan-Do-Check-Action 사이클 확인·점검
 - 인력(업무량)·조직(구조) 차원의 종합적 심층진단 병행

< 이행상황 관리 점검 및 평가 체계 >



□ 주요일정

구분	주요 내용	일정
1분기	○ '26년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수립	'26.4월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심의·의결)	'26.4월
2분기	○ '26년도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계획 직원 설명회 개최	'26.5월
3분기	○ '26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상반기 이행계획 점검 및 국조실 제출	'26.7월
	○ '26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수정(필요시)	'26.8월
4분기	○ 성과관리시행계획 정책만족도 조사	'26.11월
	○ '26년도 자체평가 실시(자체평가 실적 설명회 개최 등)	'26.12월

2. 평가결과 환류체계

□ 성과관리의 환류

- 성과관리 관리과제별 자체평가(7등급 상대평가)를 실시, 과제별 개선 보완사항은 '2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정책개선에 활용
-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삭감을 검토, 성과가 미흡하지는 않으나 성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 증액을 지양
- 자체평가를 부서성과관리와 연계하여 관리하고, 성과급 평가시 활용하는 등 평가결과에 대한 보상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업무수행 유도

□ 정책개선 및 정책품질 제고에 활용

- 자체평가 수행과정에서 평가위원 등이 발굴 또는 제시한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여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
- 평가결과 우수·미흡사례 등은 각 국과 공유하여 성과관리 제고
 - 전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 이행여부, 개선효과 발생 등 환류 여부를 자체평가 시 반영

□ 조직 및 정원관리에 활용

- 효율적 조직 관리를 위해 전년도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소요정원 및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 평가결과와 직무분석을 통해 인력조정 및 재배치, 부서기능을 재조정하는 등 탄력적인 조직 운영
 - 특히, 미흡과제에 대해서는 종합 진단을 실시하여 조직운영에 활용

□ 예산편성에 활용

- 관리과제 평가결과는 차년도 예산 편성시 소관 부서의 재정사업에 반영하여 자체평가와 재정사업 간의 인센티브·패널티 체계 운영
- 관리과제 중 '우수' 평가를 받은 부서의 재정사업에 대하여 증액, '미흡' 평가를 받은 부서의 재정사업은 감액 검토

□ 승진·전보 등 인사운영에 활용

- 복수직 4급 이상 개인성과평가 결과, 5급 이하 근무성적평가결과를 인사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승진·인사·전보·파견 등에 활용
- 업무실적이 탁월한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주요보직 전보 및 외부 기관 파견 시 우선 배려
- 국내외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시 업무실적 우수 직원 우선권 부여

□ 성과급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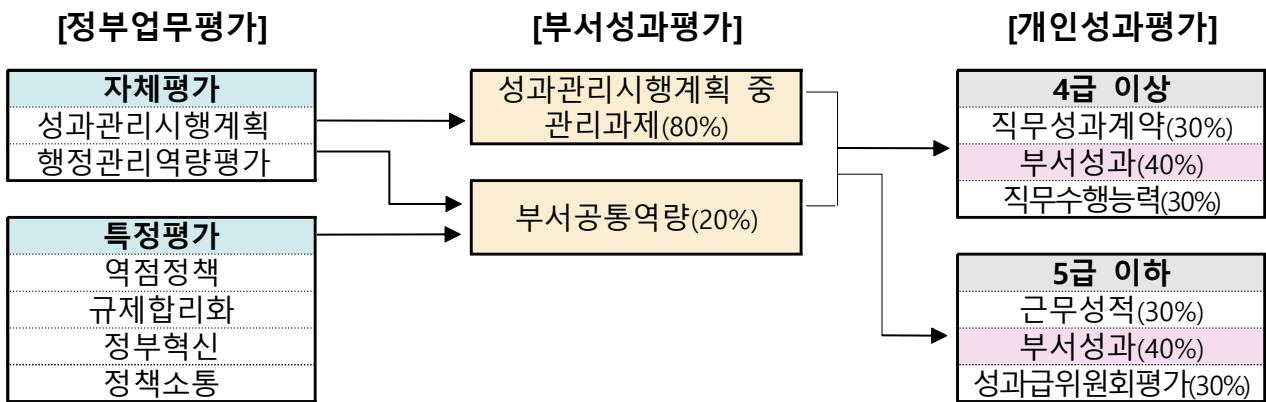
- 성과관리과제별 자체평가 결과를 개인성과에 반영하는 등 통합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 (4급 이상) 성과관리시행계획을 기준으로 체결한 '성과계약과제'에 대한 목표달성도(업무실적)와 직무수행능력, 부서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 (5급 이하) 근무성적평가, 부서성과평가, 성과급심사위원회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 부서성과평가에 자체평가결과와 국정과제 등 특정과제 수행실적을 반영

<성과급 지급 등급결정 평가항목>

구 분	대 상	등급결정 기준
성과연봉	4급 이상	○ 직무성과계약(30%), 부서성과평가(40%)* , 직무수행능력평가(30%) * 자체평가(80%)+ 행정관리평가(20%) → 자체평가의 개인평가 반영비율은 32% 수준
	5급(상당)	○ 근무실적평가(30%), 부서성과평가(40%)* , 보수성과심의위원회평가(30%) * 자체평가(80%)+ 행정관리평가(20%) → 자체평가의 개인평가 반영비율은 32% 수준
성과상여금	6급 이하	→ 자체평가의 개인평가 반영비율은 32% 수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성과관리 체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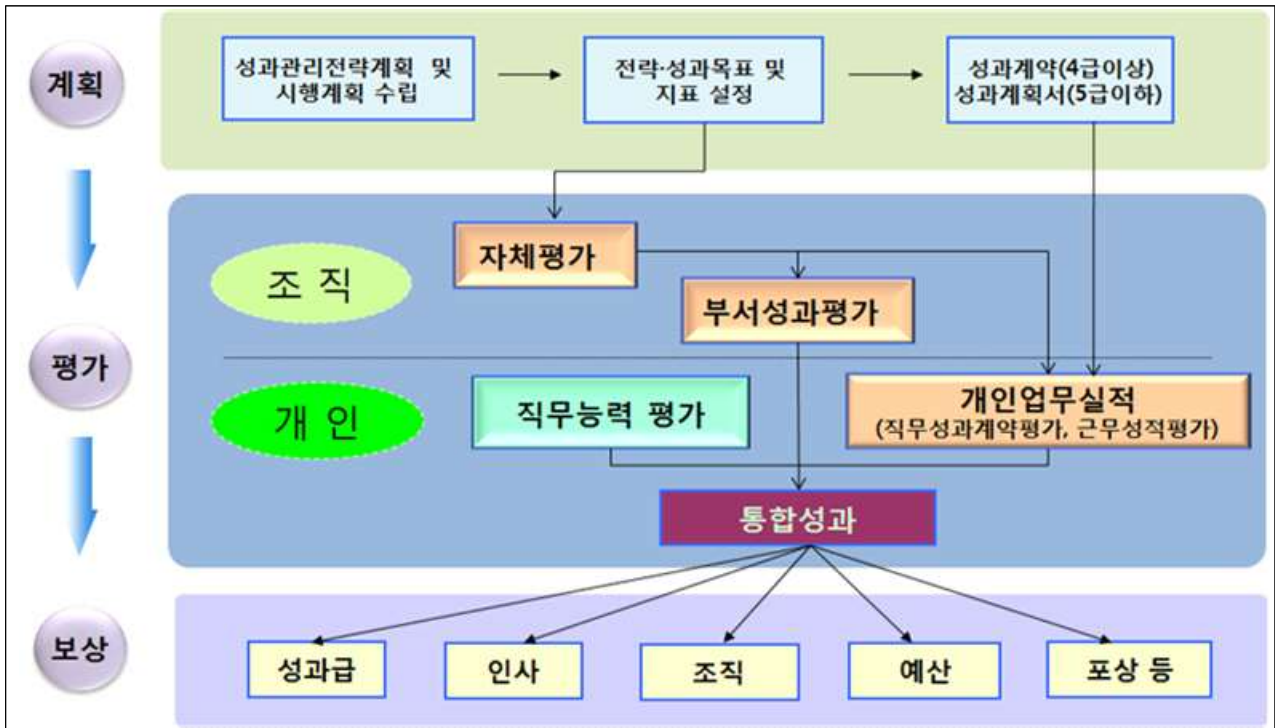


□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과제 포상

- '26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우수과제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과제수행 동기 부여
- 포상대상: 자체평가 결과 1등급~3등급 과제
- 포상규모: 1등급 80만 원, 2등급 50만 원, 3등급 30만 원
- 포상시기: '26년도 자체평가 실시 후('27.2월중)

※ 예산범위 내 지급

< 평가결과 환류체계도 >



1. 총괄현황

(단위: 개)

구분		성과지표					
		소계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전략목표	4	3	0 (0%)	0 (0%)	1 (33.3%)	2 (66.7%)	3 (100%)
성과목표	10	12	0 (0%)	0 (0%)	8 (66.7%)	4 (33.3%)	9 (75%)
관리과제	30	57	0 (0%)	1 (1.8%)	30 (52.6%)	26 (45.6%)	46 (80.7%)

2. 전략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전략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30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한다.	방송사업자 공정성 관련 제재 건수(건)	방송법에 따른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조항 위반*에 따른 제재 건수 + 방송 공정성 위반**에 따른 방송심의 제재 건수 * 방송법 제4조제2~6항, 제4조의2 ** 방송심의 규정 제9조(공정성), 제13조(대담·토론 프로그램 등)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14조(객관성)	15	정량	산출	
II. 성장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여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휴대전화·이메일 스팸 수신량(통)	휴대전화·이메일 이용자 각 1,500명 대상 1인당 월 평균 수신량 측정	10	정량	결과	
III.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방송사업자 방송사업 매출액 (조원)	과년도 지상파 방송·지상파 DMB·유선방송·위성방송 방송 채널사용사업자 등의 방송사업 매출액 합계	21.1	정량	결과	

3.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한다.						
I-1. 공정하고 투명한 (재)허가·승인 등으로 방송 본연의 책임을 강화한다.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률(%)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지상파 재허가 조건 이행 건수/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지상파 재허가 조건 수)×0.5]+[(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중편·보도PP 재승인 조건 이행 건수/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중편·보도PP 재승인 조건 수)×0.5]	96	정량	산출	
I-2. 방송 제도개선과 지원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	방송의 사회적 책임 제고율(%)	< ①+② > ①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만족도×0.5 ※ 7점 리커트 척도(만족도 목표치 81.1을 100점으로 환산) ② 재난방송 음영지역 기술 지원 타달수 목표 달성도×0.5 ※ '26년 목표: 190개	100	정량	산출	
I-3. 과감한 규제혁신 등을 통한 디지털·미디어 산업 성장 및 경쟁력을 강화한다.	방송산업육성 활성화 추진율(%)	< ① + ② > [①(유료방송 품질제고 추진율×0.5)] + [②(미디어·콘텐츠 경쟁력 강화 추진율×0.5)]	100	정성	결과	
II. 성장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여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II-1. 신기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편익을 증진한다.	통신분쟁조정 해결률 (당해연도, %)	[해결건수(조정전합의+조정안 수락+신청취하)/해결건수(조정전합의+조정안수락+신청취하)+미해결건수(조정안불 수락+합의가능성 없음)] × 100	81.4	정량	산출	
II-2. 국민 중심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한다.	디지털윤리교육 만족도(점)	디지털윤리교육 종료 후 만족도 조사	91.6	정성	결과	
II-3.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한다.	방송통신시장 불공정 행위 개선 건수(건)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을 통한 개선실적 ※ 실태점검(6건) + 제도개선(5건)	11	정량	결과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II.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III-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방송수신기 시각·청각장애인 전체 누적 보급률(%)	(전체 누적보급 대수/전체 시각·청각장애인 수)× 100	36	정량	산출	
III-2.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방송산업 발전 기반 구축도(점)	(①외주제작시장 환경개선 만족도+②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만족도)/2	83.5	정성	결과	
IV.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성적을 극대화한다.						
IV-1. 효율적인 방송미디어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주요 업무계획 이행상황 점검률(%)	(이행실적 점검 횟수/3회)×100	100	정량	산출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정비율(%)	폐지 또는 개선한 일몰규제 수 / 전체 일몰규제 수×100	27.7	정량	산출	
IV-2.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보도자료 온라인 콘텐츠 제작률(%)	온라인 콘텐츠 게재건수/보도자료 배포건수	100	정량	산출	
	국제 컨퍼런스·회의 등 국제 행사 활동 건수(건)	국제 컨퍼런스 및 회의 등 국제행사 참여 실적	2	정량	산출	

4.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한다.							
I-1. 공정하고 투명한 (재)허가·승인 등으로 방송 본연의 책임을 강화한다.							
	①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①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제고율(%)	[(재허가 세부계획 반영 건수/재허가 사전 기본 계획 수립시 세부계획으로 위임한 건수)×0.5]+[(지상파 재허가 조건 이행 건수/ 지상파 재허가 조건 수)×0.5]	98.7	정량	산출	
	② 종편·보도채널 등의 공정성·공익성 제고	① 종편·보도채널 등의 공적책무 제고율(%)	< ①+②+③ > ①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추진율(0.4) - (재승인 신청서 접수 보완 ×0.1)+(시청자의견청취 및 관계법령위반조치×0.1)+ (재승인 심사위 구성 운영 ×0.1)+(재승인 심의 의결0.1) ② 종편·보도PP 재승인 조건 이행점진 추진율(0.2) - (서면 현장점검×0.1)+(이행 점검 결과보고×0.1) ③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재승인조건 이행률(0.4)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종편보도PP 조건 이행 건수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재승인 조건 건수×0.4)	98.4	정량	산출	
I-2. 방송 제도개선과 지원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							
	① 융합 환경 대응을 위한 방송제도 기반 마련	① 미디어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율(%)	< ①+②+③ > ① 공영방송 지배구조 추진율(0.4) : (방송법 시행령 및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규칙 개정× 0.4)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규칙 제·개정 ×0.3) + (방송문화진흥회 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규칙 제· 개정×0.3) ② 공영방송 제도개선 추진율(0.4) : (정책연구 실시× 0.5) + (제도개선안 마련×0.5) ③ 미디어 법제 개편(안) 마련 추진율(0.2) : (정책연구 실시 × 0.3)+ (의견수렴 진행×0.3) + (법안 마련 × 0.4)	100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②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		① 시청자미디어 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7점 리커트 척도 (100점 만점 환산)	81.1	정성	결과	-
		② 미디어 역량 향상도(%)	{{교육 후 미디어 역량 점수 - 교육 전 미디어 역량 점수} /교육 전 미디어 역량 점수 ×100	7.6	정량	결과	-
③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		① 제작지원 프로그램 시청·청취자 만족도(점)	제작지원 프로그램 시청· 청취자 만족도를 정량화된 설문을 통해 계량 측정 (7점척도 설문을 백분율로 환산)	88.2	정성	결과	
		② 콘텐츠 마케팅 출품 프로그램수(개)	참가마켓 출품 프로그램 수	244	정량	산출	
		③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점)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를 정량화된 설문을 통해 계량 측정 (5점척도 설문을 백분율로 환산)	80	정성	결과	
④ 정확신속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① 재난콘텐츠 제작 달성률(%)	(제작편수/제작 목표편수) ×100 - '26년 목표: 110편	100	정량	결과	
		② 방송재난 대비 중요방송시설 안전점검율(%)	(26년도 안전점검 시설 수 /안전점검 대상 총 시설 수) ×100 - '26년 목표: 104개소	95	정량	산출	

I-3. 과감한 규제혁신 등을 통한 디지털·미디어 산업 성장 및 경쟁력을 강화한다.

① 디지털·미디어 산업 성장기반 조성	① 유료방송시장 규제 개선 추진율(%)	$\langle \text{①} + \text{②} \rangle$ [①(방송 법령·행정규칙 개정*, 가이드라인·지침 제·개정 실적 달성율 (실시건수/목표2건×100%) ×0.6) + ②의견수렴 실적 추진율(실시 건수/ 목표 4건×100%) ×0.4] * 법령은 개정안 마련 또는 입법추진(정부안 제출, 의 원입법)시 실적	100	정량	결과	
	② 홈쇼핑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확보 지원율(%)	$\langle \text{①} + \text{②} + \text{③} + \text{④} \rangle$ [①(홈쇼핑 재승인 심사 계획 수립·시행(2건)× 100%) ×0.3]+[②(중기상품 편성 (100개)×100%×0.2)]+[③ (중기상품 판매수수료율 (33%↓)×100%×0.2)]+[④ (홈쇼핑 주요 통계 공개 (1회)×100%)×0.3]	100	정량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② 유료방송 상생성장 경쟁력 강화 및 이용자 권익 제고		① 유료방송사 상생협력 추진율(%)	< ① + ② + ③ + ④ > [① 실무협의(횟수/3회) ×100%×0.2]+ [② 고위급참석협의(횟수 /2회)×100%×0.2]+ [③ 전문가의견수렴 (횟수/5 회)×100%×0.2]+ [④ 협력방안·제도개선안 마련 (1건)×100%×0.4]	100	정량	결과	
		② 이용자 권익 제고 추진율(%)	{(유료방송 정책 제도개선안) 마련건수} / (목표건수)×100%	100	정량	결과	
		③ 유료방송 품질제고 추진율(%)	< ① + ② + ③ > [①(영상 및 음량 품질 기준 충족 사업자수/전체 유료방송사업자수(18개사) ×100%×0.4]+ [②(의견수렴 실적 건수/ 의견수렴 목표 건수)× 100%×0.3]+ [③(홍보 실적 도달 수 / 홍보 목표 도달 수) ×100%×0.3]	100	정량	결과	
③ 미디어·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AI·디지털 기반 미디어 신기술 육성		① 미디어·콘텐츠 경쟁력 강화 추진율(%)	< ① + ② > [①방송·OTT 콘텐츠 제작 시 AI·디지털 기술 투입비율 (실적)/20%이상(목표) ×100%×0.7] [②콘텐츠 전략펀드 자펀드 조성(실적)/1건이상(목표) ×100%×0.3]	100	정량	결과	
		② 미디어 신기술 활성화 지원율(%)	< ① + ② + ③ > [①미디어 R&D 신규과제 지원(실적)/8개(목표) ×100%×0.4] [②미디어R&D성과교류 (실적)/2건(목표)×100%×0.3] [③융합인재 교육(실적) /576명(목표)×100%×0.3]	100	정량	결과	
		③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육성 지원율(%)	< ① + ② > [①해외진출 지원(실적) /40건(목표)×100%×0.5] [②인력양성(실적)/85팀 (목표)×100%×0.5]	100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I. 성장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여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II-1. 신기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편익을 증진한다.							
	①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보호 강화	① 온라인 이용자보호 관련 정책개선 건수(건)	정책개선 건수를 결과물로 실적 산정	3	정량	결과	
	② 통신분쟁조정 신속성 및 피해구제 지원강화	①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당 실적(점) [건수+만족도]	전년목표 대비 10% 상향 피해 상담 건수 기준, 당해 실적 5점 척도 산출 점수 x 60% + 상담 만족도 5점 척도 산출점수 x 40%	3.10	정량	산출	
	③ 인공지능 등 신기술 서비스 이용자 보호	①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활성화율(%)	[(위험성 신고 내용 검증 건수/ 위험성신고 건수)×0.5+ [(정보제공건수/목표 정보 제공건수(40건))× 0.5	82	정량	산출	
		② 안전한 메타버스 이용환경 조성 지원(%)	사업자 운영 정책 모범·개선사례 발굴 건수/목표건수(2)×0.4+분쟁조정 체계 모범·개선사례 발굴 건수/목표건수(2)×0.4 + 사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 건수/목표건수(1)×0.2	100	정량	산출	
II-2. 국민 중심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한다.							
	① 통신서비스 이용자 기반 조성 및 위치정보의 안전성·활용 강화	① 통신서비스 피해예방교육 역량 향상률(%)	[(계층별 교육후 역량 점수-교육전 역량 점수)/교육전 역량점수]×100	20.2	정성	결과	
		② 위치정보 사업화 지원 만족도(점)	(신규 BM 발굴 사업화 지원 만족도×0.5)+(맞춤형 컨설팅 만족도×0.5)	92	정성	결과	
	②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구축	① 특수유형부가 통신사업자 불법정보 기술적 조치 개선율(%)	[(상시점검 등을 통한 기술적 조치 개선(차단) 건수/목표)×0.5]×100+[(불법음란정보 특징값(해시, DNA) 방심위 제공건수/목표)×0.5]×100	100	정량	결과	
		②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기술 성능평가 수행률(%)	[수행건수/신청건수×0.5]×100+[평가기술 고도화 건수×0.5]×100	99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I-3.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한다.							
① 방송통신시장 규제 정비 및 조사 효율화 추진		① 방송통신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규제정비 및 조사 효율화 추진율(%)	< ① + ② > ① 규제 정비 추진율(0.5) - (규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0.1)+(규제 정비·개선안 마련(2건)×0.4) ② 조사 효율화 추진율(0.5) - (규제 동향 분석×0.2) + (조사관 교육×0.1) + (신유형 조사추진×0.2)	100	정량	산출	
②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및 불공정 행위 근절		① 통신시장 공정경쟁 활성화 지수(점)	<(①×0.4)+(②×0.3)+(③×0.3)> ① [(이동전화 시장 공정경쟁 준수율 × 0.5)] + [(유선 시장 공정경쟁 준수율 × 0.25)] [(유무선 결합시장 공정경쟁 준수율 × 0.25)] ※ 준수율: 공정경쟁 준수 건수 / 모니터링 총 건수 ② 유무선 통신시장 제도개선 건수: 4건 ③ 통신시장 금지행위 실태 점검 및 사실조사: 4건	91.8	정량	산출	
③ 부가통신시장 이용자 권익 증진		① 부가통신시장 이용자 권익 증진 지수(점)	< ① + ② > ① 부가통신서비스 금지행위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목표 건수 달성률(0.4): 4건 ② 부가통신시장 모니터링 준수율(0.6) - (인터넷플랫폼 동향분석 × 0.2) + (모바일 앱 결제 가이드라인 준수율 × 0.2) + (온라인 불편광고 위반사항 개선률 × 0.2)	85	정량	산출	
④ 방송시장 공정경쟁 촉진		① 방송 및 방송광고 시장 불공정 행위 개선 인식도(공통)(점)	리커트 5점 척도(0점에서 100점까지 구간별 25점씩 상향)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71	정량	산출	
		② 유료방송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개선 제고율(%)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개최)× 0.5 + (모니터링을 통한 유료방송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분석 건수)× 0.5	100	정량	산출	
III.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III-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① 건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환경 조성		①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방송대상 사업 만족도(점)	[사업필요성*0.5]+[사업 만족도*0.5] (100점 환산)	65	정성	결과	
② 방송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확대		① 장애인방송 편성분량(시간)	장애인방송 필수지정 방송 사업자 전체의 장애인방송 편성분량	718,000	정량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II-2.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① 외주제작시장 환경개선 만족도(점)	외주제작 정책만족도 조사 1차-2차 평균 * 5점 척도 평균을 100점 만점 환산	86	정성	결과									
								②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	① 중소기업 소상공인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만족도(점)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원 사업 전반적 만족도×0.5)+ (소상공인의 지원사업 전반적 만족도×0.5)	81	정성	결과	
IV.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IV-1. 효율적인 방송미디어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① 원활한 정책 수행 및 정부혁신 선도	① 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률(%)	(점검횟수/4) ×100	100	정량	산출									
	② 혁신과제 이행률(%)	(이행과제수/ 전체과제 수)×100	100	정량	산출									
② 행정데이터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① 데이터 분석·정책 활용 실적(점)	실적과제 수/목표과제 수 ×10	10	정량	산출									
	②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	(현행화 테이블 수/메타 관리시스템 등록 테이 블 수)×100 * 행안부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메타데이터 현행화를 지표 1등급 * 행안부 1등급 기준 : 90% 이상	90	정량	산출									
	③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이행 수준(점)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결과 중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이행 수준지표 92점 이상 달성 * 25년 중앙행정 기관 평균점수 : 89점	92	정량	결과									
	④ 비상대비 및 국가중요시설 방호점검 달성률(%)	[[(자원조사실사업체/자원 조사대상업체)×0.5]+(방호 점검 기관수/방호점검 목표 기관수)×0.5]]×100	100	정량	산출									
③ 규제혁신 지속적 추진	① 규제혁신 제도개선 추진율(%)	① + ② ① 규제심사절차 준수율(%) × 0.5 = (심사절차 준수 건수 / 총 심사건수) × 0.5 ② 기존 규제정비이행률(%) × 0.5 = (기존규제정비 이행과제수 / 기존규제정비 과제수) × 0.5	96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④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	① AI 교육 이수율(%)	AI 교육 2시간 이상 이수자 수/현원 (국과장급 포함)	70	정량	산출	
		② 1인당 평균 연가활용일수(일)	위원회 직원의 연가사용 일수의 평균(연가사용 일수의 합/위원회 근무 직원 수)	15.35	정량	산출	
		③ 공공구매 법정 의무 구매기준 달성률(%)	분야별 달성률의 평균 [(A)달성률+(B)달성률+(C)달성률]/3]	100	정량	산출	
		④ 가족초청문화행사 만족도(점)	참여 직원 설문조사(100점 척도)	87	정량	산출	
	⑤ 보안 및 적극행정 강화	① 보안점검 달성률(%)	(당해년도 실제 보안점검 기관수/당해년도 보안 점검 대상 기관 수)×100	100	정량	산출	
		②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 정보보호 수준율(%)	AL(%)=(T/5)×100 * AL: 수준율 T: 기반시설 전체 관내 평균 수준평가 점수 평균(5점 만점) * SKT, KT, LG+, SO평가정보, NICE평가 정보, KCB	82.9	정량	산출	
		③ 적극행정 활성화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10명×100	80	정량	산출	
	IV-2.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① 대국민·대인론 정책소통 강화	① 정책소통 활성화율(%)	(주간 홍보계획 사전배포 건수/52주)×50%+(오보대응 건수/오보모니터링건수)×50%	100	정량	산출		
	② 대국민·대인론 정책소통 만족도(점)	만족도 조사 결과(대국민 만족도 50%+대인론 만족도 50%)	79.7	정성	결과		
②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① 국민참여 콘텐츠 실적(건)	국민 정책기자단이 제작한 콘텐츠 또는 콘텐츠 기획에 참여한 건수	210	정량	산출		
	② 유튜브 채널 활성화율(%)	[(구독자/목표구독자)×60%]+[(조회수/목표 조회수)×40%] ※ '26.12.31. 기준	109.3	정량	결과		
	③ 인스타그램 채널 활성화율(%)	[(구독자/목표구독자)×50%]+[(도달수/목표 도달수)×50%] ※ '26.12.31. 기준	104.5	정량	결과		
③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① 방송통신 국제협력 만족도(공통)(점)	[(방송통신 인프라 강화 만족도)×0.5+(방송공동제작 협력 강화 만족도×0.5)]	77	정성	결과		
	② 남북 방송통신 교류정책 만족도(공통)(점)	통일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만족도	85	정성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I.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한다.		
1. 공정하고 투명한 (재)허가·승인 등으로 방송 본연의 책임을 강화한다.		
①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방송미디어의 공공성 및 자율성 회복과 방송심의의 독립성 제고(국정 7-1) 미디어 법제도 정비 및 성장기반 마련(국정 108-1)
② 종편·보도채널 등의 공정성·공익성 제고		방송미디어의 공공성 및 자율성 회복과 방송심의의 독립성 제고(국정 7-1) 미디어 법제도 정비 및 성장기반 마련(국정 108-1)
2. 방송 제도개선과 지원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		
① 융합 환경 대응을 위한 방송제도 기반 마련		방송미디어의 공공성 및 자율성 회복과 방송심의의 독립성 제고(국정 7-1) 미디어 법제도 정비 및 성장기반 마련(국정 108-1)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업무 2-5)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 안착 및 방송심의 책임성 강화(업무 3-1)
②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시청자 권익 제고(국정 7-3) 미디어 접근권 보장(업무 3-2)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강화(업무 3-3)
③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		지역·중소방송 지원 체계 구축(국정 7-4) 지역미디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업무 2-3)
④ 정확·신속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시청자 권익 제고(국정 7-3) 신속하고 차별 없는 재난정보 제공(업무 1-5)
3. 과감한 규제혁신 등을 통한 디지털·미디어 산업 성장 및 경쟁력을 강화한다.		
① 디지털·미디어 산업 성장기반 조성		미디어 법제도 정비 및 성장기반 마련(국정 108-1, 108-3)
② 유료방송 상생성장파 경쟁력 강화 및 이용자 권익 제고		디지털·미디어 상생성장 지원(국정 108-3)
③ 미디어·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AI·디지털 기반 미디어 신기술 육성		디지털·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국정 108-2, 108-3)
II. 성장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여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1. 신기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편익을 증진한다.		
①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보호 강화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국정 108-4)
② 통신분쟁조정 신속성 및 피해구제 지원강화		신속한 분쟁 조정 및 불공정 개선(업무 3-4)
③ 인공지능 등 신기술 서비스 이용자 보호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국정 108-4)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2. 국민 중심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한다.		
	① 통신서비스 이용자 기반 조성 및 위치정보의 안전성·활용 강화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시청자 권익 제고(국정 7-3) 디지털·미디어 상생성장 지원(국정 108-3)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국정 108-4)
	②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구축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미디어 환경 조성(국정 7-2)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국정 108-4)
3.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한다.		
	① 방송통신시장 규제 정비 및 조사 효율화 추진	디지털 이용자의 권리 보장(국정 108-5)
	②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및 불공정 행위 근절	디지털 이용자의 권리 보장(국정 108-5)
	③ 부가통신시장 이용자 권익 증진	디지털 이용자의 권리 보장(국정 108-5)
	④ 방송시장 공정경쟁 촉진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시청자 권익 제고(국정 7-3) 디지털·미디어 상생성장 지원(국정 108-3)
Ⅲ.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① 건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환경 조성	
	②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시청자 권익 제고(국정 7-3)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강화(업무 3-2)
2.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미디어 법제도 정비 및 성장기반 마련(국정 108-1) 디지털·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국정 108-2) 디지털·미디어 상생성장 지원(국정 108-3) 방송미디어 규제 개선(업무 2-1) 디지털·미디어 산업 활성화(업무 2-4)
	②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	미디어 법제도 정비 및 성장기반 마련(국정 108-1) 디지털·미디어 상생성장 지원(국정 108-3) 방송미디어 규제 개선(업무 2-1) 디지털·미디어 산업 활성화(업무 2-4)
Ⅳ.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1.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① 원활한 정책 수행 및 정부혁신 선도	
	② 행정데이터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③ 규제혁신 지속적 추진	
2.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① 대국민·대인론 정책소통 강화	
	②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③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